

월 · 간

재정포럼

Monthly Public Finance Forum

10

현안분석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조세 및 예산개혁의 방향
- 1999년 국세행정개혁의 성과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특집 · 2007년 예산(안)

- 주요내용 및 평가

기고

- 제3차 OECD 국세청장회의의 성과와 의미

기획

- 2006년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에드먼드 펠프스 교수

정책흐름

- 2007년 예산(안) 주요내용

CONTENTS

MONTHLY PUBLIC FINANCE FORUM

권두칼럼	02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재정정책 과제 · 구정모
현안분석	06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조세 및 예산개혁의 방향 · 김승래
	24 1999년 국세행정개혁의 성과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 박명호
특집 · 2007년 예산(안)	43 2007년 예산(안)의 주요내용 · 노형욱
	48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평가(Ⅰ) · 임주영
	52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평가(Ⅱ) · 박형수
기고	56 제3차 OECD 국제청장회의의 성과와 의미 · 이승재
기획	64 2006년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에드먼드 펠프스 교수 · 민희철
해외동향	68 OECD의 『Revenue Statistics』(2006년판) 발간
최신 조세 · 재정 해외동향	74 주택경기 침체 美 GDP 1% 낮출 것 외
정책흐름	83 2007년 예산(안) 주요내용
	98 2007년 국세 세입예산(안)
재정통계	104 OECD 국가의 1인당 조세부담금
이런의견 저런생각	108 경제 위기관리 절실하다 외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재정정책 과제



구정모
강원대 경제무역학부 교수

북한의 핵실험 강행이 가져오는 파장은 정치·외교·안보뿐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 및 재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가계소비와 기업투자 심리가 불안해지면서 내년도 경제에 적신호가 켜졌다. 당장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잇따라 하향 조정되고 있다. 정부는 내년도에 4.6%의 경제성장을 전망하고 있지만 민간연구소들은 3%대, 상황에 따라서는 그 이하의 성장률 저하를 우려하고 있다.

이미 민간경제연구소를 비롯해 경제계 및 정치권에서는 급격한 경기 침체에 대비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정부에서도 향후 경기를 조심스럽게 관찰하여, 경기중립적인 내년도 경제정책을 필요하면 경기부양 쪽으로 정책기조를 바꿀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정부의 경제정책이 부양 쪽으로 선회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정책수단은 크게 공공건설 투자 확대 같은 재정정책과 금리인하 같은 통화정책, 규제완화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가운데 정부가 가장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은 역시 재정확대를 통한 부양책이다. 내년도 예산안을 수정·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 재정을 조기집행하거나 추경을 편성하는 방안 등이 사용될 수 있다.

이번 사태로 인해 경기위축이 가시화된다면 정부의 적극적 역할은 어느 정도 필요할 수도 있다. 만약 수요가 급격히 위축될 경우 정부가 안전판 역할을 하여야 하고 경제심리 안정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지도 모른다. 더구나 내년은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재정이 급격히 팽창할 개연성이 있다.

사실 그동안 경기가 침체를 면하지 못하고 있을 때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을 지양하며 경기중립적인 정책기조를 유지하여 왔던 정부의 의지는 상당한 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최근의 경제상황에서 재정지출 확대 위주의 부양책으로 일관한다면 그 정책효과도 의문시될 뿐 아니라 재정 건전성은 일시에 무너지게 된다.

지금의 상황은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내년도 전망도 낙관적일 수 없으며 북핵문제까지 겹쳐 설상가상이다. 또한 성장잠재력도 둔화되고 경제 양극화의 골은 여전히 깊어만 가고 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경기부양, 성장동력 확충, 사회안전망 구축, 국가균형 발전 등에 재정지출은 확대될 수밖에 없으며, 향후 남북협력, 고령화·저출산에도 대비해야 한다. 즉, 정부로서는 할 일이 너무 많고 씹씹이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경기침체로 세수는 줄어들고 나라살림



복지의 확대는 성장잠재력의 확충에 우선순위를 두는 가운데 추진해야 한다.
 이는 우리 경제가 성장을 할 때 소득분배의 형평성이 훨씬 높았다는 사실에서도
 입증된 부분이다. 또한 우리 경제와 같이 개방화된 경제에서는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책은 경기조절기능으로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은 빠듯해지고만 있는 형편이다.

사실 이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풀려고 하니 재정운
 용의 방향타가 혼란스러워지고 논란이 불거지는 모습
 이다. 어떻게 보면 문제 해결은 간단하다. 복잡한 문
 제일수록 해결은 단순하게 푸는 것이다. 그리고 일에는
 순서가 있는 법이다. 경제주체가 각기 제몫을 다하
 면 된다는 공자의 ‘본분론(本分論)’이 생각나게 되는
 대목이다.

현재 국회에 상정된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6.4% 늘어난 238조 5천억원으로 편성되었다. 내년도
 예산안의 특징은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과 국민의 기
 본적 수요 충족, 즉 성장과 복지의 동반 성장에 맞춰
 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존 복지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불형평성과 비효율성을 근본적으로 고
 치고, ‘복지도 투자’라는 개념을 통해 경제성장에 대
 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눈에 두드러지는 점은 복지와 국방예산의
 증가율이 10% 내외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반면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한 투자, 즉 성장동력을 키우는 예산
 은 내년에도 뒷전에 밀려 산업 및 중소기업 예산은 거
 의 동결수준에 머물고 있다. 또한 적자국채 8조 7천억
 원을 발행하게 되면 1998년부터 10년째 연속 빚을 내

어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 것이고 국가채무는 예상수
 준을 넘어 빠르게 증가하게 되어 적지 않은 논란이 예
 상되고 있다.

이는 정부의 씬씀이가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세수
 감소로 빚을 내 사회복지 확대뿐만 아니라 재정의 경
 기조절기능까지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애
 기다. 하지만 그 실효성은 의문시된다. 복지의 확대
 는 성장잠재력의 확충에 우선순위를 두는 가운데 추
 진해야 한다. 이는 우리 경제가 성장을 할 때 소득분
 배의 형평성이 훨씬 높았다는 사실에서도 입증된 부
 분이다.

또한 우리 경제와 같이 개방화된 경제에서는 재정
 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책은 경기조절기능으로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성장잠재력의 확충이
 전제되지 않을 때의 경기부양에는 상당히 신중할 필
 요가 있다. 사실 5년 전 9·11 테러 이후 경기부양책
 인 추경편성을 통한 ‘내수진작종합대책’과 일본의 경
 험은 그 사례로 지적될 수 있다.

1990년대 들어 장기불황에 허덕여 온 일본은 막대
 한 재정을 경기부양에 투입하고서도 효과를 얻지 못
 했으며 눈덩이 같은 재정적자 및 국가채무의 누적으
 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은 너무도 잘 알려

.....

정부는 정부대로 시장은 시장대로 각기 본분에 맞게 역할을 감당해야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성장도 하고 재정의 역할도 제 자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

져 있다. 즉, 일본의 경우 성장동력이 확충되던 1980년대의 재정정책은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했지만, 성장잠재력이 저하되던 1990년대의 재정정책은 불황을 극복하기는커녕 빚만 잔뜩 쌓이게 한 원흉이 되고 말았다.

현재 성장잠재력이 떨어지는 가운데 사회복지지출을 늘리고 경기부양을 위한 적자재정을 편성해야 하는 우리 재정의 현실에 비추어 시사하는 바 크다 할 수 있다. 복지도 성장도 모두 중요하다. 재정적자도 해소하고 국가채무도 줄여야 한다. 복핵문제로 내년 경제가 급랭한다면 대책도 마련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별로 없고 성장잠재력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정책의 우선순위를 놓고 정부 및 여야 간에 국민 간에 확실히 합의해야 한다.

최근 들어 정부는 너무 많은 것을 하려 한다. 그것도 한꺼번에 그리고 단시간에. 아무리 급하더라도 숨을 고를 필요가 있다. 정부는 정부대로 시장은 시장대로 각기 본분에 맞게 역할을 감당해야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성장도 하고 재정의 역할도 제 자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 시점에서 '본분론'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KIPF**

현안분석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조세 및 예산개혁의 방향

김승래 ·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 1999년 국세행정개혁의 성과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박명호 ·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편집자 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조세 및 예산개혁의 방향



김승래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srkim@kipf.re.kr)

1.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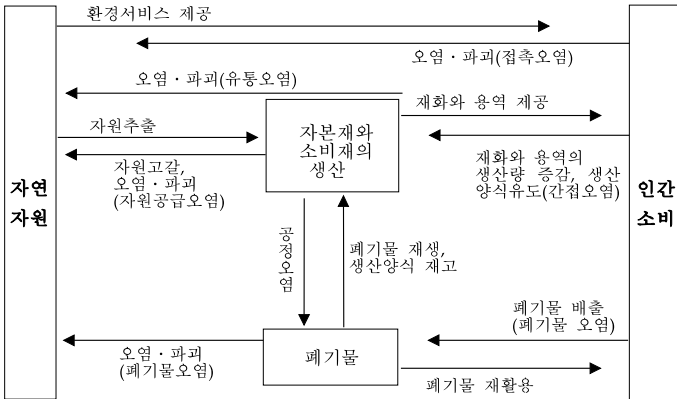
본고에서는 21세기 경제발전의 핵심적 패러다임으로서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을 위한 우리나라의 현 위치를 점검해 보고, 향후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발전전략으로서 조세 및 재정정책의 중장기적 방향 설정에 대하여 고찰한다.

먼저 '지속가능발전'이란 인구 증가와 경제성장 속에 파생되는 전 지구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자연과 공존하면서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자 하는 의지에서 비롯된 개념이다¹⁾. 이러한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다소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으나, 경제성장과 환경보전, 그리고 사회통합이라는 크게 3가지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궁극적으로 인류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통합구도하에서 환경, 경제, 사회 정책간의 상충관계(trade-off)의 해결은 모두 중요하나 UN, OECD 등 국제사회에서는 우선적으로 환경이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적 토대라는 데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도 1996년 '의제21'을 국가실천계획으로 수립하여 UN에 제출하였고, 2000년 9월 설치된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PCSD)'가 UN의 '의제21'의 국가실천계획 이행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보완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다. 최근의 참여정부는 세계가 이미 2002년 '요하네스버그선언'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당면과제로 재확인하고, 또한 2005년 2월 드디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적 교토의정서가 발효됨에 따라 21세기 국가적 중점과제로서 지속가능한 국가발전 전략 수립 및 실천방안의 마련을 위한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고 있다²⁾. 특히

1) 1987년 UN에 의해 구성된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의 '우리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라는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지속가능발전'이란 미래세대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능력의 손실 없이, 현대대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개발이다'라고 사용되었다. 특히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열린 UN환경개발회의(UNCED)에서는 이러한 '지속가능발전'을 구현할 실천적 노력으로 지구환경보전 전략수립을 위한 'UN지속개발위원회(UNCSD)를 설치하기로 결정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리우선언 원칙의 이행을 위한 21세기 지구환경보전 실천 강령인 의제 21(agenta 21)을 채택하였다.

[그림 1] 생산과 소비가 자연의 지속가능성에 주는 메커니즘



자료: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2005), 「국가지속가능발전 전략 연구」, p. 145.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은 현재와 미래세대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면서 인류의 통합후생을 극대화하는 발전으로 파악되고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최근 대통령의 ‘국가 지속가능발전 비전’의 담화에서 제시되었듯이 경제, 사회, 환경이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선진국가로 가고 향후 우리의 국가경쟁력을 한 차원 더 높여나가기 위해 우리 사회가 지금부터라도 미래를 준비해야 하고, 이를 위하여 정부 각 부처의 모든 정책에 있어 지속가능한 사회로 발전해 나가기 위한 방향에서 구체적인 이행정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 일정 및 계획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UN·OECD 등 국제기구에 의한 최근의 연구들은, 이러한 지속가능발전은 현재세대와 미래세대의 복지에 대한 가치비교, 기술진보를 감안한 각종 인적·물적자원의 활용정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이 결정되고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은 현재와 미래세대 간의 형평성(intergenerational equity)을 고려하면서 인류의 통합후생을 극대화하는 발전으로 파악되고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류의 현재와 미래의 필요와 후생을 위한 기본요소로서 ① 기후변화와 자연자원 고갈문제라는 ‘자연자본(natural capital)’의 동태적 관리와 ② 기계·장비 등 실물자본과 지식·기술·사회제도 등 무형자본을 포함하는 ‘인공자본(man-made capital)’의 동태적 축적과정에서, 이러한 광의의 두 가지 자본형태(자연 및 인공자본) 사이의 상충관계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적절한 정책수단의 개발이 요구된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Ⅱ장에서 21세기 지속가능발전의 기본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인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의 조화에 초점을 맞추어 신성장이론에 기반한 ‘지속가능발전 조세·재정 정책 모형’을 구축하고, 제Ⅲ장에서는 이를 통한 이

2) 여기서 국가적 발전 전략으로서 ‘지속가능’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어떠한 구체적 현상 문제에 대한 대응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미래에 대한 준비적·사전예방적 성격이 강하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혹은 '녹색성장'을 위한 각국 정부 차원의 바람직한 정책대안 마련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론적·실증적 분석을 통하여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정책적 조건 및 방향에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모색한다. 마지막으로 제IV장은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에 대하여 알아본다.

II. 「지속가능발전 조세·재정정책 모형」

최근 전 세계적으로 경제성장에 따른 인구집중과 급속한 산업화로 환경용량 압력이 심각하게 증대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혹은 '녹색성장' (green growth, GG)³⁾을 위한 각국 정부 차원의 바람직한 정책대안 마련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 중에서 특히 "조세·재정정책 측면에서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환경친화적 방향의 세계개혁과 관련예산 비중 강화는 경제구조의 환경친화적·에너지절약적 소비패턴 및 산업구조로 이행해나가는 가장 대표적인 경제적 유인 (economic incentives) 수단이다.

이에 본절에서는 먼저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이른바 '윈-윈 전략 (win-win strategies)' 으로서 어떻게 적절한 수준의 환경친화적 조세 및 예산개혁 (green tax and budget reform; GTBR) 방안이 마련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이론적·개념적으로 살펴본다.

먼저 경제와 환경은 서로 충돌한다는 통상적인 인식은 전통적인 '신고전파 성장모형 (neoclassical growth model)' 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러한 모형에서는 생산기술의 규모에 대한 수확불변의 가정하에 환경보호에 대한 투자는 경제성장을 위한 자원 낭비를 유발하여 환경의 질과 경제성장은 필연적으로 상충관계에 있다는 단순한 전제를 하고 있다. 즉, 오염관리를 위한 경제적 자원배분은 생산을 위축시키며 소비와 자본축적의 동태적 균형수준을 낮추게 된다. 그러나 장기적 경제성장은 기술수준이나 인구의 단순한 외생적 (exogenous) 증가에만 의존한 것이 아니다. 1990년대 들어 새로이 등장한 '내생적 성장모형 (endogenous growth model)' 은 경제성장이 인적자본, R&D, 지식 및 기술의 내생적 축적에 의존하는 과정을 포괄하는 "내생적" 성장요인에 주목하여 장기적인 경제의 균형성장 과정을 개발하였고, 최근에는 환경문제를 이러한 내생적 경제성장모형에 포함하여 분석하는 시도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표 1〉 참조)⁴⁾.

3) 본 연구에서는 '지속가능발전' 과 '녹색성장' 을 서로 같은 개념으로 사용한다. 구체적으로 '녹색성장' 이란 환경시스템의 기능 및 이에 따른 인류의 복지와 삶의 질에 대한 기여를 유지하면서 실질 GDP 성장에 있어서의 지속성을 의미한다.

4) 이러한 환경을 포함하는 최신 내생적 성장모형은 Lucas(1988)의 인적자본 성장모형에 환경을 추가한 Bovenberg and Smulders(1995)의 단순모형에서 본격화되었고, 최근 Hettich(1998), Fullerton and Kim(2006) 등은 이러한 모형에 명시적인(explicit) 조세 및 재정수단의 흐름과 역할을 포함시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적정 정책을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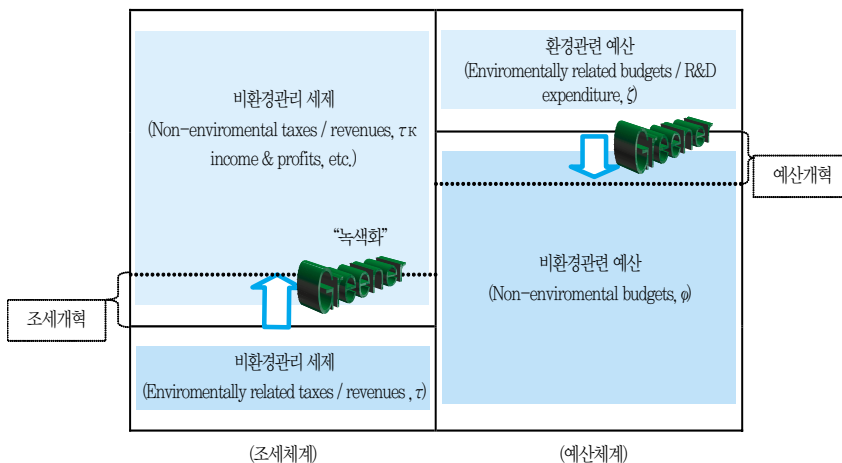
〈표 1〉 경제성장과 환경에 관한 최근 문헌

환경을 고려한 외생적 성장모형 (Ramsey-style)	환경을 고려한 내생적 신성장모형 (Romer, Lucas, Barro, Rebelo-style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Jorgenson and Wilcoxon (1990), Xepapadeas (1993), Tahvonen and Kuuluvainen (1993), Nordhaus (1994), Goulder (1995), Nordhaus and Boyer (2000) 등. - 기술진보는 외생적 - 적정 오염통제는 저감비용 (abatement cost)을 증가시켜 경제성장에 항상 부정적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radus and Smulders(1993), Van der Ploeg et al. (1993), Van Ewijk and Van Wijnbergen (1995), Bovenberg and Smulders (1995, 1996), Elbasha and Roe (1996), Stokey (1996), Bovenberg and de Mooij (1997), Hettich (1998), Kim et al. (2004), Fullerton and Kim (2006) 등. - 기술진보는 “추가적인” 내생변수 (생산요소)이며 기술이나 지식에 대한 투자로 축적 - 경제성장과 환경보전 간에는 장기적으로 긍정적 관계 가능

일반적으로 상충관계로 인식되고 있는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이라는 두 가지의 목표를 과연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느냐, 그리고 언제 · 어떠한 방식으로 가능한가?”는 지속가능발전을 담당하는 정책입안자에게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상충관계로 인식되고 있는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이라는 두 가지의 목표를 과연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느냐, 그리고 언제 · 어떠한 방식으로 가능한가?”는 지속가능발전을 담당하는 정책입안자에게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다. 먼저 다음의 그림 2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조세 및 예산체계의 개혁을 어떠한 방향에서 설정해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2] 조세 및 예산체계의 녹색화 개념





이러한 방향에서의 정책개혁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국민경제의 소비패턴과 산업생산구조를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형태로 유도해 나가는, 보다 근본적인 조세 및 예산개혁의 유인수단에 관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① 신규 환경관련조세(environmentally related taxes) 도입 ② 환경유해 보조금 및 조세지원 폐지 ③ 기존의 비환경관련 일반조세(non-environmental taxes)의 환경관련 조세로의 대체라는 조세체계 내의 환경관련세제 비중 강화, 그리고 ④ 정부지출구조 내 환경관련 예산증가와 같은 지출측면에서의 비중 강화라는 4가지의 기본요소로 구성되며, 흔히 이는 기존 ‘조세·예산체계의 녹색화(greening the tax and budget system)’를 의미한다.

여기서 환경세 또는 환경관련조세는 최근 OECD나 EU에서 정의하고 있는 “광의의” 환경세의 범주로서 환경에 직·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과세단위나 그 대리변수에 대한 세금들을 의미하고, 이는 직접적 환경오염 품목과 행위, 오염자부담원칙 관련 환경재원조달을 위한 각종 부담금 및 경제적 유인수단, 그리고 에너지, 자동차, 폐기물 등 환경유해 제품 관련세제 등을 포괄한다. 또한 OECD 등에서 자주 논의되는 바와 같이 근본적 조세 및 예산개혁으로서의 “녹색화” 정책수단은 단순히 환경보호만을 위한 도구로서가 아니라 관련 세수의 효과적 재활용(tax recycling)을 통한 경제전반의 효율성 제고도 동시에 고려하는 ‘이중배당(double dividend)’ 효과의 추구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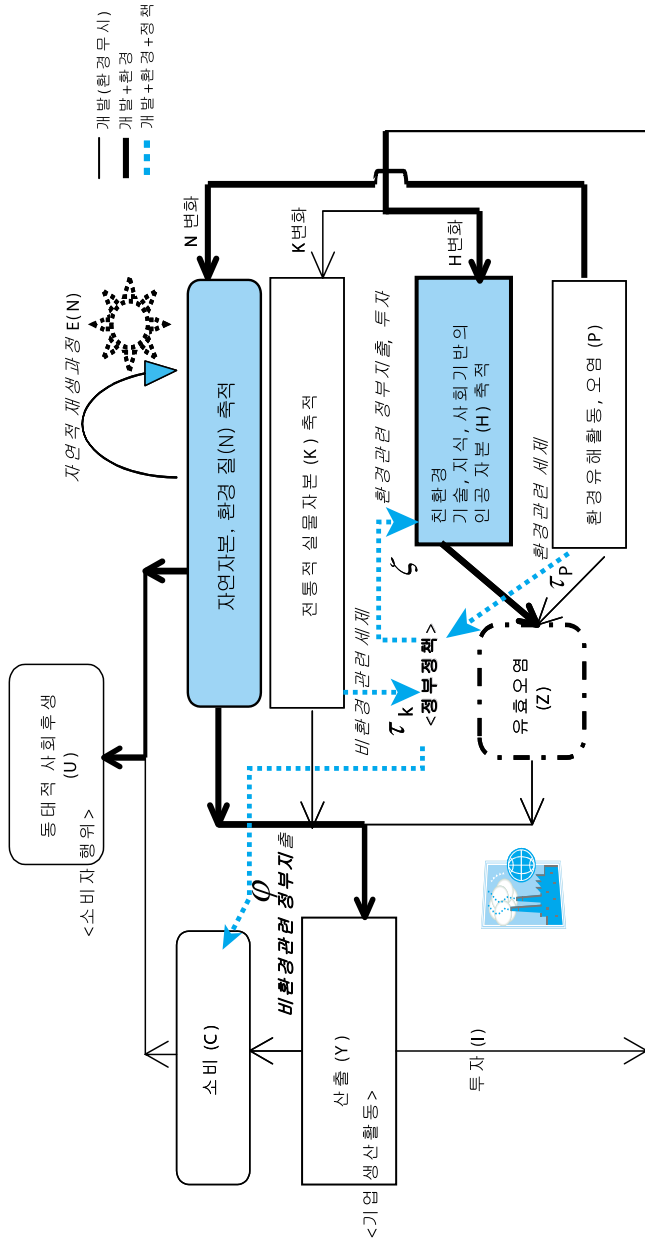
한편,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부정책의 방향을 환경을 포함한 최신 성장이론(new growth theory)의 틀에서 살펴보면 [그림 3]과 같은데, 이는 경제와 환경의 통합과 조화에 의한 균형성장의 달성을 위한 정부의 적정 조세 및 예산정책의 기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 모형은 전통적 경제성장모형에서는 무시된 환경·자연자본이 생산의 투입요소로서 그리고 최종소비재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적정과세와 동시에 지속가능발전의 주요 장애요소인 자연자원부존 및 환경용량의 제약에 대응한 방향에서의 R&D 및 지식자본 축적, 사회인프라 구축 등 각종 친환경 인공자본의 “내생적인” 축적을 통하여 사회의 환경유해활동에 의한 자연자본 훼손을 적정수준 이내로 유지시켜 주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통합 자연-인간행위 체계(coupled natural-human system)’의 틀 내에서, 정부는 [그림 2]에서 제시된 각종 ‘녹색화’ 유인수단을 가지고 친환경관련 기술 및 지식 투자를 통한 사회자본 축적의 긍정적 외부성을 늘리고 동시에 각종 반환경 행위(pollution)의 부정적 외부성을 줄이기 위한 정책개입을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에서 적정화할 수 있다⁶⁾. 이를 통하여 정부는 사회적으로 유해한 자원낭비 행위(오염수준) 억제와 친환경관련 투자 및 기술개발 촉진을 통하여 환경을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적정 균형성장 경로로 현단계 실물경제의 이행(transition)을 유도할 수 있게 된다.

5) 이러한 환경친화적 조세 및 예산체계에 대한 기본 아이디어는 이미 북유럽국가를 비롯한 많은 OECD 국가들이 도입하였거나 적극도입을 모색 중이다. 이들 국가에서는 환경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경제성장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정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탄소세 도입, 오염자 부담원칙의 확대 적용, 환경친화적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각종 세제상 인센티브제도 도입 등 환경친화적 조세관련 정부정책으로의 개혁을 시도하고, 동시에 이를 통한 소득세제 등 기존 조세제도의 비효율 완화도 지속적 경제발전 촉진의 핵심적 정책대안으로 주목하고 있다. 또한 UN이나 OECD 등 국제기구도 우선적으로, 환경적으로 유해한 각종 보조금이나 면제조항을 점진적으로 철폐하고 환경세 신설을 기존 조세시스템 개편과 적극 연계할 것을 회원국에 권고하고 있다.

6)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정책은 이러한 외부성을 경제 내로 내부화(internalize)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그림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조세·예산개혁의 흐름도 (환경-경제-정책 통합 내생적 성장모형)



주: '기'는 실선은 기존의 전통적 성장모형에서 자연자본(환경, N) 및 친환경 인공자본(A)의 내생적 축적과정에 의해 따른 경제내 영향 및 환류효과를 무시하는 동태적 흐름을 보여주며 이러한 구조 내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의 달성이 완전적으로 불가능하다. 반면 '굵은 실선'에 의한 자연자본(N)의 효율적 관리와 친환경 인공자본(A)의 축적 축진을 위한 경제내 자원배분 및 투자행위를, '점선'으로 표현된 환경 및 비환경 관련 세제 및 예산지출 구조의 적정 개혁(reform)이라는 정부의 정책개입을 통하여 달성되는 흐름을 보여 주고 있다. (보다 자세한 논의는 Fullerton and Kim(2006)이나 <표 1>의 환경을 고려한 기타 내생적 성장모형을 참조.)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조세 및 예산개혁 방향

우리는 제Ⅱ장에서 기존의 전통적 모형과는 달리 최신의 내생적 성장이론에 의거하여 경제발전과 환경보전의 조화를 위한 지속가능발전 모형을 이론적으로 살펴보았다. 모형의 주요 특징은 정부의 조세·재정정책을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으로 유도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를 위한 적정의 정부정책 수준은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즉, 전통적 성장모형에서는 “환경친화적 조세 및 예산정책(green tax & budget reform; GTBR)”의 강화가 경제성장을 항상 저해하는 반면에, 본 연구의 통합된 ‘환경-경제-정책’ 체계 내에서는 GTBR정책 강화에 따라 ‘경제성장효과(growth effect)’와 ‘사회후생증진효과(welfare effect)’가 동태적인 균형상태에서 다음 [그림 4]와 같이 역U자형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점에 근거한다. 이러한 역 U자형 곡선들은 x축에 표현된 GTBR정책 강화가 어느 특정 수준(즉, 성장극대화점 $\tau(g^{max})$)까지는 경제성장과 사회후생을 동시에 모두 증대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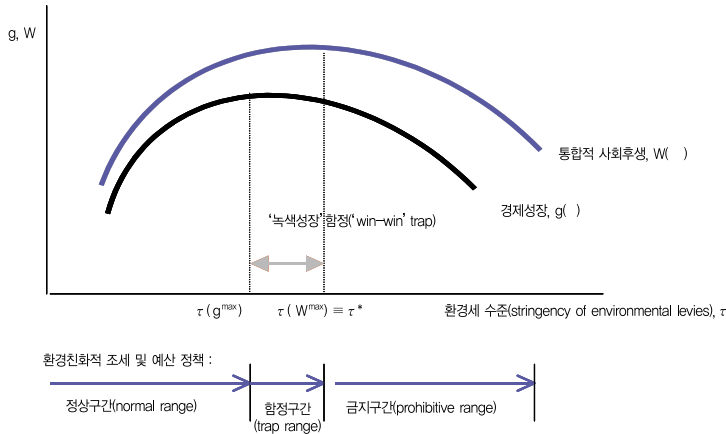
GTBR정책의 강화에 따른 성장효과 함수와 후생효과 함수의 구체적 위치와 형태는 국가별 경제여건 및 특성, 기존 경제정책의 효율성 등과 관련된 여러 가지 매개변수 크기와 조건에 의존하게 되는데, 여기서 [그림 4]에서 나타난 성장극대화점과 후생극대화점 $\tau(W^{max})$ 의 간격을 나타내는 ‘함정구간(trap range)’의 크기는 특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러한 구간 내에서는 사회후생을 증진시키려는 GTBR정책 강화가 오히려 경제성장을 저해하게 되는 부정적 효과를 유발하여 환경개선과 경제성장의 동시추진이라는 ‘윈-윈 결과(win-win outcome)’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윈-윈 함정(win-win trap)’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소들은 현행 경제의 각종 특성들(생산기술구조, 소비자 선호패턴, 자원부존, 기존 경제정책의 효율성 특성 등)로서 국가별로 크게 다른 경우가 많아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정책 방향 및 전략 수립에 있어 이러한 점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⁸⁾.

한편,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노력의 현 주소를 살펴보면, 최근 ‘대통령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립으로 경제적 유인수단으로서 환경친화적 정책개편에의 관심이 한층 커지고는 있으나, 아직까지는 이를 위하여 일관성 있게 추진할 중장기 세계 및 예산개혁 방안의 기본방향과 비전의 마련이 부족하다. 또한 정부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는 개별 방안의 세부적 실천전략들 간의 유기적 연계와 그 진전에 대한 사후관리체계도 매우 빈약한 실정이다. 여기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성과관리는 전 세계적으로도 21세기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주요한 실천적 과제로서 UN(의제21 제40장)과 OECD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의 지표(SDI)의 개발과 범세계적 사용을 촉진하도록 규정

7) 반면에 이러한 효과는 인적자본, 지식자본 등 내생적인 기술변화의 축적 과정을 무시하고 환경적 외부성을 고려하지 않는 전통적인 단순성장모형에서는 기대하기 힘들다(즉 $\partial g/\partial \tau < 0, \forall \tau$).

8)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서 최근의 Fullerton and Kim(2006) 모형의 이론적 분석결과에 따르면 적정한 정부의 개입에 의하여 환경·발전을 둘 다 얻는 ‘지속가능발전’(혹은 ‘녹색성장’)의 가능성은 국가별로 여러 가지 파라미터 특성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 중에서 특히 현행 경제구조의 자원이용관련 ‘환경 효율성(eco-efficiency)’과 기존의 비환경관련 ‘조세체계 왜곡도(degree of prior tax distortions)’에 크게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이용하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부정책의 적정한 수준과 장기적 효과는 국가별로 그 주요 결정요인에 대한 구체적 실증자료의 분석을 통하여 파악될 수 있다.

[그림 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최적의 조세·예산정책



자료: Fullerton and Kim (2006), p. 21.

함에 따라, 현재 UNCSO, OECD, EU, 미국, 영국 등에서 실험적으로 몇몇 지표를 개발하여 가동중이나 아직까지는 단편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어 진정한 의미에서 국제적으로 이용가능한 일반지표는 아직 전무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⁹⁾.

이처럼 국가별로 지속가능발전의 가능성을 측정하고 그 성과에 대한 국제비교를 위한 체계적인 논리개발이 아직 요원하며 이를 지원하는 일관된 기초통계자료의 개발이 미약한 실정에서, 먼저 제II장의 통합 '환경-경제-정책' 모형의 구도 하에서 '지속가능발전' (혹은 '녹색성장') 가능성을 평가하는 지표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현 위치를 점검하여 보았다. 다음의 <표 2>는 [그림 4]의 경제성장함수와 사회후생함수에서 도출되는 현재시점에서 평가한 미래의 환경·발전을 둘 다 얻는 향후 '지속가능발전' 가능성을 30개의 OECD국가별로 국제비교를 한 것이다. 여기서 비교된 지표는 '녹색성장가능성(win-win potential)'에 관한 것으로, 이러한 가능성이 내생적 성장모형에서는 현행 경제구조의 '환경효율성'에 비례하고 비환경관련조세에 의한 '조세체계 왜곡도'에 반비례하는 이론적 성질을 이용하여 근사한 것이다¹⁰⁾. 이를 이용하면 우리는 각 국가별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GTBR정책 방안 마련의 긴급도와 정책 추진강도에 대한 중요한 정보 및 시사점을 제공받을 수 있다.

분석결과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OECD 30여개 국가들 중에서 지속가능발전 가능성이 현재 평균 이하(18번째)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 지수(5.74)가 OECD 평균치(7.02)보다 낮게 나온 이유는 지수산출시 사용된 두 가지 요소 중에서 특히 분자요소인 경제의 '환경효율성' 세부지수가 1.25로 OECD국가 평균치와

9) 최근 세계경제포럼(WEF) 후원으로 미국 예일대/컬럼비아 대학에서 실험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환경지속성지수(ES)나 환경성과지수(EPI)는 국제비교치를 산정하고는 있으나, 단순히 환경부문 자체에만 국한되고 있어 진정한 환경-경제의 통합에 관련한 지속가능발전의 국제적 비교 지표로서의 의미는 전무하다. 특히 국가별로도 자료가 달라 체계적인 지표개발에 어려움이 있고, 더욱이 성과지표와 정책분석이 체계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세부 지표간 통합과 연계, 종합지수화는 현실적으로 더욱 곤란한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통계작성이 없는 자료의 경우 추정치를 사용하고 주관기관의 의도에 따라 인위적 변수조정이 가능하고, 개별국가 제공자료가 아닌 국제기관이나 대학발표에 단순히 의존하는 등 통계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에도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10) 여기서 이용한 지속가능발전 가능성의 평가지수는 Kim, S.-R.(2005)에서 제시된 '녹색성장 가능성 지수'(green-growth potential indicator, GGPI)로서 기본적으로 현재시점에서 평가한 GTBR에 의하여 향후 장기적 녹색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 잠재가능성을 계량화한 것이다. 이 지수는 [그림 4]의 성장 vs. 통합사회후생 극대화를 위한 정책강도의 수준 격차인 '윈-윈 함정(win-win trap)' 크기의 역수로서 정의되며, 이것은 현행 경제의 '환경효율성'에 비례하고 '조세체계왜곡도'에 반비례한다 (또한 각주 8 참조). 그리고 이 수치가 작을수록 '윈-윈 함정(win-win trap)'에 빠질 확률이 낮게 된다.



비교할 때 크게 미달하여 발생한 것으로, 우리의 산업생산구조와 국민소비패턴이 아직도 에너지비효율적이며 환경친화적이지 않다는 데 크게 기인한다¹¹⁾. 반면에 스위스(21.25)나 일본(16.64)의 경우는, 노르웨이(12.97) 등 북유럽국가, 영국(8.70) 그리고 미국(7.16) 등과 비교하여서도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을 조화시킬 가능성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위국가들은 기존 조세체계의 왜곡 정도 대비 경제구조의 환경 효율성이 한국에 비해 서너 배나 되는데 그 이유는 자원절약적·환경친화적 생산 및 소비패턴이 경제 내에 이미 크게 자리잡고 있다는 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국가들은 대체로 GTBR정책의 시행 경험에 있어서 이미 선구적인 국가들로서, 환경과 경제의 조화를 위한 각종 구체적인 정책 프로그램이 꾸준히 진행중이라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현 위치에 대한 이러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향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부정책의 기본방향으로서 다음과 같은 환경친화적 조세 및 예산개혁의 방향 설정과 관련정책 강화가 기타 선진국과 대비하여 볼 때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방향에서 정부정책의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1) 기존의 환경적으로 유해한 각종 보조금, 특정부문 가격지원이나 면제조항의 점진적 철폐 (2) 환경세 신설을 현행 조세시스템의 단순화 및 전반적 개혁과 적극 연계 (3) 노동, 자본 및 기타 비환경관련 소비세 부과대상(개인소득세, 자본과세, 사회보장부담금, 또는 각종 비효율적 특소세)으로부터 환경친화관련 세원(각종 친환경상품세 신설, 탄소세 등)으로의 점진적 조세부담이동(tax burden shift)을 통한 기존 조세시스템의 비효율성 완화¹²⁾ (4) 정부예산편성에 있어 국제적 환경규제에 적극 대응한 환경친화적 산업생산구조로의 개편 및 각종 환경기술/산업 관련 투자(청정생산기술, 신재생에너지, 수소에너지·저공해자동차 등) 촉진을 위한 조세·예산지출 강화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존 정책구조의 '녹색화' 노력이 필요하다.

다음의 <표 3>은 이러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주요 환경친화적 조세 및 재정정책적 수단을 정리한 것으로 우리나라는 이러한 방향에서의 환경관련 각종 조세 및 예산체계의 효율적인 정비와 강화를, 보다 근본적인 중장기 조세·예산시스템 개혁 방안과 적극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¹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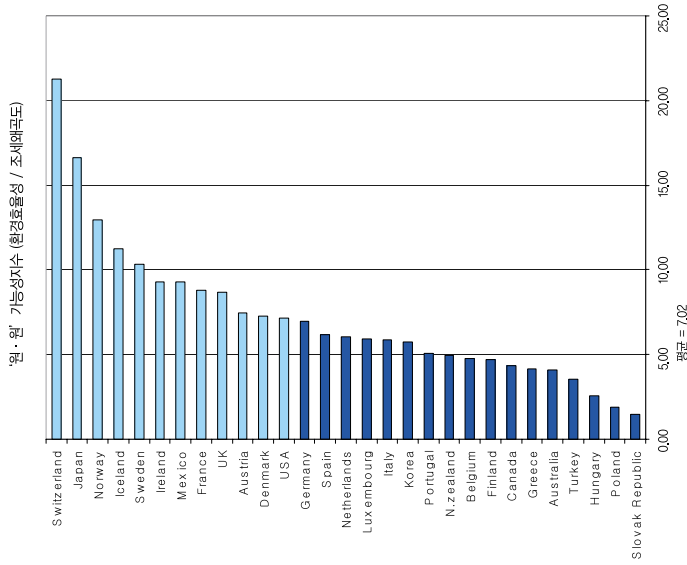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현행 환경 및 에너지 관련 조세·예산체계의 근본적 문제점을 살펴보면 환경오염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시장의 상대가격구조 내에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아직까지 에너지소비절약이나 환경부하 경감보다는 물가안정이나 산업지원, 지역균형발전 지원, 교통부문 지원 등을 위해 조세체계가 복잡하게 운영되는 다양한 목적세제 운영방식에 의해 본연의 조세관련 재정정책 목표간 상충현상이 심화되고 지속가능발전을 향한 중장기적 정책 효율성 및 일관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강하다.

11) 구체적으로 '환경효율성'은 환경오염 1단위의 배출당 창출할 수 있는 실질 국내총생산(GDP) 규모로 측정할 수 있는데, 이것은 가령 생산이 오염이 적은 신재생에너지나 수소에너지 같은 청정에너지소비구조로의 전환이나 생산의 에너지효율성 자체를 모두 증가시킴으로서 향상될 수 있다.

12) 환경관련 유인제도('공의의' 환경세제)의 도입은 환경관련조세의 신규 도입이라는 적극적인 세제개혁 방식과 기존 유인체계의 수정 및 보완이라는 소극적 방식이 모두 가능하다. 최근 북유럽을 위시한 주요 EU 선진국들의 사례는 이 중에서 적극적 방식으로서, 노동 및 자본 관련 소득세제 중심의 조세체계는 근로의욕나 투자행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경제전반에 걸친 조세왜곡을 심화시켜 경제전반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반면, 환경친화적인 조세는 부정적 외부효과의 내부화를 통하여 조세시스템의 왜곡을 완화시킨다는 논리에 근거하고 있다.

〈표 2〉 OECD 국가별 지속가능발전(녹색성장) 가능성 지수의 국제비교: 기후변화와 경제성장

환경효율성	기준 조세체계 예과도 ^{a)}	원·원 가능성 지수 ^{b)}	순위
Canada	1,4086	4.33	(23)
Mexico	16030	9.27	(7)
USA	17689	7.16	(12)
Japan	39282	16.64	(2)
Korea	1,2573	5.74	(18)
Australia	1,2114	4.09	(25)
Nuzeland	16888	3.330	(20)
Austria	2,9894	7.45	(10)
Belgium	2,0540	4.310	(21)
Czech Republic	0,5043	3.480	(30)
Dunmark	3,1888	4.4360	(11)
Finland	1,9762	4.4180	(22)
France	3,6387	8.83	(8)
Germany	2,2970	3.3200	(13)
Greece	1,3700	4.13	(24)
Hungary	0,9127	3.3890	(27)
Iceland	4,2000	3.730	(4)
Ireland	2,5429	2.730	(6)
Italy	2,5395	9.31	(17)
Luembour	2,2867	0.4310	(16)
Netherlands	2,1242	3.840	(15)
Norway	5,2545	0.3510	(3)
Poland	0,6028	4.0950	(29)
Portugal	1,7254	3.320	(19)
Slovak Republic	0,5789	3.420	(28)
Spain	2,0376	2.00	(14)
Sweden	4,9380	6.17	(5)
Switzerland	5,8000	10.33	(1)
Turkey	1,0311	2.2730	(26)
UK	2,8439	21.25	(3)
OECD 평균	2,3406	8.70	(9)
		7.02	-



주: a) CO2 배출당 실질GDP의 크기 (1000US\$/tonnes)

b) 실질GDP 대비 기준의 비환경관련 일반 조세부담 비중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사회보장 급여세, 기타 소비세 등 포함)

c) OECD Factbook 2005 & OECD Revenue Statistics, 1965-2004를 이용하여 각국별 조세체계과과도 대비 환경효율성의 비율로 근사

자료: Kim, S-R, (2005), First Regional Policy Dialogue, UNESCAP International Conference, p.157.

13) 최근 국가비전 2030의 실천전략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조세 및 재정정책의 개혁방향으로 국제적 기후변화협약 강화, 청정에너지 소비 기반확대, 친환경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의 개편, 기존 노동 및 자본관련 세제개편 등을 모두 함께 포괄하는 경제전반의 중장기 효율 향상 제고 측면이 충분히 감안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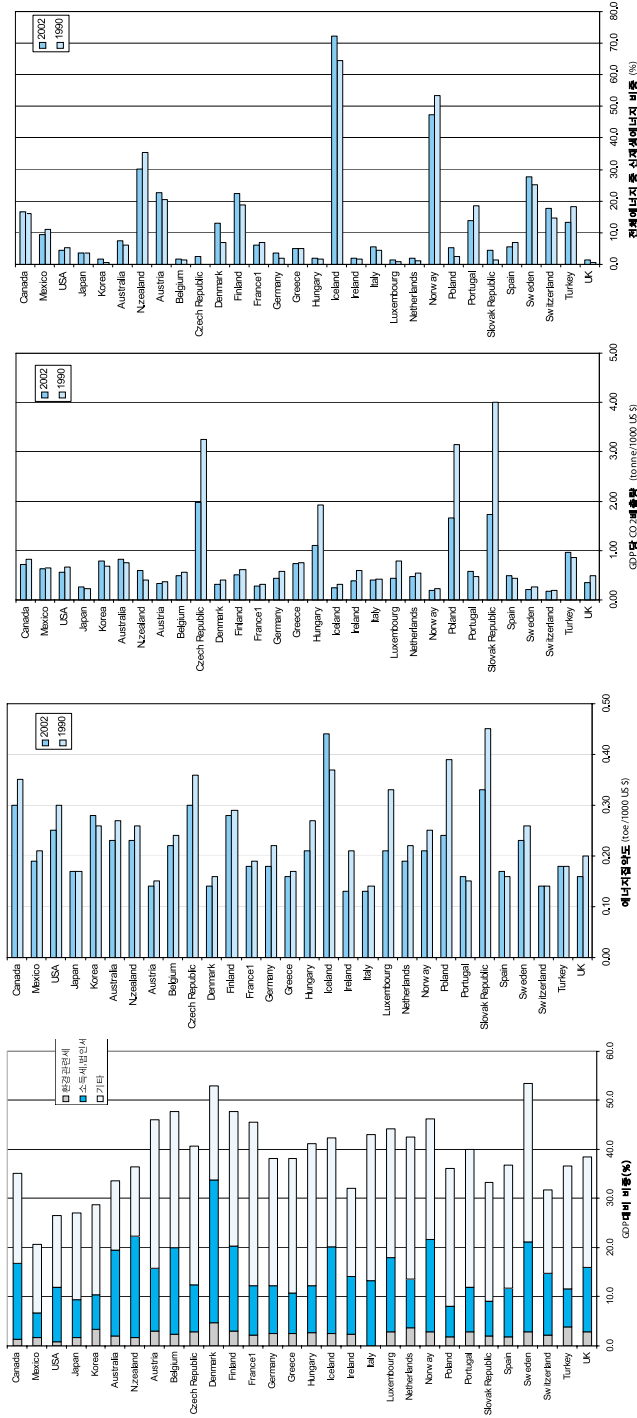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 및 에너지이용
효율성이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낮으며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이
매우 부족하다.

〈표 3〉 환경친화적 조세 및 예산개혁의 주요 방향과 예시

주요 범주	대상 및 내용 예시
(1) 환경유해 조세지원 및 보조금 철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에 유해한 조세지원 및 보조금은 광범위하게 정의될 수 있는데, OECD국가에서 농업, 에너지, 전력, 도로운송, 물공급, 산업 및 농업용수, 수산업 등 분야에서 자원 낭비와 비효율을 유발(에너지과소비를 부추기고 수요관리효과를 상쇄) - 석탄, 특정용도 석유류, 전력, 물, 비료, 폐기물, 농업투입물, 일부 오염 산업, 수송, 수산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 및 보조금 폐지
(2) 신규 환경세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변화협약에 대비한 탄소세 도입, 탄소저감형 에너지관련 세제 등
(3) 기존 환경세제 강화 및 세입비중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출부과금(수질, 대기), 환경 및 수질개선 부담금, 교통세, 유류특소세, 석유류 수입/판매부과금, 자동차관련 세제, 석탄판매부과금, 광물수입/판매부과금, 혼잡통행료, 교통유발부담금, 과밀부담금, 물이용부담금, 환경오염방지사업 부담금, 쓰레기종량제, 폐기물 예치금/부담금/수수료, 유독물질 부담금, 항공기소음부담금, 자원채취 사용료, 농지 및 산림 조성비,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 등의 합리화를 일반세제 개편과 적극 연계
(4) 환경관련 정부지출 및 투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절약형 산업, 친환경 제품 및 청정기술(R&D), 환경보전 산업, 신재생에너지, 재활용 산업, 수소에너지 보급 등에 대한 세제 및 재정지원, 인력 및 자본투자 촉진, 가속감가상각 적용

더욱이 환경관련 정부지출 및 투자확대 측면에서의 조세 및 예산개혁의 방향 설정의 긴급성은 [그림 5]의 (b) ~ (d)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 및 에너지이용 효율성이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낮으며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이 매우 부족하여 향후 자원이용 효율증진,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자원절약형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의 이행을 위하여 환경친화적 수요패턴 정착과 청정산업생산기술 축적이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쟁력 확보에 있어 가장 취약한 요소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우리 경제의 취약요소의 적극적 개선을 통하여 '지속가능발전 가능성' 국제비교에서 크게 열악한 것으로 평가되는 '환경효율성' 세부지표의 개선이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국가비전에 맞추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중장기적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림 5] 우리나라와 OECD 국가의 조세체계 및 기후변화관련 환경성과 비교



(a) 조세체계 구조

(b) 에너지효율성

(c) 환경품질성

(d)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1985-2004; OECD Factbook, 2006.



환경세, 배출권거래제 등
경제적 유인수단의 강화와
환경유해 각종 보조금제도의
폐지, 연구지원과 유인제공을
통한 환경친화적 R&D 촉진,
자연자원 관리를 위한 각종
사회적·행정적 인프라
구축 등은 향후 환경친화적
조세 및 예산개혁 방향의
핵심적 요소이다.

IV.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21세기의 인류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인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최근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친화적 세계개편 등 각종 경제적 인센티브 수단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본격화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은 환경세의 기본적 기능과 관련된 특정부분의 미시적 분석이거나 환경세의 단순한 파급효과 추정에 관련된 매우 제한된 접근에만 머물러 있어, 보다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차원에서 국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조세 및 예산개혁 방향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와 엄밀한 분석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환경-경제-정책' 이 하나로 통합된 최신 성장모형에 기초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지속적 경제성장과 환경개선의 조화가 바람직한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바람직한 조세 및 예산개혁의 방향을 모색하였다.

먼저, 환경세, 배출권거래제 등 시장기구에 기초한 경제적 유인수단의 강화와 환경유해 각종 보조금제도의 폐지, 연구지원과 유인제공을 통한 환경친화적 R&D 촉진, 자연자원 관리를 위한 각종 사회적·행정적 인프라 구축 등은 향후 환경친화적 조세 및 예산개혁 방향의 핵심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방향에서의 실천적 방안의 수립은 자연자원관리와 경제성장의 조화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며, 이에 대한 에너지, 지역개발, 수송, 농업, 제조업, 기술 및 인력개발 등 여러 가지 세부 분야별 이행과정을 점검하여 자원이용의 비효율과 환경오염 행위를 지속적으로 억제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개발에 따른 환경압력의 증가, 정보 및 지식부족으로 인한 불충분한 정책 가능성, 기후나 생물다양성, 수자원 등 자연자원의 남용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부의 각종 정책방안들은 기존의 일반 경제정책과의 유기적 연계성 강화가 필요하다. 가령 통합후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악(惡)에 대한 세제 강화를 통한 세수 증가는 점진적으로 국가 '일반회계'에 포함시켜 소득, 연금, 고용, 투자 및 기술개발 촉진 등 사회적 선(善)을 위한 각종 국민부담의 경감을 위하여 환류(tax recycling)시켜 사용되도록 유도하여 경제 전반적 효율성 제고라는 "일반" 경제정책의 목표와도 적극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¹⁴⁾.

한편,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이러한 조세 및 예산개편의 긴급성, 적정수준 및 추진속도는 국가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주요 결정요인 중 에너지효율수준 및 에너지사용의 친환경도에 의존하는 '환경효율성' 수준이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볼 때 상대적으로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 자연자원이용의 효율향상이나 신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한 방향에서 에너지가격 및 세제를 구조개편하고 경제행태를 지속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정책변화가 특히 시급한 것으로

14) 가령, 최근 독일이나 영국의 경우 환경세 세수의 대부분이 연금개혁 재원, 그리고 재정건전성 확보, 그리고 기타 신재생, 저탄소 에너지 기술개발을 위한 투지에 사용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정책은 환경개선(탄소배출 저감) 효과와 더불어 신규 고용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MCED, UNESCO, 2005.)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이행과정에서 단기적으로는 일부 주력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부담을 감안할 필요는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관련 기타 세제나 재정지출의 적절한 개편을 통한 보완이 가능하므로 근본적인 차원에서는 지속가능발전 추진 전략의 장애요인이 되지 못함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¹⁵⁾.

더욱이 고유가시대의 도래, 국제적 자원확보 경쟁의 가속, 청정에너지의 사회적 요구 증대, 교토의정서 발효 등 각종 국제적 최근 흐름을 감안하더라도 향후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의 증장기 비전 및 전략은 향후 20 ~ 30년 내에 현재의 탄소의존형 '탄소경제'에서 깨끗한 '수소경제'로 점진적으로 이행해 나가야 하는 등 새로운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국가경쟁력 강화가 필연적으로 요구된다. 따라서 우리 경제의 조세 및 예산제도의 경우 이를 위한 효과적인 유인제공 수단으로서 보다 명시적이고 적극적인 친환경 경제제를 도입하고 동시에, 내생적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친환경·고부가가치 신성장업종 (e.g., 정보과학기술, 생명공학기술 및 환경기술 등)에 대하여 국가 일반회계로부터의 투자 및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관련 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는 등 향후 국제사회에서 이러한 분야에 대한 선도적 위치를 유지해 나가는 국가적 차원의 전략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¹⁶⁾.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은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로서 특정부서 차원이 아니라 범정부적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조율·관리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정부 내 조세 및 예산당국의 조직 상설화와 실질적인 기능강화가 필수적이다. 환경친화적 세제 및 예산개혁 방안은 과거의 명령과 통제에 의한 수단이 아니라 시장기능을 통하여 소비 및 생산패턴의 변화를 유도하는 효율적인 자원관리의 경제적 유인제공 신호이고 동시에 환경보호와 경제적 편익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서, 그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가장 핵심적 정책 대안으로서의 역할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KIPF**

참고문헌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국가지속가능발전 전략 연구」, 2005
 Barro, R. and X. Sala-i-Martin, "Public Finance in Models of Endogenous Growth," *Review of Economic Studies* 59(4), 1992, pp. 645~661.
 Bovenberg, A. and R. de Mooij, "Environmental Tax Reform and Endogenous Growth," *Journal of Public Economics* 63(2), 1997, pp. 207~237.
 Bovenberg, A. and S. Smulders, "Environmental Quality and Pollution-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은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로서 특정부서 차원이 아니라 범정부적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조율·관리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15) 독일이나 영국에서는 환경세 강화가 단기적으로 일부 주력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보완하기 위하여 일반소비자와 비에너지 집약 산업과는 차등적으로 일부 중요 에너지 집약산업에 경감세율을 적용하고는 있으나, 이러한 경감 세율은 한시적인 조치이며 점진적으로 폐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IEA 등 국제기구에서는 에너지산업에 대한 직접보조는 도덕적 해이, 불합리한 에너지과소비나 에너지소비구조의 왜곡 등을 유발하므로 이러한 보조의 경우 저소득층에 대한 직접적인 인적보조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16) 가령 최근의 Fullerton and Kim (2006, pp.2-12)에 따르면 단순히 환경관련 세수(tax revenue)만으로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국가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투자 재원으로서의 "추가" 지출이 통합사회 후생을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필요함을 이론적으로 보였다.



- augmenting Technical Change in a Two-sector Endogenous Growth Model,” *Journal of Public Economics* 57(3), 1995, pp. 369~391.
- Fullerton, D. and S.-R. Kim, “Environmental Investment and Policy with Distortionary Taxes and Endogenous Growth,” NBER Working Paper No. 12070,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Cambridge, MA., 2006
- Hettich, F., “Growth Effects of a Revenue-neutral Environmental Tax Reform,” *Journal of Economics* 67(3), 1998, pp. 287~316.
- Kim, S.-R., “Optimal Fiscal Polici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Greening the Tax and Budget System,” UNESCAP Symposium, Seoul, Korea, 2005, Nov. 8~9.
- Lucas, R., “On the Mechanics of Economic Development,”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22(1), 1988, pp. 3~42.
- Nordhaus, W., *Managing the Global Common, the Economics of Climate Change*, MIT Press, Cambridge, MA., 1994
- Nordhaus, W.D. and J. Boyer, *Warming the World: Economic Models of Global Warming*, MIT Press, Cambridge, MA., 2000
- Rebelo, S., Long-run Policy Analysis and Long-run Growth,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9(3), 1991, pp. 500~521.
- Romer P., “Endogenous Technological Chang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8(5), 1990, s71~s102.
- Smulders, S. and R. Gradus, “Pollution Abatement and Long-term Growth,”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2(3), 1996, pp. 505~532.
- Tahvonen, O. and J. Kuuluvainen, “Optimal Growth with Renewable Resources and Pollution,” *European Economic Review* 35(3), 1991, pp. 650~661.

〈부표 1〉 OECD Factbook 2005 주요내용 요약

분야	지표	단위	연도	한국		OECD
					순위	평균
인구 이주	총인구	천명	03	47,925	9위	(1위:미국)
	인구증가율	%	03	0.6	12위	0.68
	출생률	명, (천명당)	03	-	-	(1위:터키)
	고령인구비율	%, (총인구대비) 65세 이상인구(전망)	20	15.1	20위	17.7
거시 경제 추이	GDP 규모	10억달러	02	898.7	10위	962.4
	1인당 GDP	달러	02	17,016	24위	25,810
	노동생산성	%	94-03	3.8	2위	1.8
경제 세계화	교역증가율	%, (GDP대비)	90-03	1.7(수준)	18위	2.5(수준)
	상품수지	10억달러	03	15	8위	- 132
	서비스수지	10억달러	03	-7.6	26위	1.9
	경상수지	%, (CDP대비)	01-03 (평균)	1.6	11위	-
물가	CPI 증가율	%	90-03 (평균)	4.9	8위	3.8
	PPI 증가율	%, (제조업 기준)	90-03	2.2	10위	2.5
	소비자물가수준	OECD(95)=100	03	64	25위	-
노동 시장	고용률*	%	03	63.0	21위	64.9
	지역업자비중	%, (취업자대비)	03	34.9	3위	-
	실업률	%	03	3.6	1위	7.1
	장기실업자비중	%, (실업자대비)	03	0.6	1위	31.0
과학 기술	R&D 투자비중	%, (GDP 대비)	02	2.96	8위	2.33
	연구종사인력	명, (근로자 천명당)	01	6.4	7위	6.5
	PC보유가구비중	%	02	77.9	1위	-
환경	CO2 배출량	백만톤	02	452	6위	418
	1인당 물소비량	m ³	02	560	14위	920
	1인당폐기물배출량	kg	02	380	24위	570
	재활용에너지비중	%	03	108	28위	5.9
교육	PISA국제학력평가					
	-읽기	평균점수	03	534	2위	494
	-과학	"	03	538	3위	500
	-수학	"	03	542	2위	500
	1인당대학교육지출액	달러	01	6,618	26위	-
	교육비비중	%, (GDP 대비)	01	8.2	1위	6.2
	-공교육비	"	01	4.8	17위	4.8
-사교육비	"	01	3.4	1위	-3.68	
공공 정책	1인당 건강지출	달러	02	519	27위	-
	조세수입	%, (GDP 대비)	01	27.2	29위	36.9%
	근로자 1인당 세부담	(노동비용 대비)	03	14.1	30위	36.5
삶의 질	평균수명	나이	01	76.4	24위	77.4
	-남자	"	01	72.8	24위	74.4
	-여자	"	01	80.0	21위	84.9
	영아사망률	명, (천명 중)	02	6.2	8위	6.3
	비만율	%, (15세 이상인구대비)	03	3.2	1위(낮음)	30위
	-남자	"	03	2.8	1위	-
	-여자	"	03	3.5	1위	-
	1인당 보건비지출	달러	02	996	26위	-
	1인당 근로시간	시간/연간	03	2,390	1위	-
	자동차 사고					
-백만명 당	건수	02	149	4위	-	
-백만대 당	"	02	612	1위	-	

주: 고용률=취업자/생산연령인구(15~64세)

자료: 대통령저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05), 「국가지속가능발전 전략 연구」, pp. 8~9.

〈부표 2〉 우리나라와 주요 선진국의 지속가능발전 전략과 정책 비교

분야	주요 목표	추진 체계	지속가능발전 전략	부문별 정책	주요 추진 수단 및 경과	향후 중점 추진과제
판 단	환경 측면과 지속가능 발전의 통합	지속가능 발전위원회 환경부 유관부처	경제적 환경정책 수단 활동 광범위한 참여 촉진	- 자연과 자연 자원 - 지역 개발 - 토지이용, 건축, 주택 - 농업, 산림, 재생자원 - 에너지, 교통 - 고용 - 교육, 과학, 문화	천연 자원의 이용과 환경 오염 행위에 대한 과세 체제	참여 진작을 위한 다양한 노력
특 징	-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인지하는 사회 - 자연 자원의 신중한 사용 - 높은 수준의 안정된 경제성장과 고용유지	지속가능 발전 위원회 식품, 환경, 지역부내의 지속가능 발전실	- 인간 중시 - 장기적 관점 - 비용편익의 고려 - 개방적이고 우호적인 경제체제 구축 - 빈곤과 사회적 소외의 퇴치 - 환경적 한계 존중 - 사전 예방 원칙 - 과학 지식의 활용 - 투명성, 정보공개, 참여, 정의의 원칙 - 오염자 부담의 원칙	- 지속가능한 경제정책 - 지속가능한 환경정책	- 경제적 수단의 활용 연구 (환경세 등) - 민관협력 체제 구축	- 경쟁력 확보 - 소외계층 축소 - 환경 영향 최소화, 교통 체계 확립 - 대도시의 쾌적성 증대 - 농업적방법 활용 - 에너지 효율성 증진, 폐기물의 적절한 관리 - 세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
일 본	- 자원 순환경제 사회의 실현 - 자연 생물종과 인간간의 공생 - 모든 사람의 참여 - 국제 협력	지속가능 발전위원회	- 인식의 전환 및 다양한 수단의 선택 - 참여 지향적 과정 - 실현 가능한 수단 채택 - 예산의 확보 - 검토 및 평가 수단 확보 - 성차별 금지	- 교통 - 쓰레기 및 재활용 - 화학물질 관리 - 지구 온난화 예방 - 대기질외 보전 - 오존층 보호 - 농업과 산림의 다기능성 - 해양 자원	- 법과 제도 강화 - 국제적 노력 강화	- 대량생산, 대량 소비, 대량폐기물 발생패턴의 지양 - 지구 온난화 방지 조치 - 환경보전 경험을 살린 기술과 과학의 진흥 - 국제협력, 시민 참여 - 생물다양성의 유지, 산림과 연안역의 보호 - NGOs의 역할 강화 - 환경교활성화

〈부표 2〉의 계속

분야	주요 목표	추진 체계	지속가능발전 전략	부문별 정책	주요 추진 수단 및 경과	향후 중점 추진과제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한 환경 - 경제적 번영 - 사회적 평등 - 자연보존 -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건설 - 시민참여 - 인구증가의안정화 - 국제 협력 - 환경교육 	연방정부의 23개 개별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전략 - 능력의 배양 - 정보공개 - 협력관계의 유지 - 시장 기능의 활용 - 지역사회로의 의 사결정 분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변화 - 환경관리 - 대도시 및 농촌 전략 - 국제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한 소비 - 지속가능한 생산 - 규제 제도의 개혁 	부문별 정책의 강화
한국	경제·사회·환경을 통합하는 미래 지향적 관점에서 국가의 지속적 발전과 국민복지의 증진	지속가능 발전위원회 환경부 유관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오염 예방 중심의 정책 -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에 입각한 환경 행정의 운영 - 환경정책과 경제정책의 통합운영 시도 -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공동노력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이용관리 - 사회복지 - 산업분야 - 환경관련 과학기술 - 농업 및 농촌 개발 - 산림 - 자원보존과 생물 다양성 - 해양부문 - 수질관리 - 대기오염 관리 및 교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부담금 시행 - 환경영향 평가제도 - 자율적 환경 정책 수단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비용의 내부화 - 환경기술개발 정책의 강화 - 투자재원 조달과 수요 관리 - 파트너십제고 - 경제 구조조정과 남북협력 과제 해결

자료: 박재창 외 (2004), 『한국의 환경지속성 - 평가와 과제』, pp. 139~140.

1999년 국세행정개혁의 성과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박명호**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ecpmh@kipf.re.kr)

우리나라 국세청은
1999년 “제2의 개청”이라고
불리는 대대적인
국세행정개혁을 단행하였다.
하지만 1999년 국세행정개혁의
성과가 단기 또는 일시적인
효과인지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인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 다양한 지표들을
활용하여 평가한 연구는
아직 미미하다.

I. 서론

우리나라 국세청은 1999년 “제2의 개청”이라고 불리는 대대적인 국세행정개혁을 단행하였다. 1966년 개청 이후 크고 작은 세정개혁이 있었지만 1999년 국세행정개혁은 개청 이후 가장 근본적인 세정개혁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¹⁾. 하지만 1999년 국세행정개혁의 성과가 단기 또는 일시적인 효과인지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인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 다양한 지표들을 활용하여 평가한 연구는 아직 미미하다.

본 연구는 국세청이 매년 발간하는 『국세통계연보』와 국세청 내부의 자료를 이용하여 다양한 성과지표를 개발한 후에 1999년 국세행정개혁의 성과를 단기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평가한 후에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특히 국세청의 주요 업무인 세원관리, 조사, 징세, 납세서비스 측면에서 1999년 국세행정개혁의 성과를 평가하고자 한다.

특히 올해에는 중장기 세제개혁을 비롯하여 단기적인 세제개편에 대한 논의가 국민과 언론의 뜨거운 관심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세제개혁 또는 개편의 성공여부에 있어서 국세행정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²⁾. 이는 새로운 조세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실행되기 위해서는 조세행정적인 뒷받침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근 국세행정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를 야기하였던 1999년 국세행정개혁에 대한 보다 다각적인 평가를 통해 국세행정의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Ⅱ 장에는 1999년 국세행정개혁의 주요내용을

1) 기획예산처 정부개혁실은 국세청의 개혁시례를 1999년 공공부문 개혁 우수시례로 선정하였고, 감사원에서는 국세청을 「1999년도 자체감사결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하기도 하였다.

2) Bird(1991)는 조세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세제의 개혁과 더불어서 세정의 개혁이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요약한다. 특히 조직개편에 초점을 두고 설명하고자 한다. 제Ⅲ장에서는 국세행정개혁의 성과지표 분석을 행한다. 이를 위하여 세원관리·조사·징세·납세서비스 측면에서 총 15개의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그 추이를 바탕으로 세정개혁의 성과를 일시적인 효과인지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인 효과가 있었는지 평가한다. 마지막 제Ⅳ장에서는 결론을 맺으며 시사점을 도출한다.

1999년 국세청은 “제2의 개청”을 선언하며 세무행정을 종래의 행정편의주의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납세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세정개혁을 추진하게 되었다.

II. 1999년 국세행정개혁의 주요내용³⁾

1. 국세행정개혁의 필요성

1998년에 출범한 국민의 정부는 1997년 말에 일어난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국가경쟁력을 높이고자 기업·금융·노동·공공부문에 대한 개혁조치를 추진하였다. 특히 공공부문에 민간 경쟁과 성과의 원리를 도입하여 공공부문의 생산성을 제고시키는 것이 중요한 개혁과제로 인식되었다. 그리고 국세행정의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인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 간의 세부담 불균형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세무관련 비리로 인하여 국민들의 세정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높아져갔다. 이와 같이 국가·사회 전반에 걸쳐 개혁이 추진되는 상황 속에서 국민의 경제생활에 직결되는 세무행정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즉, 세정의 공평성·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국민적 신뢰와 납세자로부터의 자발적 협력을 바탕으로 세정기반을 구축할 필요성이 절실했다. 또한 국제화와 정보화로 대표되는 20세기말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 세계 여러 나라들이 세정개혁을 추진하고 있음에 비추어 우리나라에서의 세정개혁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졌다.

2. 국세행정개혁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위와 같은 대내외적인 상황 속에서 1999년 국세청은 “제2의 개청”을 선언하며 세무행정을 종래의 행정편의주의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납세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세정개혁을 추진하게 되었다. 1999년 세정개혁의 궁극적 목표는 국세공무원의 청렴성, 세부담의 공평성, 세정의 효율성으로 집약된다. 이러한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조직개편, 업무혁신, 인사쇄신 및 의식개혁, 과세인프라 구축이라는 4가지 구체적인 실천목표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철저한 납세자 중심의 국세행정으로 재편』, 『국세행정의 공평성·투명성·효율성의 종합적 제고』, 『세정의 오랜 고질적·구조적 문제의 해소』, 그리고 이

3) 1999년 국세행정개혁에 관한 내용들은 주로 국세청의 『1999년 국세행정개혁백서』를 요약·정리한 것이다.



1999년 세정 개혁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행정조직 축소 및 기능 재조정
- ② 납세자 중심의 기능별 조직으로 전환
- ③ 업무처리의 대폭 전산화
- ④ 자영업자의 과세정상화를 위한 기반 조성
- ⑤ 조세공무원의 의식개혁 프로그램 추진.

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세정시스템을 선진국형으로 개편』하는 것을 세정개혁 추진의 기본방향으로 삼았다. 아래의 <표 1>은 1999년 세정개혁의 실천목표와 기본방향을 보여 주고 있다.

<표 1> 1999년 세정개혁의 실천목표와 기본방향

세정개혁의 실천목표	세정개혁의 기본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개편 • 업무혁신 • 인사쇄신 및 의식개혁¹⁾ • 과세인프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저한 납세자 중심의 행정체제 구축 • 국세행정의 공정성·투명성·효율성의 종합적 제고 • 세정의 오랜 고질적·구조적 문제의 해소²⁾ • 세정시스템을 선진국형으로 개편³⁾

주: 1) 여기서 의식개혁의 주체는 국세공무원을 지칭하며, 전 국세공무원에게 '개혁의 주체는 나'라는 의식을 심어주어 개혁에 적극 동참하도록 하였다.
 2) 우리나라 세정의 고질적·구조적인 문제로 여겨지는 것은 과세의 불공평, 세무 부조리 등을 꼽을 수 있다.
 3) 선진국의 세무행정과 최근의 개혁 내용을 벤치마킹하여 선진국형 행정조직과 업무추진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세정개혁이 성공하는 데 필수적으로 보았다.

3. 국세행정개혁의 주요내용

국세행정개혁의 목표와 기본방향하에서 추진한 세정개혁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조직을 전면 재편성하여 조직을 축소하고 그 기능을 전면적으로 재조정하였다. 특히, 본청은 기획, 지방청은 조사, 세무서는 서비스를 핵심기능으로 재편성하였다. 둘째, 조직의 축소 및 재편성과 더불어서 국세청 조직을 소위 『지역담당제』에 근간을 둔 징세 중심의 세목별 조직에서 현재의 납세자 중심의 기능별 조직으로 전환하였다. 셋째, 일하는 방식을 일대 전환하여 종전 담당자에 의존하던 업무처리를 대폭 전산으로 대체하였다. 넷째, 신용카드 이용확대 등 수요자 중심의 과세자료 양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자영업자의 과세정상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다. 다섯째, 전 국세공무원에게 '개혁의 주체는 나'라는 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의식개혁 프로그램을 추진하였다.

4. 1999년 국세행정조직 개편

가. 국세청 조직개편의 필요성 및 설정된 방향

1966년 국세청이 발족하기 이전의 국세행정은 재무부 사세국이 담당하였다. 국세에

관한 제도와 행정을 관장하였던 사세국은 그 산하에 4개의 사세청과 여러 개의 세무서를 두고 있었다. 정부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강력히 추진하는 과정에서 매년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1966년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국세청이 발족되었다. 발족 당시 국세청은 4개의 지방청과 77개의 세무서를 하부조직으로 두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국세행정 조직은 1966년 재무부 사세국에서 분리되어 일반행정과는 독립된 조직을 갖추게 된 이래, 1999년 조직개편 이전까지 소위 『지역담당제』에 근간을 둔 세목별 조직 시스템을 유지하여 왔다. 국세청은 개청 이후 경제개발에 소요되는 국가재정수입의 원활한 확보라는 일차적 조직목표의 달성과 효율적 세원관리를 위해 소단위 세무서체제를 지향하며, 세무서를 분리·신설하는 등 수십 차례의 점진적인 조직 및 인력의 변동을 경험하며 조직을 확대하여 왔다. 그렇지만 그 동안 국세행정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지역담당제 및 세목별 조직 중심의 업무체계를 그대로 유지하여 왔다.

이와 같이 오랫동안 조직체계상의 개혁이 없었던 이유는 우리나라의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왕의 지역담당제 및 세목별 조직체계하에서도 필요시 적절한 인력보충만으로도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이후 경제규모의 확대 및 상거래의 복잡·다기화,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 발전, 납세자의 권리의식의 급신장 등 제반 조세행정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였다. 이러한 세정여건의 급격한 변화에 대하여 기존의 지역담당제에 기반을 둔 세목별 조직 체계는 더 이상 적절히 대응할 수 없게 되었고, 부조리에 취약한 시스템의 한계를 드러내게 되었다.

이러한 조세행정 환경의 변화 및 조직체계상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1990년대 들어 조직체계와 일하는 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자는 주장이 조직내부 및 외부에서 제기되었다. 이에 국세청은 1997년부터 기능별 조직 시범세무서를 설치하고, 이를 점차 확대 운영하던 가운데 1999년 전격적으로 국세행정 조직을 개편하게 된다. 아래의 <표 2>는 1999년 국세행정 조직개편의 필요성과 방향을 보여준다.

<표 2> 1999년 조직개편의 필요성과 방향

조직개편의 필요성	조직개편의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개혁의 시대적 요청 • 자율세정을 뒷받침할 조사인력 확충 • 납세자 권리의식의 증대 • 세무부조리에 대한 국민의 불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율과 성과 중심의 조직개편 • 조직통합에 의한 시너지 효과로 인력부족 타계 • 고객중심의 조직과 업무체계 구축 • 기능별 조직화로 부조리 소지의 제도적 차단

1980년대 후반 이후
경제규모의 확대 및 상거래의
복잡·다기화,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 발전, 납세자의 권리의
식의 급신장 등 세정여건의
급격한 변화에 대하여 기존의
지역담당제에 기반을 둔
세목별 조직 체계는 더 이상
적절히 대응할 수 없게 되었고,
부조리에 취약한 시스템의
한계를 드러내게 되었다.

4) 지역담당제에 기반을 둔 세목별 조직하에서는 어느 한 납세자에 대한 등록·신고·조사·징수·불복절차 등 국세행정 각 기능을 지역별로 지정된 세무공무원 1인이 모두 수행한다. 이러한 시스템은 납세자와 지역 담당자간의 구조적인 유착이 용이하여서 부패에 취약한 구조적인 허점을 갖고 있다.



1999년 조직개편에서는
일률적인 인력감축이 아니라
조직 통폐합 및 실효성 없는
업무축소를 통한 잉여인력을
증원소요가 큰 서비스 및
조사분야로 재배치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나. 조직개편의 원칙 및 개편내용

1999년 조직개편에서는 일률적인 인력감축이 아니라 조직 통폐합 및 실효성 없는 업무축소를 통한 잉여인력을 증원소요가 큰 서비스 및 조사분야로 재배치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특히, 지방청의 기획기능은 단순히 본청 지시를 재구성하여 세무서에 전달하는 수준으로 본청과 기능 중복이 많아 인력운용의 효율성이 낮다고 여겨짐에 따라 본청은 기획, 지방청은 조사, 세무서는 납세서비스에 중점을 두어 조직개편을 단행하였다.

1) 본청의 조직개편 내용

본청 조직의 개편내용은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납세서비스 전담국인 납세지원국을 신설하였다. 이를 위하여 당시의 납세지도과를 민원제도과와 납세홍보과로 확대개편하여 각종 납세편의 제도를 개발하고 납세홍보 및 상담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또한 납세자보호과를 설치하여 납세자의 각종 세금관련 고충을 처리하고 일선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지휘·감독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납세서비스 전담국을 신설하여 납세서비스를 명실상부한 국제행정조직의 중심기능으로 활성화시키고자 하였다.

둘째, 세목별 조직이었던 당시의 직세·간세·재산세·국제조세국을 개인납세국 및 법인납세국으로 통폐합하여 납세자 중심조직으로 재편하였다. 개인납세국에 부가가치세과·소득세과·재산세과, 법인납세국에 법인세과·소비세과·국제업무과를 두었다. 한편 국제조세국의 경우, 기능이 유사한 국제총괄과를 국제업무과로 통합하여 법인납세국 소속으로 함으로써,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관리의 통일성을 도모하였다. 그리고 국제조사과는 조사국 소속으로 하여 내국법인 조사와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셋째, 소송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법무담당관을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심사과와 묶어 법무심사국을 신설하였다.

2) 지방청의 조직개편 내용

지방청 조직개편은 지방청의 기획기능을 최소한으로 축소하는 한편 조사조직을 보강하여 지방청으로 하여금 조사기능에 초점을 두도록 하였다. 특히, 지방청의 대(大)납세자관리 기능을 강화하여, 지방청 단위에서 대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및 체납정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위하여 지방청 각국에 분산되어 있던 조사기능을 조사국으로 일원화하였다.

지방청 개편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직세국·간세국·재산세국을 세원관리국으로 통합하고 인력을 축소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세원관리 및 일선 지

취감독 업무 수행하도록 하였다. 둘째, 조사국 증설, 조사반 보강 등 조사기능을 대폭 확충하여 지방청을 조사중심조직으로 개편하였다. 직세국 및 간세국의 조사기능(국제 조사 포함)을 조사국으로 통합하고, 고소득 자영업자, 음성·탈루소득자 조사를 전담할 조사국을 신설하였다. 셋째, 징세과·송무과·전산관리과를 묶고 납세지원과를 신설하여 납세지원국을 만들으로써 타국 및 일선 서비스기능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특히 본청은 기획 기능에, 지방청은 조사 기능에, 세무서는 납세서비스에 중점을 두어 조직개편을 단행하였다.

3) 세무서의 조직개편 내용

세무서 조직개편의 주요내용을 보면, 1999년 조직개편의 핵심인 기능별 전문화를 위하여 종전의 소세무서제를 중·대세무서체제로 전환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기능별 전문화를 위해서는 각 조직별로 일정규모 이상의 인력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배경하에 종전 전국의 134개를 세무서 중에서 35개를 통폐합(26%)하여 99개 세무서로 개편하였다. 통폐합 방식은 주로 대도시내 정원 100명 이하 세무서와 징세비 대비 세수효율이 낮은 일부 지방 2급지 세무서를 대상으로 인근 세무서와 통합하는 방식으로 개편하였다. 그리고 통합되는 지방소재 세무서에는 전부 지서를 설치하여 원거리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였다.

세무서 조직을 세목별 조직에서 기능별 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종전의 총무과, 소득세과, 재산세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등 세목별 조직을 납세지원과, 징세과, 세원관리과, 조사과 등 기능별조직으로 전환하였다.

아래의 <표3>은 국세청의 조직개편을 요약한 것이다.

<표 4> 국세청의 1999년 조직개편 주요내용

	내 용		비 고
	개편 전	개편 후	
본	직세·간세·재산세국	개인납세·법인납세국	국편제 개편(세목별 → 납세자 중심)
	납세지도과	납세지원국	납세서비스 전담조직 확대
청	법무담당관실+심사과	법무심사국	기능이 유사한 과는 동일국으로 통합
	조사과+국제조사과	조사국	
지방청	직세·간세·재산세국	세원관리국	기획기능 인력축소(908명→800명)
	조사 1~2 국	조사 2~4 국	조사기능 인력보강(813명→1,713명)
세무서	총무과	납세지원과	세목별 조직을 기능별 조직으로 개편하여 소세무서제를 중·대세무서체로 전환하고 세무서 수를 축소(134개 → 99개)
	소득세·재산세·법인세·부가가치세과	징세·세원관리·조사과	



국세행정의 주요 기능인
세원관리·조사·징세·
납세서비스 및 권익보호라는
네 가지 측면에서 1999년
국세행정개혁의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이러한 성과지표들을 통해
1999년 국세행정개혁의
성과를 평가한다.

Ⅲ. 국세행정개혁의 성과지표 분석

본장에서는 1999년 국세행정개혁의 성과를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공공부문의 성과는 민간부문과는 달리 하나의 지표로 측정하기 어렵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⁵⁾. 이는 공공부문이 민간부문과는 달리 서로 상충될 수 있는 다양한 목표들(예: 효율성, 형평성, 투명성, 민주성 등)을 가지고 있어서 목표들 간에 우선순위와 가중치를 매기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 부처 또는 부서들이 서로 복잡하게 상호연결되어 있고, 공동의 노력에 의해 성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존재한다. 따라서 인과관계의 파악을 통해 성과와 책임을 부처 또는 부서 간에 배분하기가 힘들다는 특징이 존재한다(최 광·임주영, 천진권, 1997; 박노국, 2005).

따라서 본장에서는 매년 국세청이 발행하고 있는 『국세통계연보』를 통해 공개되고 있는 자료를 통해 국세행정의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다양한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1999년 국세행정개혁의 성과에 대해 평가해 보고자 한다. 특히 국세행정의 주요 기능인 세원관리·조사·징세·납세서비스 및 권익보호라는 네 가지 측면에서 1999년 국세행정개혁의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이러한 성과지표들을 통해 1999년 국세행정개혁의 성과를 평가하고자 한다.

1. 세원관리 측면

세원관리는 국세행정의 주요 업무 중의 하나로서 각 세목별 납세신고 관리, 경정, 부과, 감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일컫는다. 특히, 국세행정은 공평과세 실현 및 성실납세 풍토를 유도하기 위해 기장 등에 의한 근거과세 기반확충에 초점을 두고 있다.

본고에서 세원관리와 관련된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한 지표는 종합소득세 신고율과 종합소득세 기장 신고율 및 법인세 자진납부 비율로서 그 산식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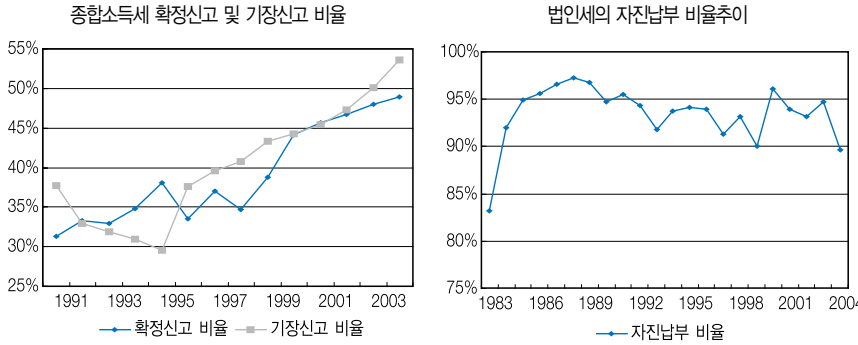
- 종합소득세 신고율 = $\frac{\text{확정신고인원}}{\text{납세인원}} \times 100$
- 종합소득세 기장신고율 = $\frac{\text{종합소득세 기장신고인원}}{\text{확정신고인원}} \times 100$
- 법인세 자진납부 비율 = $\frac{\text{자진납부액}}{\text{징수액}} \times 100$

이때 납세인원에는 분리과세소득자와 원천징수대상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시켰으며, 확정신고인원에는 장부증빙이 필요가 없는 비사업자를 제외하고 있다.

이 세 가지 성과지표들의 추이는 다음의 [그림 1]과 같다.

5) 이러한 문제를 경제학에서는 다중과제(multi-tasking)의 문제라고 부른다(박노국, 2005). 박노국(2005)에 따르면 이러한 다중과제의 문제 이외에도 외부요인의 영향에 따른 교란(noise)도 성과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렵게 만드는 대표적인 요인이라고 한다.

[그림 1] 세원관리 기능과 관련된 성과지표들의 추이



1999년 세정개혁은 세원관리 측면에서 단기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고 중장기적으로도 개선된 긍정적 효과를 미쳤다. 다만 법인세의 자진납부비율의 중장기적인 개선 효과는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1999년 9월 국세행정개혁 직전의 1999년 종합소득세 신고분의 확정신고비율 및 기장신고비율은 각각 38.8%와 43.3%이었다. 개혁 직후 이 비율들은 44.1%와 44.3%로 증가되어 각각 5.3%p와 1.0%p가 개선되었다. 또한 법인세의 자진납부비율도 국세행정개혁을 전후하여 90.0%에서 96.1%로 증가함으로써 6.1%p가 개선되었다. 따라서 세원관리와 연계된 지표들은 개혁 직전과 직후를 비교하였을 때 모두 개선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판단된다.

한편 국세행정개혁의 가시적 성과가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으므로 개혁 전 5개년 평균과 개혁 후 5개년 평균을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에 따르면 종합소득세의 확정신고비율 및 기장신고비율의 5개년 평균은 개혁 전 36.4%와 38.2%에서 46.7%와 48.1%로 증가하여 5개년 평균으로 보면 10.3%p와 9.9%p가 개선되었으며 개혁 직전과 개혁 후 5개년 평균을 비교하여도 각각 7.9%p와 4.8%p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확정신고비율과 기장신고비율이 중장기적으로도 개선되었음을 의미한다. 한편 확정신고비율의 경우 개혁 초기에 상대적으로 급증하고 점차 그 증가율이 하락하고 있는 반면에 기장신고비율의 경우 개혁 초기에는 상대적으로 소폭으로 증가하였지만 점차 그 증가율이 커짐을 보여준다.

법인세의 자진납부비율의 5개년 평균은 개혁 전 92.5%에서 93.5%로 증가하여 아주 소폭으로 개선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개혁 직후 크게 개선된 효과는 일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세무조사와 관련된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5개의 성과지표 (조사비율, 건당 추정액, 징세행정비 대비 추정액, 국세공무원 1인당 추정액, 조세 범칙조사 무혐의 비율)가 사용된다.

2. 세무조사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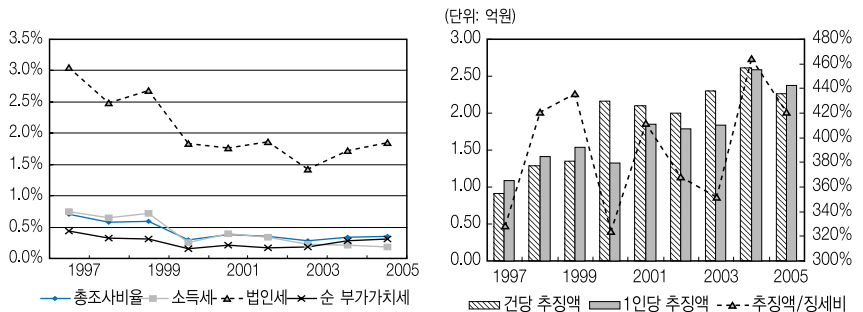
국세행정의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인 세무조사는 성실납세를 담보하는 매우 중요한 정책수단이다. 제II장에서도 언급하였듯이 1999년 국세행정개혁은 조직개편을 통하여 세무조사 인력을 총 2,583명(총 정원의 15.2%)에서 5,160명(총 정원의 30.6%)으로 약 2배 정도 대폭 늘림으로써 조사기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세무조사와 관련된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5개의 성과지표를 개발하였다. 이러한 지표들을 사용하여 조사행정의 효과성 또는 효율성이 1999년 국세행정개혁을 통해 일시적으로 또는 중장기적으로 향상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적으로 성과지표들과 그 산식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조사비율 = 조사건수 / 조사대상인원×100
- 조사건수당 추정액 = 추정액 / 조사건수
- 징세행정비 대비 추정액 = 추정액 / 징세행정비
- 국세공무원 1인당 추정액 = 추정액 / 국세공무원 정원
- 조세범칙조사 무혐의 비율 = 무혐의 건수 / 범칙조사 건수

이처럼 정의된 성과지표들의 추이는 다음의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조사기능과 관련된 성과지표 추이 (I)



6) 여기서 당시 정부부과 방식의 양도소득세의 조사비율은 제외되고 있다.

7) 조사건수 자체도 같은 기간동안에 소득세는 8,771건에서 3,461건, 법인세는 4,868건에서 3,785건, 부가가치세는 5,598건에서 3,079건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전체적인 세무조사 비율의 경우 1999년에 0.59%였지만 2000년에는 0.29%로 크게 감소하였다⁶⁾. 개별 세목의 조사비율 하락을 살펴보면 소득세는 0.72%에서 0.26%로, 법인세는 2.68%에서 1.83%로, 부가가치세는 0.31%에서 0.15%로 크게 하락하였다⁷⁾. 이에 반하여 조사건수당 추정액은 1999년에서 2000년에 1.35억원에서 2.17억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하지만 징세행정비⁸⁾ 대비 추정액 비율과 국세공무원 1인당 추정액은 같은 기간동안에 각각 436%에서 324%로, 1,54억원에서 1,33억원으로 감소하였다⁹⁾. 따라서 세무조사 기능과 연계된 지표들은 개혁 직전과 직후를 비교하였을 때 조사건수당 추정액만이 개선되고 조사비용, 징세행정비 대비 추정액이나 국세공무원 1인당 추정액은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개혁의 효과가 중장기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지표들의 개혁 직후 5년간의 평균을 살펴본다. 총 조사비용의 경우 2000년과 2003년에만 0.3% 미만이었고 나머지 2001년, 2002년, 2004년은 0.3%대를 유지하였다. 그 결과 개혁 후 5년간의 총 조사비용 평균은 0.34%였다. 이는 1999년의 총 조사비용(0.59%)보다도 낮으며 자료가 존재하기 시작하는 연도인 1997년부터 1999년간의 평균인 0.62%보다도 45% 정도 낮아졌다. 개별 세목들의 조사비용 추이를 보더라도 소득세의 개혁 후 5년간 평균은 0.27%로 1997년부터 1999년까지의 평균인 0.70%보다 62% 감소하였다. 법인세는 같은 기간 동안에 2.74%에서 1.74%로 36% 정도 감소하였고, 부가가치세도 0.36%에서 0.22%로 약 40%나 감소하였다. 조사건수당 추정액 규모를 보면 1997년부터 1999년까지는 평균 1.18억원이었지만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간의 평균은 2.24억원으로 약 90% 증가하였다. 징세행정비 대비 추정액 비율은 같은 기간 동안에 395%에서 390%로 조금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국세공무원 1인당 추정액은 1.35억원에서 1.96억원으로 약 40% 증가하였다.

이러한 지표들이 의미하는 바는, 조사비용의 경우 조사인원을 확충하여 세무조사의 성실신고 담보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였던 개혁의 의도와는 달리 개혁 전보다 개혁 이후에 지속적으로 낮아졌음을 보여준다. 조사인력을 확충하게 된 국세청의 개혁 의도는 국세청이 발간한 『1999년 국세행정개혁백서』에서 다음과 같이 알 수 있다.

상대적으로 조사가 명실상부한 성실신고 담보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조사기능을 설계하였다. 소수업선 정밀조사로 파급효과 극대화라는 구호는 성실신고수준이 전반적으로 저조한 우리 실정에는 다소 부적합하며, 신고지도라는 명목하에 이뤄지는 구걸식 세정을 지양하고 조사의 정상화를 통한 정공법이 선진세정의 정도라고 판단하여 조사대상자를 일정수준 확대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이르렀다. (Perfect compliance by a few ⇒ Better compliance by many) (출처: 『1999년 국세행정개혁백서』, p. 145)

따라서 개혁 이후의 세무조사 운영이 성실신고 유도라는 본래의 기능에 충실하기보다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 환경에 구속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례는 외환

조사건수당 추정액을 제외한 지표들은 대체로 개혁 직후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는 개혁 이후의 세무조사 운영이 성실신고 유도라는 본래의 기능보다는 정치·경제·사회적 환경에 구속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8) 일반회계에서 국세청 소관의 집행액을 말한다.

9) 국세공무원 정원 대비 추정액뿐만 아니라 조사공무원 1인당 추정액도 1999년 7,54억원에서 2000년 4,32억원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이때 1999년도 조사인원은 개혁 직전 조사인원 2,583명과 개혁 직후 조사인원 5,187명의 해당 개월 수에 따른 가중평균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추정액으로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추정액 합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1999년과 2000년 동안에 조사공무원의 수는 대폭 증가했지만 추정액은 오히려 감소하였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로 여겨진다.



위기 이후 경제회복을 위해 세무조사를 축소해 달라는 요구에 의해 2000년과 2001년의 조사건수가 대폭 줄어들었으며, 참여정부가 들어선 2003년도 상반기에는 세무조사를 유예하여 그 해의 조사비율이 축소되었다는 것 등이다. 따라서 세무조사를 본래의 기능에 초점을 두어 운영하는 것과 대체가능한 정책이 존재하는 다른 정치·경제적 목적(예: 경기활성화 지원)으로 활용하는 것 가운데 어느 것이 사회적으로 보다 바람직한가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판단과 이에 따른 조사제도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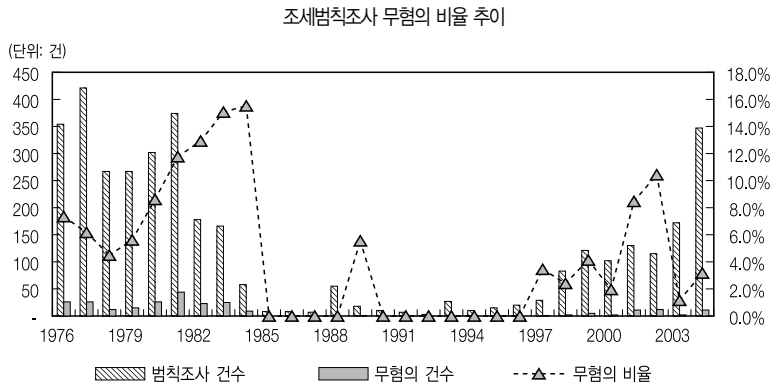
한편 조사건수당 추정액은 개혁 직후 일시적일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제청이 강조하듯이 탈루혐의가 큰 납세자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개별 조사의 생산성이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¹⁰⁾. 하지만 오히려 세무조사 기능이 축소됨으로써 납세자의 탈세 정도가 심해짐에 따라 동일한 수준의 선정방식 및 조사강도에도 발각된 탈세액이 많아진 가능성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¹¹⁾.

이와 더불어서 세무조사를 통한 추정액을 산출로 보고 징세행정비나 국제공무원 정원을 투입으로 본다면 징세행정비 대비 추정액 비율인 지출생산성은 일시적으로 개혁 직후 크게 감소하였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그 감소폭은 별로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국제공무원 1인당 추정액인 노동생산성은 일시적으로 하락하였지만 중장기적인 비교에서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¹²⁾. 이는 비교하는 기간 동안에 징세행정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지만 국제공무원 정원은 조금 감소하거나 거의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였고 추정액은 2000년을 제외하고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아래의 [그림 3]에서 알 수 있듯이 조사기능과 관련된 또 다른 지표인 조세범칙조사의 무혐의 처리비율은 개혁 시점인 1999년에는 4.1%에서 개혁 직후인 2000년에는 2.0%로 낮아짐에 따라 범칙조사 대상자 선정이 개선되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 그렇지만 2000년부터 2004년까지의 평균을 보면 이 지표는 5.0%로 상승하여 오히려 악화되었다. 이는 2001년과 2002년에 무혐의 처리비율이 각각 8.5%와 10.4%에 달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2003년 5월부터 특별세무조사를 폐지하고 조세범칙조사로 대체하면서 조사건수가 크게 증가(2002년 115건, 2003년 172건, 2004년 347건)함에 따라 무혐의 처리비율의 추이는 범칙조사 선정의 유효성에 더욱 큰 의미를 갖는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세무당국은 세무조사 건수당 세액의 변동이 없는 건수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므로 조사대상자 선정 시스템의 유효성을 직접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지표는 생성될 수 없다¹³⁾. 하지만 무시할 수 없는 조세범칙조사의 무혐의 처리비율은 조사 선정시스템의 유효성을 보다 제고할 필요가 있음을 암시한다.

- 10) 조직개편 이후 과거의 세목별 평가요소에 의한 조사대상자 선정방법을 인별로 통합된 평가요소에 의해 조사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조사대상자 선정시스템이 개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2000년 이후 통합세무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건수당 추정액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 11) 또한 경제규모의 확대 또는 물가상승으로도 조사강도와 탈세정도가 동일한 조건하에서 조사건수당 추정액이 증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감안하기 위해 조사건수당 추정액을 명목GDP로 나눈 값들의 추이를 보더라도 조사건수당 추정액은 증가하였다.
- 12) Schneider(2004)는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가 1999년의 27.5%에서 2003년에는 28.8%로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 13) 국제공무원 정원이 아니라 조사공무원의 1인당 추정액은 중장기적으로 감소(97~99 평균=8.0억원 → 00~04 평균=6.5억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세무조사 공무원 1인당 노동생산성은 중장기적으로도 악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때 1997년도와 1998년도 조사공무원 숫자는 통상 업무의 15.2%가 조사업무라는 분석에 기초하여 국제청 정원의 15.2%로 추정되었다.
- 14) 우리 사회의 탈세 분위기와 낮은 조사건수를 고려한다면 세무조사 후 세액변동이 없는 경우는 매우 드물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 조사기능과 관련된 성과지표 추이 (II)



징세와 관련된 성과지표로는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과 총체납액 대비 현금정리 비율 및 국세공무원 1인당 현금체납 정리금액을 사용한다.

3. 징세 측면

국세행정의 또 다른 중요한 업무 중 하나는 국세징수 및 체납정리 등 징세업무이다. 징세분야는 1999년 국세행정개혁 당시 조사 및 서비스분야로의 인력확충에 따라 충분한 인력이 배치되지 못한 분야였다. 그렇지만 1999년 국세행정개혁의 실천목표 중의 하나는 기능별 전문화를 통한 업무효율성 제고이므로 국세행정개혁이 징세분야에서 어떠한 성과를 거두었는지 분석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징세와 관련된 성과지표로는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과 총체납액 대비 현금정리 비율 및 국세공무원 1인당 현금체납 정리금액을 사용한다. 여기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징수기능의 효과성과 정시성을 나타내는 간접적인 지표로 사용하고 있다¹⁵⁾.

-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 = 수납액 / 징수결정액×100
- 총체납액 대비 현금정리 비율 = 현금체납 정리금액 / 총체납액×100
- 국세공무원 1인당 현금체납 정리금액 = 현금체납 정리금액 / 국세공무원 정원

여기서 징수결정액은 환급을 차감한 순징수결정액을 의미한다. 총체납액은 이월된 체납액과 당해연도 체납발생액의 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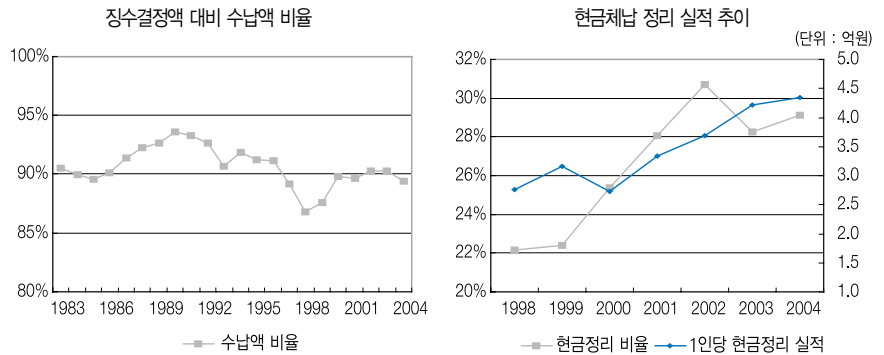
이처럼 정의된 성과지표들의 추이는 다음의 [그림 4]와 같다.

15) 징수결정액의 수납을 제외한 처분 유형으로는 불납결손과 미수납이 있다. 미수납은 납기가 해당 연도를 넘기거나 체납된 경우 등으로 발생한다.



1999년 국세행정개혁은
징세업무의 효율성 증가로
인하여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4] 징세기능과 관련된 성과지표 추이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1999년 87.6%에서 2000년 89.8%로 증가되어 징수 기능의 효과성 및 정시성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총체납액 중 현금정리 비율도 22.4%에서 25.4%로 개선되었으며 국세공무원 1인당 현금정리 규모도 1.69억원에서 1.82억원으로 개선되었다. 따라서 충분한 인력을 배치하지는 못했지만 1999년 국세행정개혁은 징세업무의 효율성 증가로 인하여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의 개혁 전 5년간 평균은 89.2%이고 개혁 후 5년간 평균은 89.9%로 나타나 크게 개선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총체납액 중 현금정리 비율은 개혁 전 5년간 평균이 22.3%이었고, 개혁 후 5년간 평균은 28.3%로 크게 개선되었다¹⁶⁾. 또한 국세공무원 1인당 현금정리 규모도 같은 기간동안에 2.96억원에서 3.66억원으로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서 체납정리 측면에서의 노동생산성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4. 납세서비스 및 납세자 권익보호 측면

1999년 국세행정개혁에서 초점을 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납세서비스 및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이다. 그 결과 납세서비스 인력은 개혁 전 민원실 기준으로 776명에서 개혁 직후 3,392명으로 약 4배나 증가하였고 행정대상으로 보아온 납세자를 고객으로 인식하는 발상의 전환을 모도하였다.

납세서비스 및 권익보호 측면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사용된 성과지표로는 행정소송사건 패소율, 고충민원 처리율 및 시정률, 납세자 만족도¹⁷⁾이다. 이러한 지표들의 산식은 다음과 같다.

16) 체납정리 실적 중 현금정리가 차지하는 비중도 1999년에는 22.4%이었지만 2000년에는 25.4%로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개혁 후 5년간 평균도 28.3%여서 현금정리 비중이 높아지는 바람직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17) 납세자 만족도는 지방국세청이나 세무서의 민원 제기자나 세무조사를 받은 납세자 등을 대상으로 행한 설문조사에 기초한 것으로써 응답에 따른 점수 배점은 매우불만(0점), 불만(16.7점), 약간불만(33.3점), 보통(50점), 약간만족(66.7점), 만족(83.3점), 매우만족(100점)이다. 평가요소에는 환류성(민원처리 진행 상황 및 결과통보, 해결 안되는 원인설명, 대응성(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 및 시정노력), 접근용이성, 신속정확성, 편리성, 형평성, 쾌적성)이 포함된다. 각 평가요소의 가중치는 환류성(31), 대응성(19), 접근용이성(14), 신속정확성(11), 편리성(10), 형평성(8), 쾌적성(7)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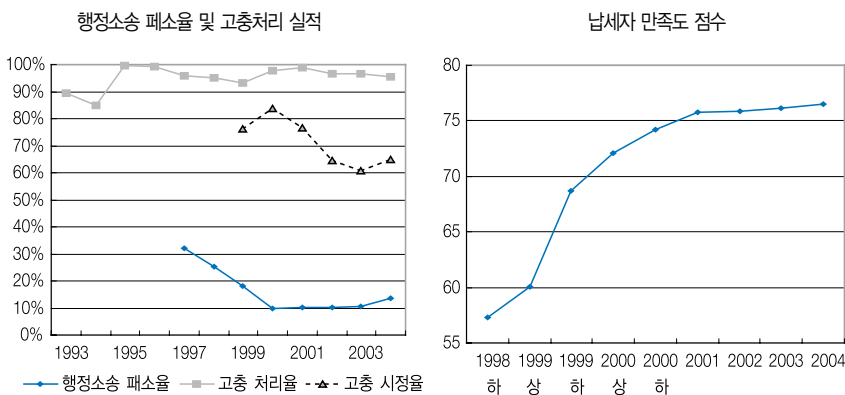
- 행정소송사건 패소율 = 국가 패소건수/종결건수×100
- 고충민원 처리율 = 처리건수 / 요처리건수×100
- 고충민원 시정률 = 시정건수 / 처리건수×100
- 납세자 만족도 = 국민만족도 설문조사 종합만족도 점수

납세서비스 및 권익보호의 연계된 성과지표들은 단기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지만 중장기적으로 개선효과가 미미하거나 오히려 후퇴하는 경향을 보인다.

여기서 국가 패소건수에는 국가 일부패소건수도 포함한다.

이와 같은 성과지표들의 추이는 아래의 [그림 5]와 같다. 행정소송사건의 패소율은 1999년 18%에서 2000년 9.9%로 개혁 전후로 크게 감소하여 세무당국의 부실과세가 줄어들었음을 나타낸다. 한편 고충처리 실적을 보면, 요처리 건수 대비 처리비율은 1999년 93.1%에서 2000년 97.6%로 소폭 증가하였다. 그러나 요처리 건수 자체가 같은 기간동안에 10,274건에서 29,894건으로 약 3배나 증가하여 납세서비스를 강화한 국제행정개혁 이후에 고충민원이 크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처리건수도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처리건수 대비 시정건수의 비율은 1999년 76.1%에서 2000년 83.6%로 증가하였다. 한편 납세자 만족도 점수도 개혁 직전인 1999년 상반기에 60.1점에서 개혁 직후인 1999년 하반기에는 68.7점으로 상승하였다. 이처럼 납세서비스 및 권익보호와 연계된 성과지표들은 단기적으로 개선된 성과를 보여준다.

[그림 5] 납세서비스 및 권익보호와 관련된 성과지표 추이



중장기적인 효과를 보면 행정소송사건 패소율이 2000년부터 2004년까지의 5개년 평균이 10.9%로 개혁 이전보다는 여전히 줄었지만 개혁 이후 그 개선 효과가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고충민원 처리율은 2000년부터 2004년간 평균 97%로 개혁 전



과세미달자 및 결손
자영업자들의 소득과약을
위해 신고의무에 대한 교육 및
홍보와 더불어서 무신고
가산세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5개년 평균 96.5%보다 조금 개선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이러한 개선효과도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고충민원 시정률은 2000년부터 2004년간 평균 70.0%로 개혁연도인 1999년 76.1%보다 감소하였다. 이는 처리된 고충민원 중 시정비율이 2000년을 정점으로 크게 감소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한편 납세자 만족도 점수는 2000년대 이후 70점대를 유지하며 아주 조금씩 상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납세서비스 및 권익보호와 연계된 지표들은 중장기적으로 개선 효과가 미미하거나 오히려 개혁 전보다는 후퇴하는 경향도 보이고 있다.

IV. 결론 및 시사점

국세청은 1999년도에 “제2의 개혁”이라 불리는 대대적인 국세행정개혁을 단행하였지만 이에 대한 평가는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부문의 성과가 민간부문과는 달리 하나의 지표로 측정하기 어렵다는 특징을 반영하여 국세행정의 주요업무(세원관리·조사·징세·납세서비스)에 연계된 다양한 성과지표를 통해 1999년 국세행정개혁의 성과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 및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세원관리와 관련된 3개의 지표는 공통적으로 1999년 국세행정개혁이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의 신고율과 기장신고율의 경우 중장기적으로도 커다란 개선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법인세의 자진납부비율은 중장기적으로 미약하게 개선되었으며 개혁 직후와 비교하면 오히려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신고납부제도로 운영되는 법인세의 자진납부 비율을 더욱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서 비록 종합소득세의 신고율이 개혁 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고 하지만 여전히 50% 대 초반에 머물고 있다. 우리나라는 과세미달자 및 결손이 있는 경우라도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하여 신고를 유인하고 있지만 복식부기의 무자가 아닌 경우 과세 미달에 해당하면 가산세가 0이 되어 신고를 유인할 수단이 없다. 따라서 과세미달자 및 결손 자영업자들의 소득과약을 위해 신고의무에 대한 교육 및 홍보와 더불어서 무신고 가산세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세무조사와 연계된 5개의 지표들은 1999년 국세행정개혁이 조사기능의 확대를 강조하였지만 오히려 후퇴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5개 지표 중 조사건수당 추정액과 조세범칙조사의 무혐의 비율만이 단기적으로 개선된 효과를 보였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조사건수당 추정액과 세무조사의 노동생산성을 나타내는 국세공무원당 추정액만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¹⁸⁾. 그렇지만 세무조사 비율과 세무조사의 지출생산성을 나타내는 징세 행정비 대비 추정액은 단기적일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후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조세법칙조사 무혐의 비율은 단기적으로 개선되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건수당 추정액의 증가는 선정시스템의 개선과 조사강도의 강화에 기인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조사비율의 감소로 인하여 납세자의 탈루성향이 오히려 더 높아짐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도 판단될 수 있다.

제Ⅲ장에서 밝혔듯이 1999년 국세행정개혁 당시 “소수엄선 정밀조사로 파급효과 극대화라는 구호는 성실신고수준이 전반적으로 저조한 우리 실정에는 다소 부적합”하다는 현실 인식하에 조사대상자를 증가시키기 위해 조사분야로 인력을 대폭 충원·배치하였다. 하지만 개혁 이후의 세무조사는 성실신고 유도라는 본래의 기능보다는 다른 정책목표를 위해 사용되는 경향이 강하였다. 그 결과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상당한 탈세가 존재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이는 개혁 당시의 현실 인식 및 처방이 여전히 유효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세무조사 축소와 고의적·지능적 탈세자에 대한 조사 강도 및 처벌 강화를 통해 세무조사의 성실신고 유도효과를 제고하고자 하는 최근의 세무조사 운용방안은 우리의 현실에 아직 적합하지 않다고 본다. 특히 국세청은 조사인력을 감축시키면서 지방청의 조사인력이 비대하여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는데 이는 조사인력을 그 본래의 기능에 맞게 최대한 활용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정치·경제적 목적으로 조사유예 및 조사축소를 행하였기 때문인 것이다. 최근 세계 각국들은 납세자들의 “공격적 조세회피”와 같은 더욱 정교한 탈세노력에 대응하기 위해 조사인력의 전문성 제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조사인력을 축소하고 이를 세원관리(특히 종합부동산세)와 같이 인력충원이 당장 필요한 분야로 배치하여 임시방편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본래의 기능에 보다 충실하게 운영하고 조사인력의 전문성을 더욱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서 조사측면의 1999년 국세행정개혁의 성과를 총체적으로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단일지표는 우리 국민들의 납세순응도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지표들에 대한 국세청의 공식적인 추정치는 아직 없는 실정이다. 국세청은 국세행정의 뚜렷한 목표설정과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도 납세순응도에 대한 추정을 직접 수행하거나 외부 연구단체나 학자가 이러한 지표들을 추정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을 행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2003년 특별세무조사의 폐지와 더불어서 조세포탈에 대한 국민들의 엄정한 처벌 요구는 조세법칙조사의 확대를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무혐의 조사건수 및 비율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국세행정의 신뢰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1999년 국세행정개혁 이후에 중장기적으로 그 이전에 비하여 무혐의

세무조사 축소와 고의적·지능적 탈세자에 대한 조사 강도 및 처벌 강화를 통해 세무조사의 성실신고 유도효과를 제고하고자 하는 최근의 세무조사 운용방안은 우리의 현실에 아직 적합하지 않다고 본다.

18) 하지만 조사공무원의 노동생산성은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행정의 성과를 총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지표인 '지발적인 납세순응도'와 '납세협력 비용'에 대한 추정치를 과세당국이 생성·제공하지 않고 있으므로 세정개혁의 성과를 포괄적으로 평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납세자의 권익이 크게 훼손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조세범칙조사 대상자의 선정시스템 및 고발제도에 대한 점검을 통해 무혐의 건수를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징세분야와 관련된 3개의 지표들은 단기적일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순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중장기적으로 개선된 효과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나서 징수기능의 효과성과 정시성을 보다 제고할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하여 총체납액 대비 현금정리 비율 및 국세공무원 1인당 현금정리 규모는 개혁 후에 지속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총체납 대비 현금정리 비율이 2002년 30.7%를 고점으로 30% 미만이므로 총체납 대비 현금정리 비율을 더욱 제고시킬 여지가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납세서비스 및 납세자 권익보호와 연계된 4개의 성과지표들은 모두 일시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고충민원 시정률의 경우 오히려 악화되었으며, 고충민원 처리율은 개혁 직후를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납세자 만족도 점수의 증가율도 개혁 직후를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이처럼 납세서비스 및 권익보호와 연계된 지표들은 중장기적으로 개선 효과가 미미하거나 오히려 개혁 전보다는 후퇴하는 경향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개혁 직후 가졌던 납세서비스 및 납세자 권익보호 증진노력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지 않은지 또는 납세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한편 납세서비스와 연계된 4개의 지표는 납세서비스와 관련된 국세청 산출물을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국세청의 납세서비스 제공의 성과는 총체적으로 납세협력비용의 감소라는 계량적으로 측정가능한 지표로 나타날 것이다. 그렇지만 국세청이 개별 납세자 유형별 및 전체적인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추정치를 생성·제공하지 않으므로 납세서비스의 개선효과를 포괄적으로 보여줄 지표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KIPF**

참고문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_____, 「세무조사운용방안」, 2005, 2006.

_____, 『1999년 국세행정개혁백서』, 2000.

_____, 『국세청30년사』, 1996.

박노옥, 『공공부문의 성과평가와 경제적 유인의 도입에 관한 연구-성과관리 예산제도

도입에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원, 1997.
 박재완·임주영·현진권, 「공공부문 생산성 지표의 개발과 활용」, 최 광·임주영(편), 『공공부문 생산성 제고를 위한 연구(Ⅱ)』, 한국조세연구원, 1997.
 세동회계법인·앤더슨컨설팅, 『중앙행정기관 경영진단-국세청』, 1999.
 재정경제부, 『결산개요』, 각 연도.

Baker, W. V., "Performance Measurement in Taxation: The Revenue Canada Experience," Performance Measurement Occasional Papers, No. 5, Paris: OECD, 1994.

Bird, R., "Tax Administration and Tax Reform: Reflection on Experience," J. khalilzadeh-Shirazi and Anwar Shah(eds.), *Tax Policy in Developing countries*, Washington D.C., The World Bank, 1991.

Schneider, F., "The Size of the Shadow Economies of 145 Countries all over the World: First Results over the Period 1999 to 2003," IZA DP No. 1431, 2004.

특 집



2007 예산(안)

■ 2007 예산(안)의 주요내용

-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과 국민의 기본적 수요 충족에 중점
노형욱 / 기획예산처 재정총괄과장

■ 2007 예산(안)의 평가 (I)

임주영 /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2007 예산(안)의 평가 (II)

박형수 / 한국조세연구원 재정분석센터장

* 2007년 예산(안)이 발표되었다. 『재정포럼』에서는 정책담당자의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과 이에 대한 평가를 전문가들로부터 들어보는 특집을 마련하였다. <편집자 주>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과 국민의 기본적 수요 충족에 중점



노형욱
기획예산처 재정총괄과장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지난 9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하고 9월 29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내년도 나라살림은 '비전 2030' 및 '06~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등 중장기적인 국가발전전략을 토대로 총액배분 자율편성방식에 따라 마련되었으며, 재정사업 자율평가 및 심층평가 결과 반영 등 성과관리 강화에 따라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이 이루어졌다.

내년도 재정지출 규모는 국내외 경제상황 및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기중립적인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분야별로는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국민의 기본적 수요 충족, 국가안전 확보 등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금년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유지되도록 하였다.

1. 내년도 성장 및 세입 전망

우리 사회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의 출산을 하락과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고 경제가 성숙됨에 따라 성장률이 점차 둔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금년은 하반기 성장세가 다소 둔화될 전망이나, 상반

기 높은 성장에 힘입어 연간 5% 수준의 실질성장이 예상된다. 내년에는 세계경제 둔화, 국제유가 불안, 북핵 문제 등 불확실한 대외 여건을 감안할 때 금년보다 다소 낮은 4.6%의 실질성장(경상으로는 6.7%)이 예상된다.

참고로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한국은행 및 국책연구기관은 4%대 중반으로, IMF와 국제투자은행 및 국내민간연구소는 4%대 초반으로 전망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과 기금을 합한 총수입은 금년보다 7.0% 증가한 251.8조원 수준으로 전망된다. 국세수입은 금년 세입이 양도세와 법인세를 중심으로 당초 전망보다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06년 국세세입 전망대비 7.3% 증가(2006년 예산대비 9.4% 증가)한 148.1조원으로 전망되었다. 세외수입은 주식매각 수입 감소 등으로 금년보다 6.4% 줄어든 19.2조원으로 전망되었다. 그 밖에 기금은 사회보장성기금 수입을 중심으로 6.2% 증가한 84.4조원으로 전망되었다. 이로써 내년도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은 각각 20.6%와 26.4%로 금년도 전망치(20.7%, 26.7%) 보다 다소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도 총수입 규모〉

(단위: 조원)

	'06예산	'07예산안	증감률(%)
총 수입	235.3	251.8	7.0
• 예산 (국세)	155.8 (135.3)	167.3 (148.1)	7.4 (9.4)
• 기금 (사회보장수입)	79.5 (41.2)	84.4 (44.5)	6.2 (8.2)

주: 1) '06 전망 대비로는 7.3% 증가

2. 재정지출 규모 및 세출 구조조정 강화

내년도 재정의 총지출 규모는 금년보다 6.4% 증가한 238.5조원으로 내년도 경성성장을 전망치인 6.7%보다 다소 낮은 수준으로 책정하였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은 7.2% 증가한 164.7조원 규모이고 기금은 4.9% 증가한 73.8조원 규모이다. 내년에는 성장잠재력 확충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중심으로 재정소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내년도 재정지출 규모〉

(단위: 조원)

	'06예산 ¹⁾	'07예산안	증감률(%)
총 지출 ²⁾	224.1	238.5	6.4
• 예산 (일반회계 총계)	153.7 (148.9)	164.7 (158.0)	7.2 (6.1)
• 기금 (사회보장지출)	70.4 (15.2)	73.8 (17.5)	4.9 (15.8)

주: 1) 예산·기금의 지출에서 정부내부지출 및 채무원금상환(보전지출)을 제외
2) 추경예산 기준

내년도 예산안 편성시 정부가 국가가 꼭 해야 할 일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되 이로 인한 국민부담 증가를 줄이

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을 실시하는 등 지출효율화를 적극 추진하였다.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통해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10% 이상 삭감하는 등 내년도 예산과 기금이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 위주로 지원되도록 조정하여 4조 6천억원을 절감하였다. 또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여비·업무추진비 등 행정경비 소요를 줄이는 노력을 강화하였다. 특히 지출소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복지분야에 대해서도 제도개선 노력을 병행하여 효율성이 제고되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의료급여 사업의 경우 과다 이용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등 관리체계를 개선하여 과잉진료를 억제함으로써 연간 1천억원 수준의 국고를 절감하도록 하였다.

〈2007년 예산안 세출구조조정 실적〉

(단위: 조원)

	'06예산	'07예산안
• 구조조정 대상지출	44.8	47.4
• 구조조정 실적	△4.2	△4.6
• 구조조정률(%)	9.3	9.7

3.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전망

정부 재정운영은 미래를 위한 투자,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 필요한 투자 등 국가가 꼭 해야 할 일을 적극 뒷받침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년도 통합재정수지는 GDP대비 1.5% 흑자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대상수지는 GDP대비 △1.5% 적자가 예상되나 2008년부터는 △1% 내외로 안정화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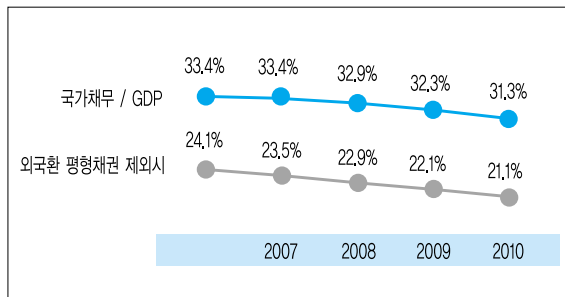
〈통합재정수지 전망〉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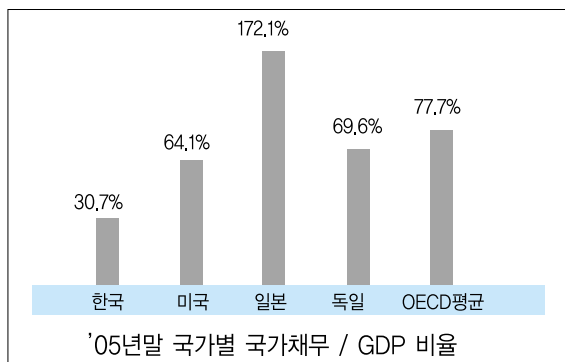
	'06 예산	'07 예산안
• 통합재정수지 (GDP대비, %)	△0.9 ¹⁾ (△0.1)	13.3 (1.5)
• 관리대상수지 (GDP대비, %)	△14.9 (△1.7)	△13.7 (△1.5)

주: 1) 재해추경(2.2조원) 결과 적자가 되었으나, 결산시 흑자 전환 가능성

내년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금년과 동일한 33.4% 수준으로 2008년 이후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며, 일반회계 국채발행 규모는 금년보다 6천억원 줄어든 8.7조원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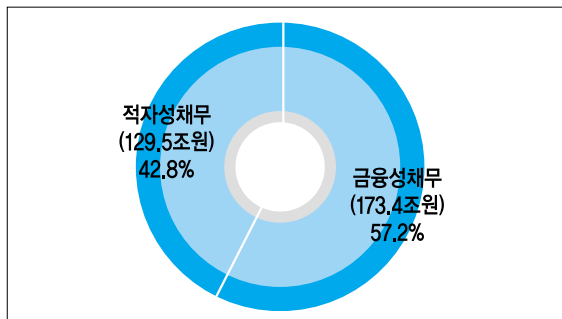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OECD 평균 (2005년, 78%) 과 1992년 EU의 마스트리히트 조약에서의 재정건전성 기준(재정수지는 3% 이내, 국가채무비율은 60% 이내)과 비교해 볼 때 양호한 수준이다.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늘어난 국가채무규모를 분석해 보면 2003년 이후 국가채무 증가의 대부분(78%)은 지난 정부에서 발생한 공적자금의 국채전환(31%, 53조원), 외환시장 안정용 재원조달(41%, 69조원),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국민주택채권 발행(6%, 11조원)에 기인한다. 또한 일반회계 국채 증가분(19%, 33조원) 중 약 7조원은 공적 자금 원리금 상환에, 나머지는 성장동력 확충 등 미래대비 투자에 사용한 것이다.

2007년말 국가채무 전망 302.9조원 중 국민의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는 전체의 42.8% 수준이며, 나머지는 외화자산 등 채권을 보유하고 있어 실질적인 채무라고 보기는 어렵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가채무를 적절한 수준에서 관리하면서 일 잘하는 정부로 만들기 위해 지출 효율성 제고 등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또한 금번에 새로 제정된 국가재정법에 따라 매년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국회에 제출하는 등 국가채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4. 재원배분에 중점

내년 예산안은 미래 성장동력 확충, 국민의 기본적 수요 충족과 국가안전 확보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으며 꼭 해야 할 일은 적극 뒷받침하되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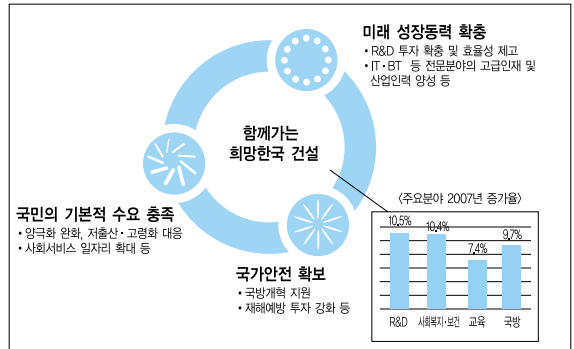
여 중장기적으로 재정의 건전성이 유지되도록 하였다.

첫째, 최근 성장률 하락과 함께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미래 성장동력 확충에 가장 큰 중점을 두어 R&D 투자·인적자원 개발·성장인프라 확충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다. 먼저, R&D 예산은 내년도 예산 중 증가율이 가장 높은 10.5%(8.9억원 → 9.8조원) 수준으로 증액하였다.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 R&D 투자를 대폭 확대(2,679억원 → 3,600억원)하고 핵심부품·소재개발 등 성장동력 확충과 직결되는 핵심기술 분야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신기술 창출의 기반이 되는 기초분야 연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다.

교육투자는 우수 인적자원 양성을 통해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7.4%(28.8억원 → 30.9조원)수준으로 확대하였다.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및 학문후속세대 육성을 위해 제2단계 BK21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하여 대학특성화사업(NURI)을 추진하며, 산학연 협력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최근의 건설경기 부진 등을 감안하여 SOC를 포함한 공공부문 건설투자는 재정, 공기업 투자, BTL·BTO 등을 합하여 금년보다 7% 이상 확대(48.7억원 → 52.3조원)하였다. 이를 통해 서민경제 및 지방 건설경기가 활성화되고 물류비용절감을 통해 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국민의 기본적 수요 충족을 통한 복지과 성장의 선순환구조 형성을 위해 보육·주거·의료 등에 대한 지원을 크게 강화하였다. 저출산·고령화대책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보육료 지원대상을 전체 아동의 50%에서 70%로 확대하고 민간보육시설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 기본보조금 제도를 시범 실시하는 등 보육·육아 예산을 대폭 증액하였다. 또한 사교육 수요를 학교내로 흡수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방과후 학교 사업에 지방비를 포함하여 2천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고령사회 대비를 위해 노인치매 병원, 노인요양시설 등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장애인에 대한 지원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 장애인복지종합대책에 따라 장애수당을 대폭 인상(7 → 13만원)하고, 장애인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신규로 도입함에 따라 2만 2천명의 중증장애인들의 사회참여 기회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수요에 비해 크게 취약하였던 사회서비스 공급도 대폭 확충된다. 저출산·고령화 및 여성의 사회·경제적 활동 확대로 사회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내년부터 가사·간병·보육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사회서비스 공급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시급한 사회서비스 수요의 조기 확충으로 성장잠재력과 복지수준을 동시에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주택 빈곤층 및 영세 서민을 위한 주거안정 지원도 확대하였다. 빈곤층 주거안정 효과가 큰 다가구 매입·전세임대를 6,800호(5,500호 → 12,300호) 확대하고, 저소득층 주거비 경감을 위해 영세민·근로자서민 전세자금 지원도 대폭 증액(1.6조원 → 2.7조원) 하였다.



셋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방·재해예방 등 국가안전 확보를 위한 투자에도 중점을 두었다. 국방비는 국방개혁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9.7%(22.5조원 → 24.7조원, 일반회계 기준) 증액하였다. 병력 위주의 군구조를 첨단 기술군으로 개편하기 위해 F-15K급 전투기, 3000톤급 잠수함 등 핵심전력을 신규로 확보하고 장병들의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병영생활 및 군의료체계 개선사업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재해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재해예방투자도 강화하였다. 산사태 예방효과가 높은 사방사업에 대한 지원을 두 배로 늘리고 하천개수율이 낮은 지방하천·지방소하천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였으며 재해위험지구 정비·기상관측시설 확충 등에 대한 투자도 증액하였다. 이와 함께, 민생치안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과학수사장비를 확충하고 체계적인 예방순찰활동과 신속한 현장출동을 위해 119 순찰차 신속 배치 시스템도 확대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독도경비 및 해양주권 강화를 위해 대형함정 도입 확대, 함정속력 및 무장 보강 등 해양경찰 전력을 크게 증강할 계획이다. 주요 분야별 재원배분은 다음과 같다.

<주요 분야별 재원배분>

(단위: 조원 %)

구 분	'06	'07 안	증감액	증감률
1. R&D	8.9	9.8	0.9	10.5
2. 교 육	28.8	30.9	2.1	7.4
3. 사회복지·보건	56.0	61.8	5.8	10.4
4. 수송·교통·지역개발	18.4	18.2	△0.2	△1.1
('06 재해추경 제외시)	(17.8)		(0.4)	(2.6)
(공공부문 건설투자)	(48.7)	(52.3)	(3.6)	(7.4)
5. 농림·해양수산	15.5	15.9	0.4	2.7
6. 산업·중소기업	12.4	12.5	0.1	0.9
(금융지원 제외시)	(8.4)	(9.1)	(0.7)	(7.4)
7. 환 경	3.8	4.0	0.2	6.4
8. 국 방(일반회계)	22.5	24.7	2.2	9.7
9. 문화·관광	2.8	2.9	0.1	2.6
10. 공공질서·안전	11.0	10.9	△0.1	△1.3
('06 재해추경 제외시)	(10.2)		(0.7)	(7.0)
11. 통일·외교	2.5	2.4	△0.7	△4.0
(경수로사업 제외시)	(2.3)		(0.1)	(4.3)
12. 균형발전(균특)	6.3	6.7	0.4	6.3
13. 정보화 및 통신	7.6	7.8	0.2	2.6

주 : 1. 분야별 재원배분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순계 기준

2. 공공부문 건설투자에는 BTL, BTO, 공기업 투자 등 포함

5. 맺음말

내년도 나라살림은 국가비전과 정책우선순위를 고려해서 전략적으로 재원을 배분하였다.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국민의 기본적 수요 충족에 중점을 두면서 국가채무비율이 금년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여 중장기적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앞으로도 국가채무를 적절한 수준에서 관리하면서 일 잘하는 정부로 만들기 위해 지출 효율성 제고 등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또한 금년에 새로 제정된 국가재정법에 따라 매년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국회에 제출하는 등 국가채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국가적으로 투입하는 재원보다 사업효과가 더 크다는 것이 명확한 경우에만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며, 국민들의 땀방울로 이루어진 나라살림이 한 푼이라도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성과관리제도의 강화, 예산 낭비대응시스템 운영 등을 통해 집행관리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러한 재정당국의 노력과 함께 국민들도 내가 낸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기대한다. **KIPF**

2007년 예산(안)에 대한 평가(I)



임주영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내년도 예산에 대한 정부안이 발표되었다. 해마다 그랬듯이 올해에도 정부예산안을 둘러싼 논란이 적지 않다. 부진한 투자와 소비, 저하된 성장잠재력, 북한 문제와 사회갈등 등 제반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발표된 예산안이 기 때문에 더욱 그러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예산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은 예산당국에 격려의 말을 보내고 싶다. 성장과 복지라는 자못 상충될 수 있는 정책목표를 조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이해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대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정부가 4.6%로 제시한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점이 눈에 띈다. 참여정부 들어서 매년 정부가 제시한 전망치가 실적치보다 컸었던 사실을 감안할 때 정부의 추정기법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경제심리를 부추기기 위해 의도된 과장일 수 있다. 문제는 어느 쪽이든 정부의 공신력에 중대한 손실을 낳는다는 데에 있다. 실제로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미 정부통계는 불신의 대상이 되어버린 지 오래다. 내년과 같이 국내외 여건이 복잡다기하고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 일수록 성장전망은 보수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각

종 국책 및 민간연구소들이 제시하고 있는 전망치와 비교하여 본다면 이는 더욱 자명해진다.

두 번째로, 참여정부하에서는 재정의 경기조절기능을 포기하는 것인지를 묻고 싶다. 물론 참여정부의 출범 초기에 고위공직자가 직접 '인위적인 경기부양은 하지 않겠다'는 점을 공언하였고 그 제약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은 익히 알고 있다. 그러나 수년째 투자와 소비가 극히 부진하고 경기는 곤두박질쳐서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집하는 것은 좀처럼 수긍하기 어렵다.

거시경제이론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재정이 단기적으로 경기부양에 효과를 낸다는 사실은 기초상식에 속한다. 굳이 고급의 합리적 기대가설을 들먹이며 그렇지 않다고 주장한다 해도, 백보 양보하여 재정이 시장에 signaling 효과를 가진다는 점만은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가 침체된 경기상황을 그대로 방치해 두겠다는 signal을 시장에 보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보다 적극적인 재정의 경기대응이 절실한 시점이라는 것에 많은 전문가들이 동감할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로는 국가채무에 관하여 지나치게 재정당국이

안이한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실제 이런 지적을 하면 예산당국의 입장에서는 자못 억울해질 수도 있을 것이다. 또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OECD 평균에 비해서 아직 양호한 수준이라는 항변도 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증가속도에 있다.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재원이 소요될 수밖에 없던 국민의 정부시절에도 국가채무는 7.2%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으나 참여정부 출범 이후 4년 만에 13.9%포인트나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 시사하는 바는 크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인 2004년 처음 적자를 기록하기 시작한 관리대상수지의 경우도 이미 매년 적자를 보고 내년에도 GDP 대비 1.5%의 적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재정계획과 매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국가채무의 축소와 재정적자의 축소 계획도 수차례에 걸쳐 반복되고 있다. 예산당국이 채무의 축소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300조원을 상회하는 채무가 급속도로 커져만 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나라와 같이 전형적인 소규모 개방경제는 외부충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고 재정의 건전성이야말로 마지막 보루라는 점을 새삼 되새겨볼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네 번째로, 부문별 예산의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내년도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로는 복지, 국방 그리고 교육 분야를 들 수 있다. 이들 분야는 증가추세 또한 가장 높아 전년대비 각각 9.1%, 9.0%, 8.1% 증가하여 일반 예산증가율을 크게 상회하는 실정이다.

재정을 운영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복지예산은 경직성 경비에 해당하는 매우 비생산적인 예산이고 교육예산은 가장 비효율적으로 지출되는 예산이라는 데에 문제가 있다. 또한 국방예산의 경우 전시작전통제권 논란 등 불필요한 요인에 의하여 급증하게 되었다는 사실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즉, 세 분야 공히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전체 예산의 50%를 넘는 비중을 차지하는 동 분야의 예산들을 조정하지 않는 한 예산의 효율화는 기대할 수 없게 된다.

복지부문의 경우 빈부격차에 따른 사회적 위화감을 완화하기 위하여 증가되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국가채무와 마찬가지로 지나치게 급속하게 증가되는 점은 문제일 수밖에 없다. 참여정부 출범 직전 41조 6천억원이던 예산이 불과 3년 만에 48.5%나 증가한 것이 단적인 증거이다.

물론 옹호론자들의 경우 '우리의 복지지출이 OECD 국가와 비교할 때 아직 낮은 수준'이라고 또 다시 강변할 것이다. 그러나 선진제국의 경우는 수십년에 걸쳐 도달한 규모가 우리의 경우 불과 몇 년의 초단기 내에 이루어진다면 후유증이 있을 수밖에 없다.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지 못한 나머지 국가채무가 결국 눈덩이처럼 쌓이게 되는 것이다.

개인의 경우와 비교해보면 마치 일정한 수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빚을 내서 외식하고 안락한 생활을 누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된다. 당장은 편안하겠지만 결국은 빚이 부담이 되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기 십상이다. 일반 가계의 도덕적 해이를 문제삼고 계도해야 할 정부가 사실상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셈인 것이다. 가계는 파산하지만 국가는 파산하지 않는다는 차이점은 있어도 결국 일본이 고통받고 있는 재정경직 문제로 발전될 수밖에 없게 됨을 깊이 인지해야 한다. 참여정부의 임기내에 괄목할만한 복지증대를 보여주고 싶은 심정은 이해할 수 있으나 국가의 백년대계를 생각하는 입장에서 복지지출의 증가속도를 완화시킬 시점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교육부문의 경우 문민정부 시절 목적세인 교육세를 부과하여 지출을 비약적으로 증대시킨 이후 지금까지 천문학적인 재원이 투자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상 우리의 교육이 나아지고 개혁되었다는 징후는 어디에서

도 찾아볼 수 없다. 그만큼 비효율적인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비효율적인 지출구조를 개선하고자 하는 어떤 뚜렷한 증거도 없이 동 분야의 예산을 비약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은 재정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국방부문의 경우에도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자주국방과 전시작전통제권의 문제가 계기가 되어 비약적으로 급증했다. 여기서 굳이 정치학적 혹은 이념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싶지는 않다. 단지 재정의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상 불요불급한 주장에 의하여 불필요한 대단위 재정소요가 발생한 것이다. 그리고 이 증가추세가 향후 계속 유지될 전망이고 보면 그만큼 재정의 비효율요인이 커졌다고 말할 수 있다.

내년도 예산에서 경제성장 분야에 배정된 규모와 비중은 복지, 교육, 국방 등의 분야와 극명한 대조를 보여 준다. 정부의 예산안에서는 성장잠재력의 배양을 위하여 R&D 부문에 전년 대비 10.5% 증대된 9.8조원을 배정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R&D 분야는 절대규모가 적기 때문에 실제 증가규모가 크지 않다. 또 정부의 R&D 투자는 민간투자에 비하여 효과도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통적으로 예산이 성장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로의인 SOC 투자와 산업 및 중소기업 투자부문에서의 예산은 전년 대비 1.6%, 0.7% 증가에 그쳐 일반 예산의 증가폭에 절대적으로 못 미치고 있다. 대신 정부는 동 분야들이 민간역할이 강화되어야 할 분야이므로 투자내실화에 중점을 두었다고 강조하고 있다. 투자내실화도 필요한 부분이지만 규모 자체가 사실상 위축된다면 이는 정부의 정책방향이 이미 성장과는 무관하게 간다는 반증이 될 수밖에 없다.

참여정부의 당국자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제 물량으로 SOC 투자를 하던 시대는 지나갔다'고 강변해 왔

었다. 물론 지난 경제개발시기와 같이 대규모의 고속도로, 항만, 철도공사가 설세없이 이루어질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SOC란 문자 그대로 사회의 가장 근본 시설에 대한 투자를 의미한다. 어느 정도 투자가 이루어지면 갑자기 불필요하게 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의미다. 그야말로 사회가 발전할수록 규모가 커질수록 더 많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야만 하는 개념인 것이다. 지난 1980년대 안전화정책 기간 동안의 재정긴축과 투자 중단이 1980년대 말의 SOC 대란을 초래했던 가까운 우리 경험을 비추어보면 잘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예산당국은 복지부문에 예산을 집중하다보니 부족해진 SOC 투자 재원을 보완하기 위하여 BTL사업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듯하다. 이 사업은 민간이 투자한 SOC를 정부가 장기임대하여 수입을 보전해 줌으로써 SOC 투자를 보완한다는 목적으로 운영된다. 장기임대 기간이 끝나면 계약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정부가 다시 구매해주는 것이 보통이다. 그렇다면 결국 현재의 SOC 투자 부담을 미래의 부담으로 전가시킨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논리에 다름아니다.

SOC 투자가 중요성을 가지는 의미는 그것이 건설경기를 진작하여 고용창출효과를 극대화하는 데에 있다. 그렇지 않아도 참여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관련 규제정책이 과다하다 보니 건설경기는 이미 바닥에 내려앉아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정상적인 SOC 투자재원마저 복지 등의 분야로 전용되어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니 체감경기가 이처럼 열악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할 수밖에 없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재정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어 왔다. 그 가운데에는 바람직한 변화도 그렇지 못한 변화도 있다. 그러나 참여정부의 재정운영에서 일관되게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정부개혁의지의 상실이다.

물론 정부혁신위원회를 비롯한 각종 위원회와 주무

부처들의 수준에서 끊임없이 정부혁신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잘 안다. 그러나 어떤 미사여구로 치장한 정부혁신이라 할지라도 정부의 규모, 즉 조직과 인원을 줄이지 못한다면 반쪽 개혁에 지나지 않는다. 1980년대 이후 선진제국을 중심으로 활발히 이루어진 모든 정부개혁의 논의도 결국 그 중심에는 정부의 규모축소(down-sizing)가 자리잡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아직 정부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필요한 인력과 조직을 늘려야 한다는 고위당국자의 발상 때문인지 최근 몇 년 동안 정부의 비대화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그렇다면 다른 정권에서는 그 빠른 사실을 몰라서 공무원 조직과 인력을 억제해 왔을까? 그렇지 않은 것이다. 뻔히 알고 절실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시선이 두려워 억제해 왔다는 것이 진실에 가까울 것이다.

관료기구의 자기 팽창 속성은 재정학과 행정학 교과서에 소개될 정도로 강하다. 한번 감시와 견제가 소홀해지면 아무런 부담없이 조직과 인원이 늘어나도록 되어 있다. 늘어난 조직과 인원은 그만큼 규제를 생산해서 시장에 간섭하게 되고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재정효율을 떨어뜨린다. 여기에 관련된 일화는 너무 많아서 일일이 소개하기 힘든 실정이다.

정부개혁의지의 실증은 관료조직의 팽창으로만 나타나지 않는다. 기존의 세출을 축소하여 새로운 복지재원으로 충당하자'는 견해에 대하여 '줄일 것이 하나도 없다'는 식의 예민한 반응 속에서도 잘 나타난다.

예산이란 그 자체가 정치적 과정의 소산이다. 즉, 정치적 의지가 강하게 작용한다. 기존의 세출을 줄일 것이냐 아니냐는 것도 실상 정치적 결단의 문제이다. 결단이 이루어진다면 줄이는 것은 어디를 어느 정도로 줄일 것이냐의 문제만 남지 줄이는 것 자체는 필연적이 된다. 따라서 결국 최고위 당국자의 의지가 결정하는 것이다.

'하나도 줄일 것이 없다'는 주장은 '열손가락 깨물어

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는 식의 예산항목들에 대한 지극한 애정의 표현인지는 몰라도 재정에 대한 무지의 소산임에 틀림없는 듯하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정부조직을 정비하고 인원의 증가를 억제함과 동시에 기존 세출의 축소작업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중기재정계획과의 연계성에 대한 문제이다. 예산당국도 이미 단년도 예산을 중기재정과 연계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의지를 거듭 천명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에게는 아직도 단년도 예산 따로 중기재정계획 따로 식으로 보여지고 있다.

매년 경제상황이 변하는 만큼 중기재정계획의 매년 수정도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계획이 단기가 아닌 중기를 계획기간으로 하는 이유는 국민에게 한 재정약속의 구체화를 위해서일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수지적자의 문제나 국가채무의 문제에 대하여 불과 일년만에 다른 수치를 내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에게 중기를 걸고 한 약속을 저버린 모습이기 때문이다.

매년 예산안을 둘러싼 논란을 보면서 일반 국민들은 정부의 의지와 그 문제점들을 기늬해볼 수 있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만큼 많은 논쟁과 갈등을 불러오는 경우도 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논란이 고전적인 형태의 것이 아니라 '재정이란 무엇이며 어떤 기능을 하는가'라는 보다 근본적인 것에 대한 논란이기 때문일 것이다. KIPF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평가(Ⅱ)



박형수
한국조세연구원 재정분석센터장

지난 9월 27일 정부가 발표한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크게 보아 금년도 예산에 나타난 재정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2006~2010 국가재정 운용계획', '비전 2030' 등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을 구현한다는 두 축을 중심으로 편성된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내년도 재정정책 기조가 확장적인 것이 아니냐 또는 복지예산 확충으로 인한 과도한 재정적자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내년도 재정정책 기조는 금년과 비교하거나 민간경제에 미치는 영향, 경기상황에의 대응 등 모든 측면에서 중립적이며, 최근 우리나라 재정적자 규모는 중기적으로는 재정건전성을 저해하는 정도는 아니지만 장기적으로는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재정적자 축소 노력이 필요한 수준이다.

우선 내년도 재정정책 기조부터 살펴보자. <표 1>을 보면 총지출 증가율(6.9% → 6.4%), 통합재정수지(GDP 대비 $\Delta 0.1\%$ 공적자금상환 제외시 1.3% → 1.5%), 관리대상수지(GDP대비 $\Delta 1.7\% \rightarrow \Delta 1.5\%$) 등 내년에는 공적자금상환이 없다는 점을 제외하면 내년도 재정지표들이 금년과 거의 동일하다. IMF에서 재정정책 기조 판단을 위해 개발한 재정충격지수(FI, 재정수지에서 경기변

동에 따른 효과를 제거한 후 동 수치가 전년에 비해 얼마나 변동하느냐로 측정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0.18 로 내년도 재정정책 기조가 금년과 거의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부에서는 관리대상수지가 GDP대비 1.5% 적자인 점을 들어 확장적 재정정책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으나,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이 3% 흑자로 통합재정수지 기준으로는 1.5% 흑자다. 최근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 부담의 증가가 가계소비를 위축시키는 주요 요인중 하나로 지목받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관리대상수지와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민간경제에 미치는 재정의 영향을 평가해 보면 중립적이라고 보아야 한다.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4.5% 내외로 잠재성장률(4%대 중·후반)보다 크게 낮아지는 않을 전망이다므로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확대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는 점에서 금년과 동일한 중립적인 재정정책 기조의 유지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내년에도 금년처럼 관리대상수지 적자규모가 GDP대비 1.5%내외, 일반회계 적자보전용 국채발행 규모가 9조원 내외로 재정적자 누적으로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재정수

〈표 1〉 우리나라 재정지표의 추이 및 전망

	2002 (결산)	2003 (결산)	2004 (결산)	2005 (결산)	2006 (추경)	2007 (예산안)	2008	2009	2010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수지 (단위 : 조원)									
일반회계 적자국채	1.9	3.0	2.5	9.0	9.3	8.7	8.5	8.1	7.5
통합재정수지	+22.7	+7.6	+5.2	+5.1	-0.9	+13.3	+15.9	+19.0	+22.1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17.6	+19.6	+21.2	+23.6	+26.0	+27.0	+28.0	+29.3	+31.1
공적자금 원금 상환	0.0	13.0	12.0	12.0	12.0	0.0	0.0	0.0	0.0
관리대상 재정수지	+5.1	+1.0	-4.0	-6.5	-14.9	-13.7	-12.1	-10.3	-9.0
(명목GDP 대비, %)	(+0.74)	(+0.14)	(-0.51)	(-0.81)	(-1.7)	(-1.5)	(-1.2)	(-1.0)	(-0.8)
〈기초재정수지, %〉	〈+1.74〉	〈+1.05〉	〈+0.56〉	〈+0.44〉	〈-0.5〉	〈-0.3〉	〈+0.1〉	〈+0.3〉	〈+0.4〉
재정지출규모 (단위 : 조원, %)									
총지출	-	-	196.9	209.6	224.1	238.5	253.8	269.9	287.0
(증가율)			(-)	(6.4)	(6.9)	(6.4)	(6.4)	(6.3)	(6.3)
일반회계총계 ¹⁾	108.9	117.2	120.1	134.4	148.9	158.0	-	-	-
(증가율)	(10.3)	(7.6)	(2.5)	(11.9)	(10.8)	(6.1)			
통합재정	136.0	164.3	173.5	186.4	209.0	-	-	-	-
(증가율)	(-0.6)	(20.8)	(5.4)	(7.4)	(12.1)				
순융자제외	135.6	166.8	172.1	183.4	203.2	-	-	-	-
(증가율)	(7.0)	(23.0)	(3.2)	(6.6)	(10.8)				
이자지급규모	6.8	6.6	8.3	10.1	10.0	11.1	12.8	13.1	13.7
재정충격지수(FI) (단위 : 명목GDP 대비, %)									
FI	-1.6	0.4	0.7	0.2	1.1 ²⁾	-0.18 ³⁾ 0.05 ⁴⁾	-	-	-

주: 1) 특별회계·기금에 대한 일반회계 전출 이전 총계 2) 2005년 결산 대비 FI임

3) 2006년 추경예산 대비 FI임 4) 2006년 본예산 대비 FI임

자료: 기획예산처 및 저자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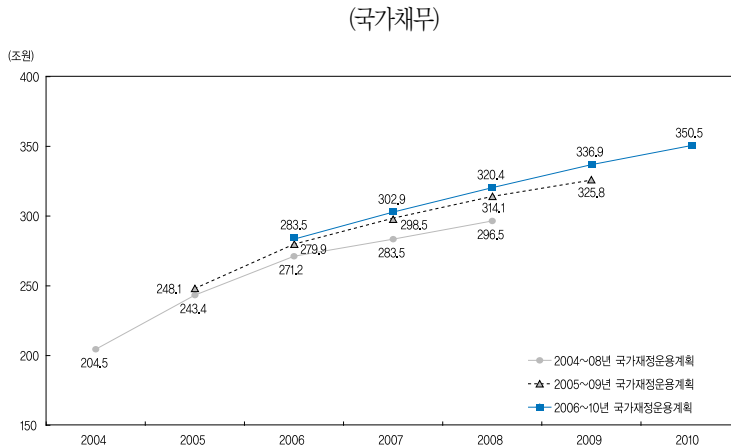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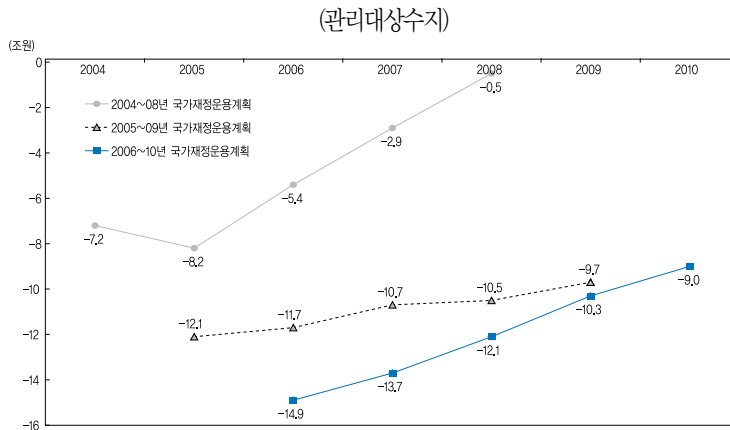
지 적자는 작을수록 좋겠지만 현재 우리 경제·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의 인구구조 변동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고 경기변동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요인에 의해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저성장 국면으로의 진입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는 2016년 이전에 현재의 난국을 타개하고 보다 희망찬 내일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도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나가야 한다. R&D투자, 인적자원 고도화, 신성장산업 육성 등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경제적 안전성과 사회적 이동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등 미래를 위한 투자에는 재정이 소요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노인부양부담 등 다음세대들은 현세대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에 놓이고 정부재정도 지금보다 어려워질 것이 명약관화한 상황에서 재정적자(즉, 국채발행)에 의한 선제적 투자를 마냥 확대할 수만은 없다. 선제적 투자를 하되 그 규모는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로 한정되어야 한다. 국내의 재정학계에서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을 점검하는 거의 유일한 지표가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다. 국채금리가 경제성장률과 동일하다면 기 발행된 국채에 대한 이자부담이 GDP가 증가하는 규모와 동일하므로 기초재정수지(일반적인 재정수지에서 이자지출을 차감한 재정수지)만 균형을 유지한다면 국가부채 비율이 안정화된다. 2007년도 예산안

및 2006~2010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초재정수지는 2007년 0.3% 적자에서 2008년 0.1% 흑자로 전환된 후, 2009년 및 2010년은 0.3% 및 0.4%의 흑자기조를 유지할 전망이다.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 재정의 중기적인 재정건전성은 유지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저성장 및 FTA체결확대에 따른 세입기반 축소, 복지 등 세출소요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재정건전성을 낙관할 수 없는 실정이다.

특히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정추이를 분석해 보면 2004~2008년 계획과 비교할 때 2005~2009년 계획에서는 세입부진으로, 2006~2010년 계획에서는 지출확대로 인해 관리대상수지 목표는 하향조정되고 국가부채 전망치는 상향조정되었다는 사실은 중·단기적으로도 재정건전성에 대한 위협요인이 상존해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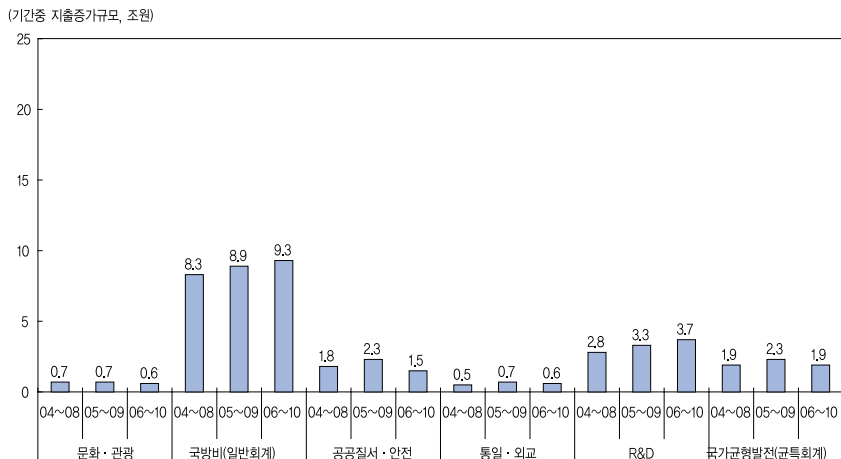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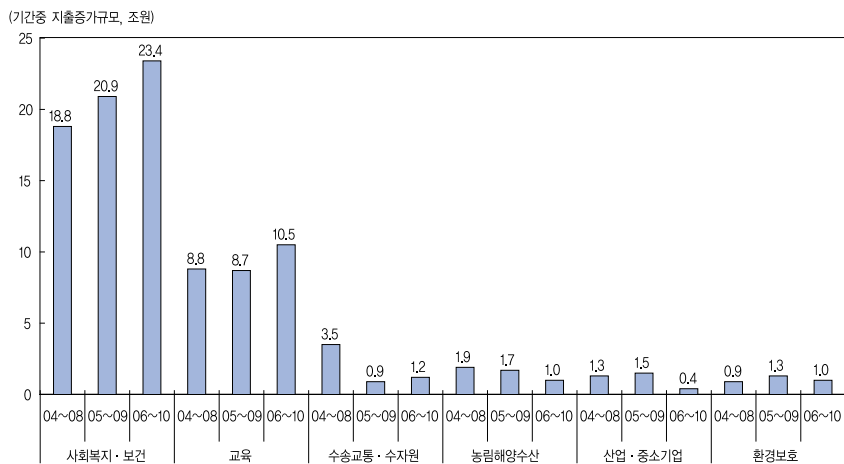
[그림 1]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정추이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7년도 예산안은 그 간 정부에서 발표한 재정정책 기조 및 재정운용 방향과 일 관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한 나라의 예산은 각계 각층의 재정수요를 폭넓게 반영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현 경제·사회상황을 개선시켜 나가고 미래사회를 적극적 으로 대비하는 매우 중요한 정책수단이다. 물론 조세정 책이나 예산편성은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도 있겠

지만 가급적 정치적인 여론몰이는 지양하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에 입각하여 보다 바람직한 재정정책 기조 및 재정운용 방향 설정을 위한 생산적인 논의가 이어지 길 기대해 본다. 특히 [그림 2]에 정리된 정부의 분야별 자원배분 방향에 대해서는 보다 폭넓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KIPF**

[그림 2]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자원배분 계획





제3차 OECD 국제청장회의의 성과와 의미



이승재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1. 서론

40여개 국가의 과세당국 및 국제기구의 대표들이 참석한 제3차 OECD 국제청장회의가 지난 9월 15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OECD 국제청장회의는 30개 OECD 회원국 국세청장과 중국, 인도 등 10여개 비회원국 국세청장, IMF 등 국제기구의 조세전문가가 모여서 각국의 조세행정이 직면한 공통 현안에 대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조세행정의 운영방향을 논의하는 회의로 조세행정분야 최대의 국제행사이다.

제1차 OECD 국제청장회의는 스페인 세비아에서, 제2차 회의는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개최한 바 있다¹⁾. 이번에

서울에서 9월 14~15일 양일에 걸쳐 제3차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는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개최하였으며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한 지 10주년이 되는 해이자 국세청 개청 40주년에 개최하게 되어 더욱 의미가 깊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각국의 대표들은 이번 회의의 매끄러운 운영과 다채로운 한국 문화행사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참석 청장들은 OECD 국제청장회의 출범 이래 처음으로 '서울선언'이라는 가시적 결과물을 도출해 냈다. 특히 이번 '서울선언'의 내용은 우리나라의 문제의식과 입장을 잘 반영하고 있어 각별한 의미가 있다. 이와 같이 우리 세정의 역량과 지위를 한층 높인 이번 회의의 유치경과, 성과와 의미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1) OECD 국제청장회의 연혁

차 수	회의일자	장 소	주요 의제	국세청 발표자료
제 1 차	2004. 1월	스페인 (세비아)	- 조직 내·외 커뮤니케이션 - 외부기관에 대한 세정성과보고	- 한국 국세청의 세정혁신 - 국세청 뉴스레터, 핫라인을 통한 국제청장과의 대화, 전자인사시스템(PMS) 등 납세자 및 직원과의 의사전달체계 개선내용
제 2 차	2005. 6월	아일랜드 (더블린)	- 서비스와 조사의 균형 - 세무대리인 활용방안	-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세정 - 포괄적 부실과세 억제대책 - 세무대리정보 통합관리시스템
제 3 차	2006. 9월	한국 (서울)	- 국제적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국제적 공조 - 효과적인 세정집행을 위한 조직혁신	- 한국 국세행정의 주요 발전동향 - "따뜻한 세정" 추진동향 - 홈택스서비스, 현금영수증제도, 지식관리시스템

2. 제3차 OECD 국제청장회의의 유치 배경

1990년대 말 이후 우리의 세정 환경은 ‘글로벌 경제 시대의 도래’로 함축되는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된다. 무역 의존도가 높았던 우리나라의 경제는 OECD 가입과 IMF 위기를 거치면서 자본시장의 전면 개방과 외환거래의 완전 자유화로 이어졌다. 상장기업의 평균 외국인 지분율은 40%에 달하고 있고, 소위 블루칩의 경우는 50%를 상회하게 되었다. 종래 판매시장 개척 위주로 소수 선진국에 집중하였던 우리 기업들은 저렴하고 우수한 노동력 등 보다 나은 경쟁여건을 찾아 중국, 동남아, 동구, 남미 등 훨씬 많은 국가로 대규모 생산기지 자체를 이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기업의 국제거래는 일상화되고 거래의 성격은 더욱 복잡·다양화되었다. 개인들도 이제는 해외부동산 취득과 같은 국제거래에 나서고 있으며, 날로 편리해지고 확대되는 전자상거래는 이런 추세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세정 환경의 변화로 인해 국제청은 크게 두 가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첫째는 외국의 주주와 과세당국까지 이해관계자가 되어버린 새로운 환경에서 정당한 과세권한을 확실히 지켜내고 우리 해외진출기업을 현지 과세당국의 차별이나 불이익으로부터 보호하는 일이며, 둘째는 납세자에게 사실상 의미가 없어진 ‘국경’이 국가간에는 엄연히 존재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를 과세당국간 협력을 통해 해결해나가는 일이다. 두 가지 도전 모두 우리 국제청이 주요 선진교역국으로부터 역량과 위상을 인정받아 세계 조세행정의 중심무대에 서지 않고는 헤쳐나가기 힘든 도전이다.

제3차 OECD 국제청장회의의 서울 유치를 추진했던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 즉, 국제조세행정의 중심무대에 서기 위한 디딤돌을 마련하기 위해 OECD

국제청장회의를 유치하게 된 것이다. 제3차회의의 개최국 논의와 결정은 지난 해 5월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개최되었던 제2차 OECD 국제청장회의에서 이루어졌다. 다수 회원국이 경합한 가운데 회원국들은 비교적 신규 가입국인 한국을 차기 개최국으로 결정했다. OECD 30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가 비교적 초기에 제3차 회의 유치에 성공한 것은 그간 OECD 주요 회원국과의 조세외교 현장에서 발휘하였던 우리의 역량과 OECD 가입 이후 OECD 회의에서 우리 국제청이 보여준 적극적인 참여와 기여에 대해 회원국이 인정하고 신뢰한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OECD 사무국과의 지속적인 사전접촉을 통한 유치 노력, 제2차 회의 당시 우리대표단의 현지에서의 적극적인 유치 노력, 우리 국제청의 세정혁신에 방향에 대한 내실 있고 지속적인 홍보도 큰 도움이 되었다.

3.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준비과정

국제청은 지난해 제3차 회의 유치 이후 준비과정에서 회의내용을 우리나라에 보다 유익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 의제선정 과정에서부터 OECD 사무국, 주요 회원국과 긴밀히 협의하였다. 특히 우리에게 해결이 절박했던 과제가 의제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효율적인 세정 운영을 위한 조직혁신(Organizational Reforms and Developments)」과 「국제적 조세회피 대처방안(International Enforcement)」이 의제로 선정되었다.

국제청은 2005년 12월 26일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국제조세관리관실 산하에 「OECD 국제청장회의 준비단」을 발족하였다. 준비단은 총괄기획팀과 행사지원팀 총 7명으로 구성, 회의 전반을 총괄하였으며, 국제협력담당관실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회의를 준비하였다. 특히 회의진행방식, 회의 홍보물,



한강유람선 환송만찬 등 회의운영 및 문화행사의 세세한 부분까지 살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였고, 실무준비단은 이를 차질없이 뒷받침하였다. 회의 장소는 회의장 시설 및 규모, 서울 시내와의 접근성, 교통, 쇼핑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소공동 롯데호텔로 정하였다.

각국 대표단의 편의와 공방영접을 위해 2인 1조(50개 팀)로 장·단기 유학경력자 등 외국어능력이 우수한 내부직원을 국가별 수행안내요원(Liaison Officer)으로 지정하여 의전요령, 수행업무 등에 대해 3차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기자간담회 개최, 회의 홈페이지(www.oecdftaseoul.org) 개설, 방송 출연 및 일간지 기고, 전광판 광고, 회의홍보물 제작을 통해 다양하고 입체적인 홍보활동을 펼쳐 회의의 중요성 및 성과를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렸다.

참석자들의 가슴에 우리나라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오래도록 남을 수 있도록 씨티투어, DMZ 방문, 한강유람선 환송만찬 등 다채롭고 의미 있는 문화행사도 준비하였다. 씨티투어는 회의 참석자들에게 아름다운 한국의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DMZ 방문은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의 현실과 최근 우리나라의 남북 화해 및 협력 노력을 회의 참석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었다. 한강유람선 환송만찬에서는 참석자들이 한강의 아름다운 야경을 보며, “한강의 기적”이라 일컫는 한국의 경제발전상을 실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회의의 성과

제3차 OECD 국제청장 회의는 26개 OECD 회원국과 중국, 인도 등 9개 비회원국, IMF 등 5개 국제기구 총 40

개 국가 및 기구에서 104명이 참가하여 역대 OECD 국제청장회의 중 최대 참가자수를 기록하는 명실공히 조세행정 올림픽으로서의 면모를 갖춘 회의였다.

이번 제3차 OECD 국제청장회의는 내용과 의전, 운영 등 모든 면에서 성공적인 회의였다. 이번 회의는 일부 자원봉사자와 공연을 제외하고는 모두 국제청 직원으로 운영되었다. 비용 절감을 위한 방편이기도 했지만, 국제회의를 원만하게 운영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국제청의 인적자원이 그 만큼 우수해졌다는 자신감의 표출이기도 했다. Everson 미국 국제청장, OECD의 Hecklinger 사무차장 및 Owens 국장 등 주요 회의참석자들은 서울회의가 “최고의 회의, 최대의 성과”를 거둔 회의라고 평가하였으며, 일부 회원국들이 한국 다음으로 회의를 유치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용감하다(brave)”하다고 표현할 정도로 이번 회의는 성공적이었다.

이번 회의의 가장 큰 성과는 OECD 국제청장회의 최초로 참가국 만장일치로 「서울선언문(Seoul Declaration)」을 채택한 것이다²⁾. 서울선언은 회의의제인 「효과적인 세정운영을 위한 조직혁신」과 「국제적 조세회피 대처방안」에 대한 참가국 국제청장들의 고민과 해결을 위한 결의와 방안을 담고 있다. 서울선언은 우리 국제청에서 OECD 사무국에 먼저 제안하였고, OECD 사무국과 8월 초 의장으로 취임한 마크 에버슨 미국청장의 지원하에 서울선언의 초안마련 작업이 진행되었다. 특히, 선언초안이 자본수출국의 입장을 대변하여 ‘거주지국 과세권’에 치중하였으나, 우리측이 원천지국 과세회피문제를 제기, 거주지국과 원천지국의 입장을 균형 있게 서술할 수 있도록 관철했다는 점이 매우 의미가 깊다.

2) 서울선언 전문은 OECD 공식 website 참조(www.oecd.org/dataoecd/38/29/37415572.pdf)


서울선언은 일부 해외펀드의 조세조약을 악용한 조세 회피, 다국적기업들의 이전가격조작을 통한 조세회피 등 국제적 조세회피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³⁾. 또한, 일부 펀드, 다국적 기업의 국제적 조세회피에 조력해온 회계·법무법인, 금융기관, 세무상담가(tax advisor)에 대해서도 강한 경고와 함께 억제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대기업 최고경영자의 조세전략에 대한 책임도 강화될 것이다.

서울선언의 또 하나의 내용은 급변하는 조세환경에서 늘어나는 국세청의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조직 개혁에 관한 논의였다. 근로장려세제(EITC), 종합부동산세 시행, 4대 보험 통합징수 등 최근 우리 국세청에 새로운 임무가 부여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서울선언이 향후 OECD 후속 논의에서 기존에 이런 역할의 확대와 강화를 경험한 회원국의 교훈과 지혜를 빌리고 같은 고민을 안고 있는 회원국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으로 서울선언은 OECD 가이드라인을 정하거나, 국제조세행정 주요현안 논의과정에서 많이 인용될 것으로 보인다.

회의 기간중 전근표 국세청장은 Mark Everson 미국 국세청장, Michel Dorais 캐나다 국세청장, OECD의 Richard Hecklinger 사무차장, 사육인 중국 국세청장, 후쿠다 일본 국세청장과 양자회담을 개최하여, 조세분야의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상호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이번

회의가 “조세분야에서의 외교의 장”이 되었으며, 상대국에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요청하여 해외진출 국내기업 보호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이번 회의를 통하여 국세청은 세계 최고 수준의 홈택스서비스(HTS)와 우리 국세청이 세계 최초로 도입한 현금영수증제도를 소개함으로써 우리 세정의 우수함을 전 세계에 알렸다.

5. 결론

이번 제3차 OECD 국제청장 회의의 성공적 개최가 값진 성과임을 자부한다. 국세청은 앞서 열거한 기대와 계획들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OECD의 후속논의 등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할 것이다. 우선, 서울선언의 세부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OECD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① 국세청의 역할 강화에 걸맞은 조직구조 등 개혁문제 ② 국제적 탈세 및 조세회피 대응문제 ③ 조세회피와 탈세를 조장하는 세무대리인 역할 검토 ④ CEO 등의 세무측면에서의 책임을 강조하는 Corporate Governance 보완문제 등 4대 실천 과제를 선정하고 실천과제별 전담반을 구성하여 후속작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국세청은 적극적·체계적 접근을 통해 이번 서울선언의 후속 작업에서 우리나라의 이해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국세청을 신뢰하고 아끼시는 국민의 지속적 성원과 관심을 기대한다. 

3) 서울선언에서는 국제적 조세회피에 대한 효과적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아래 네 가지 분야의 연구 과제를 OECD의 주관 하에 집중적으로 논의하기로 하였다.

- ① 공격적 조세회피 전략의 유형별 사례 수집 및 분석
- ② 조세회피와 부당한 세금축소를 조장하는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상담가(tax advisor), 금융기관 등에 대한 역할 검토와 관련 보고서 원료(2007년 말까지)
- ③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와 관련하여 대기업 최고경영자들이 세금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OECD Corporate Governance Guidelines(2004년판) 增補
- ④ 세무공무원 상호교환 파견 근무 및 국제조세분야의 교육 훈련 강화



서울선언 (Seoul Declaration)

조세행정기관의 발전과 개혁에 관한 지식 공유 및 국제적 조세회피에 대한 대응

OECD FTA(Forum on Tax Administration) 주관 하에 35 개국 국세청장 등 과세당국 대표는 지난 이틀간 대한민국 서울에서 21세기 조세행정기관이 직면한 두 가지 당면과제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경험을 공유하였다.

i) 효과적인 세정 운영을 위한 조직 혁신

국세청에 대한 역할 기대가 높아지고 있으며 우리는 이에 부응하기 위해 조직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조세행정기관의 핵심적 역할은 세법의 효과적 집행이다. 이는 납세자의 권리를 철저히 존중하는 가운데 세법이 규정한 정확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다. 과세당국은 법적으로 징수해야 할 세액과 실제 징수된 세액의 차이를 축소하라는 압력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 이를 위해 과세당국은 효율적으로 세정을 운영하고 납세자에게 고품격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공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세법상 납부해야 할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

각국의 발표로 진행된 토론을 통해 참가국들은 조세행정에 반영해야 할 대내외적 개혁의 동인(動因)을 파악

하였다. 이에는 조세정책의 변화, 세금징수 개선과 서비스 제공의 향상, “적은 자원으로 더 많은 활동의 수행”(doing more with less)을 요구, 새로운 비조세기능(non-tax functions) 담당, 납세자 규제 부담 경감, 세계화 및 기술 발전에 대처, 종사직원의 급속한 노령화에 따른 신규 직원 채용, 정부 서비스 제공의 통합화 경향 (Whole-of-government) 등을 들 수 있다.

이런 모든 변화의 동력을 일관되고 실현가능한 포괄적 개혁 노력으로 집대성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핵심적 과제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였다. OECD 국세청장회의는 경험적 지식을 교환하고 조세행정 성공 사례를 공유하며 과세당국간 실질적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개혁 활동에 일조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참가국은 2006년 10월 포럼의 비교정보 시리즈 최신판의 출간을 환영하였다.

ii) 국제적 조세회피에의 대처

조세부담수준과 구조는 나라마다 다르지만, 고세율 국가이든 저세율 국가이든, 선진국이든 개도국이든 간

에, 모든 참여국은 일단 국내세법이 발효되면 집행해야 한다는 사실에 의견을 같이했다. 그러나 무역·자본 자유화와 통신 기술의 발달로 세계시장이 보다 다양한 납세자들에게 개방됨에 따라 국내세법의 집행은 더욱 어려워졌다. 개방된 경제환경으로 기업과 국제무대는 긍정적인 발전이 있었지만, 이를 악용한 내국·외국 납세자의 조세회피행위도 증가하였다. 국경을 넘나들며 탈세를 시도하는 납세자들에 대해 세법의 효과적인 집행과 불성실 축소를 위한 예방적 조치를 통해 모든 납세자들이 세법에 따라 신고토록 하는 것이 우리 국제청장의 책무이다.

이번 서울회의를 통해 각국은 이러한 ‘국제적 조세회피’가 심각한 문제이며 날로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행위는 명백한 조세포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를 띤다. 예를 들어, 개인의 경우 역외 은행계좌, 투자신탁, 명목회사를 이용해서 과세대상인 자산이나 소득을 은닉하거나 제3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를 통해 은닉한 자산을 사용하였다. 기업들은 특수관계자 거래 가격을 조작하여 소득을 해외에 이전시키기 위해 역외 명목회사를 설립하였다. 금융기관을 포함한 비롯한 일부 다국적 기업의 경우는 조세조약 남용 등 보다 복잡한 국제거래 및 투자구조를 사용하였고, 이전가격을 조작하여 소득은 세율이 낮은 국가로, 비용은 세율이 높은 국가로 인위적으로 배분하는 등 합법적인 절세 방식을 넘어서고 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참가국은 Corporate Governance 문제와 납세불성실 및 허용되지 않는 세금 축소 행태의 조

장과 관련하여 세무조언자, 금융기관 및 기타기관 등의 역할에 대한 우려를 확인하였다. 우리는 또한 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s)로 유입되는 자금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과세당국에 야기될 잠재적인 문제에 대해 주목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도전에 관한 각국의 경험을 공유하였고, 이런 다각적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뿐 아니라 국제적 차원의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였다. 각국 국제청은 자국의 법적, 정치적, 경제적 환경을 고려하여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국가적 차원에서는 다음을 고려해야 한다.

- 조직 및 기능 측면에서 효과적인 세원관리기법을 채용하고, 세무상의 취약분야를 납세자에게 환기시킴
- 조세회피 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국제협력분야에 보다 많은 자원을 투입하여 세법 집행을 강화
- 국제적 조세회피를 전담하는 조직의 운영 필요성 검토
- 조세회피 목적으로 tax shelter의 사용을 조장하는 데 있어 회계법인·로펌, 투자은행 및 기타기관의 역할에 대한 대처
- CEO와 이사회와 같은 대기업 최고 경영자 및 감사위원회에 세금전략에 대한 관심제고 및 책임강화
- 오늘날과 같은 개방적·세계적 환경에서 법집행기관의 당면 현안 해결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처방안 수립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위와 같은 국가적 활동은



아래와 같은 국제적 활동에 의해 보완되어야 한다. OECD 재정위원회(Committee on Fiscal Affairs, CFA)와 국제청장회의(Forum on Tax Administration, FTA)는 국제적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다양한 방안을 연구 중이다.

- 적절한 법률적 수단을 통해 조세 회피 기법을 적발하고 다른 국가에서 사용된 전략의 확산 방지하기 위한 정보의 공유
- 조세조약상 정보교환의 강화, 정보교환에 장애가 되는 실무적 어려움 제거, 필요한 경우 역외 금융센터와의 정보교환 협정 체결
- OECD 이전 가격 가이드라인을 갱신하고 일관되게 적용하여 조세조약 남용 방지를 위한 안전책 마련
- 납세불성실에 대처하기 위해 과세당국과 기타 법집행기관과의 실질적 협력관계의 개선

참가국은 또한 세금납부에 대한 납세자의 인식은 공공재화 및 서비스의 질에 대한 납세자의 평가와 국민과 정부간의 일반적 신뢰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주목하였다.

우리는 국가적, 지역적, 다자간 이니셔티브를 통해 현재의 양자간 조세조약의 틀 속에서 철저히 세법을 집행할 것이며, 필요할 경우, 국제적 조세회피를 적발하기 위

해 새로운 수단을 개발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참가국은 다음과 같은 네가지 분야의 연구과제를 OECD의 주관하에 집중적으로 진행할 것이다.

- (i) 공격적 조세회피 책략의 유형 및 수단을 파악하기 위하여 유형별 사례를 분류하여 수록한다.
- (ii) 납세불성실과 허용되지 않는 세금축소 행태의 확산과 관련하여 로펌, 회계법인, 기타 세무조언자 및 금융기관 등의 세무매개자(tax intermediaries)의 역할을 검토하고 2007년말까지 이에 관한 연구를 완료한다.
- (iii) Corporate Governance와 세금의 상관관계를 환기시키기 위해 OECD Corporate Governance Guidelines (2004년판)을 증보한다.
- (iv) 과세당국간 세무공무원을 상호교환하여 파견근무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국제조세 분야의 교육훈련을 강화한다.

2007년 말 또는 2008년 초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개최되는 차기 회의에서 이러한 선도적 작업의 진행상황에 관해 계속 의견을 교환할 것이다.

끝으로 제3차 OECD 국제청장 회의를 주최한 대한민국 정부에게 감사의 뜻을 표한다.

기 획



2006년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에드먼드 펠프스 교수



금년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로 미국 컬럼비아대학교의 에드먼드 펠프스 교수가 선정되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은 “거시경제 정책의 장기효과와 단기효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넓힌 공로로 펠프스 교수를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로 선정했다”면서 “그의 연구가 경제정책뿐만 아니라 경제학 연구에도 결정적 영향을 주었다”고 수상배경을 밝혔다. 『재정포럼』에서는 그의 생애와 학문세계를 살펴보았다. <편집자 주>

에드먼드 펠프스(Edmund Phelps)의 생애와 학문세계¹⁾

“

펠프스의 분석은 인플레이션과
실업 간에 장기적인 상충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많은 중앙은행에서는
균형실업률에 대한 추정에
바탕을 두고 이자율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분석의 시발점은
바로 펠프스의 연구에 있다고
볼 수 있다.

”



민희철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min@kjpf.re.kr)

인플레이션과 실업 간의 관계,
그리고 현재세대 후생과 미래세대
후생 간의 관계는 거시경제연구 및
거시경제정책의 선택에서 핵심적
인 이슈이다.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을 모두 낮추기 위해서는 어떠한 재
정정책 및 통화정책을 실행하여야
하는가? 또 미래세대의 후생을 높
이기 위해서 현재세대는 얼마나 저
축을 하여야 하는가? 바로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한 공로를 인정받아
서 2006년 노벨경제학상은 미국 컬
럼비아 대학교의 에드먼드 펠프스
교수에게 돌아갔다.

펠프스는 1933년 대공황이 한창
진행중이던 시기에 시카고에서 광
고업에 종사하였던 아버지와 영양
사로 근무하던 어머니 사이에서 태
어났다. 대공황으로 인해 한때 부모
가 모두 직장을 잃게 되었으나, 그
의 아버지가 1939년에 뉴욕에 직장
을 구하게 되어 가족 모두 시카고를

떠나서, 허드슨 강 주변의 헤스팅스
라는 조용한 외곽에 정착하게 되었
다. 어려서부터 유치원과 학교에서
뛰어난 재능을 보여준 그에 대해 부
모는 장래에 학문적 연구자가 될 것
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였다고 전
해진다. 그러나 정작 펠프스 자신은
대학에 입학하기 전까지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에 그다지 흥미를 느끼
지 못하였다. 대신 매일 저녁 아버
지가 가져오는 신문을 읽는 것으로
학교 수업에 따분함을 느낀 그의 지
적인 욕구 및 상상력을 충족하였다.
또한 저녁식사중에 금융·경제관
련 뉴스에 대해 (또한 역시 경제학
전공자였던) 아버지와 토론하는 것
을 좋아하였다.

펠프스가 본격적으로 경제학에
매료되기 시작한 것은 앰허스트 칼
리지(Amherst College)에 입학하
면서부터이다. 전공에 대한 특별한
선호가 없었던 그 당시 펠프스는 플
라톤, 흄, 제임스 등 철학자들의 저

1) 펠프스의 학문적 업적에 관한 부분은 노벨상위원회에서 발표한 "Edmund Phelps's Contributions to Macroeconomics"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펠프스의 생애에 관한 부분은 "A Life In Economics", The Makers of Modern Economics, Volume II (ed. Arnold Heerje)를 참고하였다.

작에 흠뻑 매료되었는데, 아들의 장래를 걱정한 아버지의 만류로 경제학 수업을 처음 듣게 되었다고 한다. 당시 앰허스트 칼리지의 경제학 과정은 제임스 넬슨(James Nelson)과 아놀드 콜러리(Arnold Collely) 등의 강의로 이루어졌는데, 펠프스는 신문에서 읽은 주제에 대해 엄격한 분석의 도구를 얻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 무척이나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한다. 또한 그의 회상에 따르면 이미 학부 과정에서부터 그 당시의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의 내용이 잘 연결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러한 문제의식이 이후 거시경제학의 미시적 기초에 대한 그의 연구를 이루는 밑거름이 되었을 것이다.

학부 졸업 이후 예일대학교에서 대학원 과정을 시작하게 된 그는 제임스 토빈(James Tobin)과 토마스 셸링(Thomas Schelling)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으며 경제학 연구를 시작하였다. 당시의 펠프스는 두 경제학자의 수업방식의 명확성, 매우 어려운 주제를 쉽게 풀어내는 능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특히 토빈은 펠프스의 학위논문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펠프스의 연구 성과가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그가 예일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 랜드(RAND)연구소를 거쳐 코울즈 재단(Cowles Foundation)에서 연구하기 시작한 후의 일인데, 이 기간에 저축에 관한 황금률(Golden Rule)에 대한 연구를 비롯하여 경제성장률에 대한 연구 결과가 많은 경제학자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기대반영 필립스곡선(expectation-augmented Phillips curve)으로 알려진 인플레이션과 실업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1966년 펜실베이니아 대학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서부터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그 이후 1971년에는 뉴욕의 컬럼비아 대학에 초빙되었으며, 1982년에는 맥빅카 정치경제학 교수(McVickar Professor of Political Economy)로 선정되었다. 2001년에는 그 동안의 업적에 대한 인

정을 받아 기념논문집이 출간되었다.

펠프스의 경제학 연구 업적은 무엇보다 실업 및 인플레이션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이해에 획기적인 기여를 한 것에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의 거시경제학은 케인지언(Keynesian)의 견해가 압도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이에 따르면 완전고용과 가격 안정의 달성이라는 목표 사이에는 충돌이 없어서, 적어도 경제가 완전고용에 도달하기 이전에는 총수요의 증가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초래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한편 이른바 필립스 곡선으로 알려진 인플레이션 사이에 안정적인 음(-)의 관계가 주장되면서, 표준적인 케인지언 견해도 수정이 가해져서 총수요 정책으로 인해 고용이 증가하는 것은 맞으나, 높은 인플레이션을 발생하는 것을 그 대가로 한다는 견해로 이어졌다. 따라서 필립스 곡선은 정책담당자에게 일종의 메뉴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여지게 되었다. 즉, 정책담당자의 선호에 따라서 인플레이션과 실업 또는 그 둘의 적절한 조합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에는 크게 세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하나는 인플레이션과 실업 간의 안정적인 음(-)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미시경제학적인 기초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는 필립스곡선이 본래 통계적인 상관관계에 기초하여 제안된 것으로 애초에 확고한 이론적 기반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데서 기인한다. 다음 문제점은 높은 인플레이션을 허용할 경우 높은 수준의 고용을 항구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함의가 존재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견해는 장기에 있어서 경제의 실질변수는 명목변수가 아닌 실질적인 변수들에 의해 결정된다는 경제이론의 일반적인 결과와 상충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완전고용에서도 없어지지 않는 실업, 이른바 '마찰적' 실업의 결정요인에 대해서 아무런 이론적 바탕이 없다는 점이었다.

1960년대 후반부터 이어진 펠프스의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기업의 임금 및 가격 결정 행동을 명시적으로 모형화함으로써 해결하려고 하였다. 펠프스는 경제주체의 기대를 분석의 전면에 내세우고, 기대된 인플레이션과 기대되지 않은 인플레이션간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 이로부터 유도되는 거시경제적 함의를 연구하였다. 이것이 바로 기대반영 필립스곡선인데, 이를 통해서 펠프스는 실업과 관련된 것은 인플레이션 그 자체가 아니라 실제 인플레이션과 기대 인플레이션의 차이, 즉 기대되지 않은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그런데 실제 인플레이션과 기대 인플레이션이 차이를 항구적으로 유지하면서 고용을 높인다는 것은 실현하기 매우 힘든 것으로서 이는 경제주체의 합리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펠프스의 노벨상 수상을 적극적으로 옹호하였던 하버드 대학의 필립 애기온 (Philippe Aghion)은 논리적으로 보아 펠프스가 이미 지난 1996년에 로버트 루카스 (Robert Lucas)와 같이 노벨상을 수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아마도 경제주체의 기대 형성에서 합리성이 갖는 의미에 대한 공로에 대한 인정이라는 측면에서 루카스의 연구와 펠프스의 연구가 맥을 같이한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펠프스의 분석은 인플레이션과 실업 간에 장기적인 상충관계(trade off)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대반영 필립스곡선은 균형 실업률에서 수직으로 그어진 직선을 의미하게 되며, 실업과 인플레이션 간의 대체를 의미하는 우하향의 일반적인 필립스곡선과 큰 차이를 지닌다. 현재 많은 중앙은행에서는 균형 실업률(equilibrium unemployment rate)에 대한 추정치에 바탕을 두고 이자율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분석의 시발점은 바로 펠프스의 연구에 있다고 볼 수 있다²⁾.

펠프스가 큰 기여를 이룬 또 다른 분야로는 자본축적과 경제성장에 관한 이론 분야이다. 1950년대 후반 및 1960년대 초반에 걸쳐 미국에서는 저축률이 지나치게 낮다는 견해가 대두되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사회가 현재세대의 소비와 미래세대의 소비를 어떻게 배분하여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있다. 펠프스는 이 문제에 접근하는 기준으로서 세대간의 형평성을 강조하고, 이에 따라 최적의 자본축적을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펠프스의 1961년 논문은 자본축적의 황금률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솔로우-스완(Solow-Swan) 신고전파 성장모형을 이용하여 정상상태(steady state), 즉 1인당 자본과 소비가 모두 일정한 상태 중에서 1인당 소비를 최대화하는 저축률을 찾으려고 시도하였다. 여기서 황금률이라는 용어는 세대간의 상호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성장모형의 맥락에서는 세대에 걸쳐서 저축률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이 바로 남과 자기 자신을 똑같이 대접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펠프스가 보여준 것은 최고의 소비를 보여주는 정상상태가 바로 황금률에 의해서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저축률과 명목소득 중 자본의 비중이 같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또한 황금률 수준보다 높은 저축률은 세대별 소비자의 효용이 어떻게 정의되는가에 관계없이 어느 세대에 계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를 동태적인 비효율성(dynamic inefficiency)이라고 부를 수 있다. 동태적 비효율성이란 개념은 이후에 현대적인 경제성장이론에서 표준적인 개념으로 이미 자리잡았는데, 엄밀하게 말하자면, 저축의 경로를 바꾸어서 다른 세대

2) 인플레이션 및 실업 이론에 대한 펠프스의 가장 중요한 기여는 "Phillips Curves, Expectations of Inflation and Optimal Unemployment over Time," *Economica*, Vol. 34, 1967; "Money-Wage Dynamics and Labor-Market Equilibrium,"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76, 1968에서 찾을 수 있다.

의 소비수준을 낮추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한 세대의 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동태적으로 비효율적인 상태란 달리 말하면 저축이 너무 지나치게 이루어져 자본이 과잉축적된 상태를 의미하는데, 이는 자원이 낭비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실패의 극단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펠프스의 연구는 바로 장기적인 저축률이 황금률보다 높은 경우 동태적 비효율성이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이를 펠프스-쿠프만 동태적 비효율성(Phelps-Koopman dynamic inefficiency)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결론은 소비자의 효용함수에 무관하게 성립하는 것으로서 황금률 저축수준이 바람직한 저축률의 상한값임을 의미한다.

펠프스는 인플레이션과 실업에 관한 이론, 그리고 자본축적에 대한 이론 이외에 노동경제학과 재정학에도 기여를 하였다. 그 중 하나는 통계적 차별(statistical discrimination)에 관한 것으로서 고용주가 개별 근로자의 생산성에 대해 불완전한 정보만을 가지는 경우, 예를 들어 생산성 측정에 오차가 발생하는 경우, 그 개인이 속한 그룹의 평균적인 생산성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개인의 생산성에 대한 예측의 정확성을 높여준다는 것이다. 따라서 같은 생산성을 지닌 근로자들이 서로 다른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근로소득에 대한 최적과세에 관한 연구도 있는데, 그의 분석의 놀라운 결론은 소득분배의 최상위층에 대해서는 한계세율이 0에 접근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이 결론은 이후에 사드카(Sadka)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비슷한 연구가 이루어져서 '펠프스-사드카 결과'라고 부르기도 한다.

대표적인 저서는 아래와 같다.

- 『고용과 인플레이션 이론의 미시적 근거』 (Microeconomic foundations of Employment and Inflation Theory; Norton, 1970).
- 『구조적 불황: 실업, 이자율, 자산에 관한 현대적 균형 이론』 (Structural Slumps: The Modern

Equilibrium Theory of Unemployment, Interest and Assets; Harvard 1994).

- 『경제성장을 향한 재정적 중립성』 (Fiscal Neutrality toward Economic Growth; McGraw-Hill 1965)
- 『경제성장의 황금률』 (Golden Rules of Economic Growth; Norton 1966) **KIPF**

OECD의 『Revenue Statistics』 (2006년판) 발간

— 다수 OECD 회원국, 세입비중 증대

한국조세연구원 재정연구실 재정분석센터

- OECD가 10월 11일자로 발간한 통계보고서에 따르면 큰 폭의 감세에도 불구하고 최근 많은 OECD국가에서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이 증가
 - 이는 경제성장에 따른 기업이윤 증대 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기업이윤 증대가 과세기반 확대·납세성실도 제고를 통해 감세효과를 상쇄시킨 것으로 보임
- (조세부담률) *Revenue Statistics* 2006년판에 따르면 OECD 25개국 가운데 19개국의 2005년(잠정) 조세부담률이 증가했으며, 감소한 국가는 5개국에 불과함(〈표 1〉 참조)
 - 가장 큰 폭의 증가를 보인 나라는 아이슬란드로 3.5%p 증가하였으며, 다음은 2.3%p, 1.5%p의 증가를 보인 네덜란드와 노르웨이 순임
 - 2005년 조세부담률 : 아이슬란드 39.0%, 네덜란드 26.0%, 노르웨이 36.0%
 - 가장 큰 폭의 감소를 보인 나라는 헝가리로 1.2%p 감소하여 2005년 조세부담률이 25.4%를 기록했음
 - 우리나라도 조세부담률이 19.5%에서 20.2%로 0.7%p 증가
- (국민부담률) OECD 24개국 가운데 17개국의 2005년(잠정) 국민부담률이 증가했으며, 감소한 국가는 5개국에 불과함(〈표 2〉 참조)
 - 가장 큰 폭의 증가를 보인 나라는 아이슬란드로 3.7%p 증가하였으며, 다음은 1.3%p, 1.2%p의 증가를 보인 미국과 영국 순임
 - 2005년 국민부담률 : 아이슬란드 42.4%, 미국 26.8%, 영국 37.2%
 - 가장 큰 폭의 감소를 보인 나라는 헝가리로 1%p 감소하여 2005년 국민부담률이 37.1%를 기록했음
 - 우리나라도 국민부담률이 24.6%에서 25.6%로 1.0%p 증가
- 2004년 및 2005년의 통계를 보면 2000~2003년까지의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인하 추세가 반전되고 있음
 - 2000~2003년 기간중에는 OECD 평균 조세부담률이 27.5%에서 26.3%로 하락했으나, 2004년에는 26.5%로 소폭 상승
 - OECD 평균 국민부담률도 2000~2003년 기간중에는 36.6%에서 35.8%로 하락했으나, 2004년에는 35.9%로 소폭 상승



- 소득세(법인세 및 개인소득세)의 세수 증대가 아이슬란드, 미국, 영국의 2005년 국민부담률 증대의 주된 요인임(〈표 3〉 참조)
 - 아이슬란드 국민부담률 증대의 추가적인 요인은 소비세 및 관세 수입 증대
 - 반면 헝가리 국민부담률 감소는 주로 소비세 및 관세 수입 감소에 기인함

- [그림 1]을 보면 OECD국가들의 각 세목에 대한 의존도는 국가마다 상이
 - 많은 OECD국가들의 주된 세원 중 하나는 개인소득과 기업이윤에 대한 과세이지만, 사회보장기여금과 소비과세 또한 주요한 역할을 차지
 - 예를 들어, 뉴질랜드의 단일 최대 세원은 소득세인 반면 체코슬로바키아는 사회보장기여금, 멕시코는 소비과세 및 관세가 최대 세원임

- 최근의 소득세 세수증대(소득세 및 법인소득세 모두 증대)는 많은 OECD국가들의 법정 법인세율과 개인소득세율이 변동하기 않거나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났음
 - 2005년 가장 큰 국민부담률 증대를 보인 3개국(아이슬란드, 미국, 영국) 중 어디에서도 개인소득세율이나 법인세율 증대는 나타나지 않았음

- 이는 국민부담률 증대가 이들 국가, 더 일반적으로는 OECD국 전체의 경제성장 강화의 결과임을 말해줌
 - 경제성장이 기업이윤과 개인소득을 증대시켰으며, 이는 법인과 개인이 납부하는 세액의 증대를 가져왔음



〈표 1〉 OECD국가의 조세부담률 추이

(단위: %)

	1965	1975	1985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0년 대비
AUSTRALIA	20.8	25.8	28.2	28.8	31.1	29.6	30.5	30.7	31.2	-	0.1
AUSTRIA	25.5	26.6	27.9	26.3	28.0	30.0	29.2	28.4	28.2	27.5	0.2
BELGIUM	21.3	27.6	30.4	29.3	31.0	30.7	30.6	30.3	30.9	31.5	-0.1
CANADA	24.3	28.8	28.1	30.6	30.7	29.7	28.5	28.3	28.4	28.6	-2.3
CZECH	-	-	-	22.0	20.1	20.3	20.6	21.2	22.2	22.1	2.1
DENMARK	28.3	38.8	44.8	47.7	47.6	46.7	46.6	46.5	47.6	48.6	0.0
FINLAND	28.3	29.2	31.1	31.5	35.7	33.4	33.5	32.7	32.3	32.4	-3.4
FRANCE	22.7	21.1	24.1	24.5	28.4	28.0	27.3	26.8	27.3	28.0	-1.1
GERMANY	23.1	23.3	23.6	22.7	22.7	21.7	21.1	21.1	20.6	20.8	-2.1
GREECE	13.3	15.0	18.0	21.4	25.8	24.5	24.6	23.3	22.9	-	-2.9
HUNGARY	-	-	-	27.1	27.3	27.2	26.8	26.5	26.6	25.4	-0.7
ICELAND	24.1	29.2	27.5	28.7	35.3	33.6	33.4	34.5	35.5	39.0	0.2
IRELAND	23.3	24.7	29.5	27.8	27.5	25.2	23.9	24.5	25.6	26.0	-1.9
ITALY	16.8	13.8	21.9	27.5	30.2	30.0	29.2	29.4	28.6	28.4	-1.6
JAPAN	14.2	14.8	19.1	17.9	17.6	17.4	16.2	15.8	16.4	-	-1.2
KOREA	-	15.0	16.2	18.0	19.7	19.7	19.8	20.4	19.5	20.2	-0.2
LUXEMBOURG	18.8	23.2	29.2	27.2	29.1	28.7	28.2	27.4	27.1	27.0	-2.0
MEXICO	-	-	15.1	13.9	15.5	15.6	14.9	15.8	15.9	16.2	0.4
NETHERLANDS	22.7	24.4	22.8	23.3	24.1	24.4	24.2	23.6	23.7	26.0	-0.4
NEW ZEALAND	24.0	28.5	31.1	36.6	33.6	33.0	34.6	34.4	35.6	36.6	2.0
NORWAY	26.1	29.5	34.1	31.4	34.0	34.0	33.7	33.1	34.5	36.0	0.5
POLAND	-	-	-	25.7	23.0	22.7	24.1	20.4	20.4	-	-2.6
PORTUGAL	12.3	12.9	18.7	22.2	23.8	23.3	23.7	23.9	23.5	-	-0.3
SLOVAK	-	-	-	-	19.9	18.8	19.1	18.5	18.4	18.4	-1.5
SPAIN	10.5	9.6	16.0	20.5	22.3	21.7	22.2	22.2	22.7	23.8	0.4
SWEDEN	30.8	33.5	35.9	34.8	38.7	36.2	34.7	35.5	36.1	36.8	-2.6
SWITZERLAND	14.9	19.1	20.2	20.3	23.1	22.4	22.4	21.9	22.1	22.9	-1.0
TURKEY	10.0	14.5	13.2	19.9	26.2	27.5	25.0	26.0	23.8	25.1	-2.4
U K	25.7	29.1	31.0	28.8	30.9	30.7	29.5	28.9	29.2	30.2	-1.7
U S A	21.4	20.4	19.2	21.0	23.0	21.8	19.6	18.9	18.8	20.2	-4.2
OECD TOTAL	20.9	23.1	25.2	26.1	27.5	27.0	26.6	26.3	26.5	-	-1.0
OECD AMERICA	22.8	24.6	20.8	21.8	23.1	22.4	21.0	21.0	21.0	21.6	-2.1
OECD PACIFIC	19.7	21.1	23.7	25.3	25.4	24.9	25.2	25.3	25.6	-	0.2
OECD EUROPE	21.0	23.4	26.3	26.9	28.5	27.9	27.6	27.3	27.4	-	-1.1
E U (15)	21.6	23.5	27.0	27.7	29.7	29.0	28.6	28.3	28.4	-	-1.3
E U (19)	21.6	23.5	27.0	27.2	28.3	27.6	27.3	26.9	27.1	-	-1.2



〈표 2〉 OECD국가의 국민부담률 추이

(단위: %)

	1965	1975	1985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0년 대비
AUSTRALIA	20.8	25.8	28.2	28.8	31.1	29.6	30.5	30.7	31.2	-	0.1
AUSTRIA	33.9	36.7	40.9	41.1	42.6	44.6	43.7	42.9	42.6	41.9	0.0
BELGIUM	31.1	39.5	44.4	43.6	44.9	44.9	45.0	44.7	45.0	45.4	0.1
CANADA	25.7	32.0	32.5	35.6	35.6	34.8	33.7	33.6	33.5	33.5	-2.1
CZECH	-	-	-	37.5	36.0	36.2	37.0	37.6	38.4	38.5	2.4
DENMARK	29.9	39.3	46.5	48.8	49.4	48.4	47.8	47.7	48.8	49.7	-0.6
FINLAND	30.4	36.7	39.9	45.6	47.7	45.7	45.6	44.6	44.2	44.5	-3.5
FRANCE	34.5	35.5	42.4	42.9	44.4	44.0	43.4	43.1	43.4	44.3	-1.0
GERMANY	31.6	35.3	37.2	37.2	37.2	36.1	35.4	35.5	34.7	34.7	-2.5
GREECE	19.5	21.3	28.0	31.7	37.3	36.2	37.2	36.3	35.0	-	-2.3
HUNGARY	-	-	-	42.1	38.7	38.7	38.4	38.1	38.1	37.1	-0.6
ICELAND	26.2	30.0	28.2	31.2	38.3	36.5	36.4	37.8	38.7	42.4	0.4
IRELAND	24.9	28.7	34.6	32.5	31.7	29.5	28.1	28.7	30.1	30.5	-1.6
ITALY	25.5	25.4	33.6	40.1	42.3	42.0	41.4	41.8	41.1	41.0	-1.2
JAPAN	18.2	20.9	27.4	26.9	27.1	27.3	26.2	25.7	26.4	-	-0.7
KOREA	-	15.1	16.4	19.4	23.6	24.1	24.4	25.3	24.6	25.6	1.0
LUXEMBOURG	27.7	32.8	39.5	37.0	39.1	39.6	39.0	38.2	37.8	37.6	-1.3
MEXICO	-	-	17.0	16.7	18.5	18.8	18.1	19.0	19.0	19.3	0.5
NETHERLANDS	32.8	39.6	41.0	40.2	39.5	38.2	37.5	37.0	37.5	39.4	-2.0
NEW ZEALAND	24.0	28.5	31.1	36.6	33.6	33.0	34.6	34.4	35.6	36.6	2.0
NORWAY	29.6	39.3	43.0	41.1	43.0	43.2	43.6	42.9	44.0	45.0	1.0
POLAND	-	-	-	37.0	32.5	34.4	35.5	34.9	34.4	-	1.9
PORTUGAL	15.8	19.7	25.2	31.7	34.1	33.8	34.5	35.0	34.5	-	0.4
SLOVAK	-	-	-	-	33.1	32.1	32.4	31.2	30.3	29.4	-2.8
SPAIN	14.7	18.4	27.2	32.1	34.2	33.8	34.2	34.3	34.8	35.8	0.6
SWEDEN	35.0	41.6	47.8	48.1	53.4	51.3	49.7	50.1	50.4	51.1	-3.0
SWITZERLAND	17.5	24.5	26.1	27.8	30.5	30.1	30.1	29.4	29.2	30.0	-1.3
TURKEY	10.6	16.0	15.4	22.6	32.3	35.1	31.1	32.8	31.3	32.3	-1.0
U K	30.4	35.3	37.7	35.0	37.2	37.0	35.5	35.4	36.0	37.2	-1.2
U S A	24.7	25.6	25.6	27.9	29.9	28.8	26.5	25.7	25.5	26.8	-4.4
OECD TOTAL	25.6	29.7	32.9	35.1	36.6	36.3	35.9	35.8	35.9	-	-0.7
OECD AMERICA	25.2	28.8	25.0	26.7	28.0	27.5	26.1	26.1	26.0	26.5	-2.0
OECD PACIFIC	21.0	22.6	25.8	27.9	28.8	28.5	28.9	29.0	29.4	-	0.6
OECD EUROPE	26.4	31.3	35.7	37.6	39.1	38.8	38.4	38.3	38.3	-	-0.8
E U (15)	27.9	32.4	37.7	39.2	41.0	40.3	39.9	39.7	39.7	-	-1.3
E U (19)	27.9	32.4	37.7	39.1	39.8	39.3	39.0	38.8	38.8	-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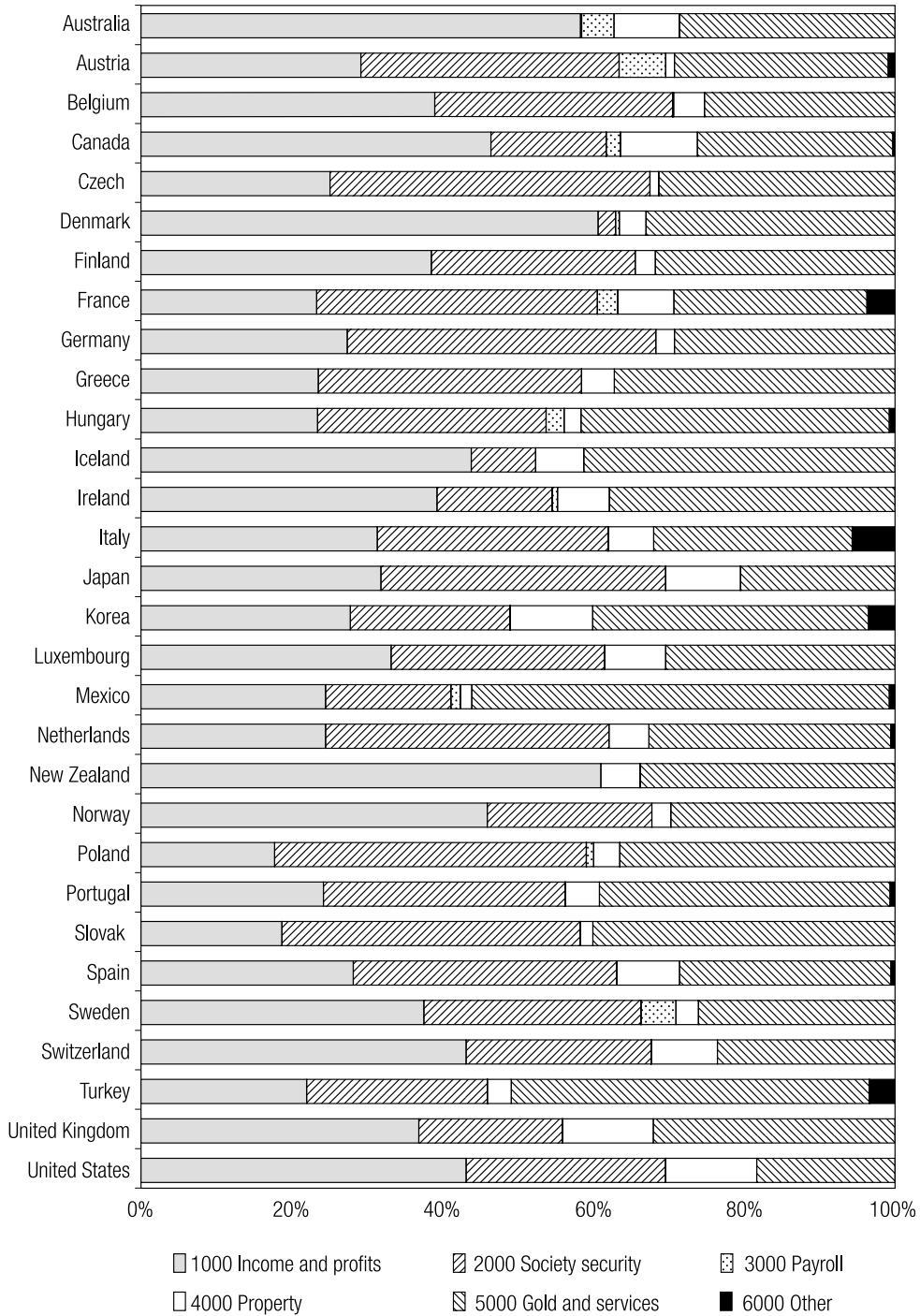
〈표 3〉 GDP 대비 소득세 세수 비중

(단위: %)

	1975	1985	1990	1995	2000	2003	2004	2005 대비
CANADA	15.1	14.4	17.4	16.5	17.8	15.2	15.8	16.0
MEXICO		3.8	4.7	4.1	5.0	5.0	4.7	4.8
UNITED STATES	11.8	11.6	12.6	12.8	15.1	11.1	11.1	12.5
AUSTRALIA	14.5	15.4	16.3	15.9	18.1	17.4	18.2	na
JAPAN	9.3	12.5	14.6	10.3	9.4	7.9	8.5	na
KOREA	3.7	4.3	6.5	6.2	6.8	7.1	6.9	7.5
NEW ZEALAND	19.0	21.6	22.3	22.4	20.1	20.5	21.7	22.8
AUSTRIA	9.6	10.8	10.1	10.9	12.2	12.7	12.5	12.0
BELGIUM	15.8	18.2	15.8	16.9	17.6	17.4	17.4	17.8
CZECH REPUBLIC				9.4	8.2	9.5	9.7	9.4
DENMARK	23.2	26.6	28.0	30.1	29.8	28.6	29.5	30.1
FINLAND	15.9	16.3	17.2	16.5	20.6	17.3	17.1	17.0
FRANCE	5.6	6.8	6.8	7.0	11.1	10.0	10.1	10.4
GERMANY	12.1	12.9	11.6	11.3	11.2	9.7	9.5	9.8
GREECE	2.8	4.9	5.7	7.0	10.2	8.2	8.2	na
HUNGARY				8.8	9.4	9.4	9.0	8.9
ICELAND	6.8	6.4	9.2	10.7	15.5	17.0	17.0	19.3
IRELAND	8.6	12.0	12.2	12.7	13.2	11.3	11.8	11.7
ITALY	5.4	12.4	13.8	14.2	14.0	12.9	12.9	12.9
LUXEMBOURG	14.1	17.0	14.0	14.6	14.1	13.9	12.6	12.7
NETHERLANDS	13.8	10.8	13.3	10.6	10.0	9.4	9.5	na
NORWAY	13.5	17.1	14.6	14.4	19.2	18.6	20.3	22.2
POLAND				11.3	9.9	6.2	6.1	na
PORTUGAL	3.4	6.5	7.1	8.1	9.4	8.5	8.3	na
SLOVAK REPUBLIC					7.1	6.8	5.7	na
SPAIN	4.1	7.1	10.0	9.4	9.7	9.7	9.8	10.6
SWEDEN	21.0	20.2	22.0	18.9	21.5	18.2	19.0	19.5
SWITZERLAND	11.7	12.0	12.1	12.0	13.4	12.6	12.7	13.4
TURKEY	6.8	5.7	6.7	6.4	9.5	7.8	6.9	7.0
UNITED KINGDOM	15.8	14.6	14.3	12.8	14.6	13.0	13.2	14.3
<i>Unweighted averagr:</i>								
OECD TOTAL	11.3	12.4	13.0	12.5	13.5	12.4	12.5	na
OECD AMERICA	13.4	9.9	11.6	11.2	12.7	10.4	10.4	11.1
OECD PACIFIC	11.6	13.5	14.9	13.7	13.6	13.2	12.8	na
OECD EUROPE	11.1	12.5	12.9	12.5	13.5	12.6	12.5	na
E U (19)	11.4	13.1	13.4	12.8	13.4	12.3	12.2	na
E U (15)	11.4	13.1	13.4	13.4	14.6	13.4	13.4	na



[그림 1] 2004년 총세수 대비 각 세목의 세수 비중





최신 조세 · 재정 해외동향

※ 이 원고는 한국조세연구원에서 발행하는 「최신 조세 · 재정 해외동향」 자료입니다.
원문은 한국조세연구원 홈페이지(www.kipt.re.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편집자 주>

조세 정책 ·

주택경기 침체 美 GDP 1% 낮출 것-버냉키

벤 버냉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은 4일(현지 시간) “주택경기 침체가 미국 경제성장률의 1%를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

버냉키 의장은 이날 워싱턴 이코노믹 클럽에서 강연을 마친 뒤 질의 · 응답을 통해 “미국 경제는 주택시장에서 상당한 조정을 겪고 있다”며 “주택경기의 침체가 미국 경제 둔화의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다고 CNN머니 닷컴이 전했다.

버냉키 의장은 “주택경기의 침체가 올해와 내년에 걸쳐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의 1%포인트를 낮추게 될 것”이라며 “주택경기가 다른 경제 부문으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단기적으로 우려되는 부문은 인플레이션과 에너지 가격의 변동”이라며 “그러나 미국 경제는 장기적으로 볼 때 건강하고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버냉키 의장은 “미국이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하는 두 가지 이슈는 경제의 노령화와 미국 경제의 경쟁력을 유지시켜 줄 기술, 교육, 훈련 등”이라고 말했다.

버냉키 의장은 이민이 경제 노령화를 상쇄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을 것 같다”고 답변했다. 한편, 버냉키 의장은 이날 강연에서 미국의 사회보장제도 개혁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미국의 사회보장제도를 개혁하지 않는다면 베이비부머들의 은퇴 후 미국은 엄청난 재정 부담을 겪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버냉키 의장은 “지탱할 수 없는 연금지급제도를 개혁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더 늦기 전에 개혁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정부의 사회보장 및 의료보호 지출이 현재 미국 경제 총규모의 7%에서 2030년에 13%로 늘어나고 2050년에는 15%로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미국 정부가 이같은 비용을 재정으로 충당하려 한다면 현재 경제규모의 18% 정도 인 세수를 2030년엔 24%까지 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머니투데이 2006-10-05]

美 국제무역법원 버드수정법 일부조항 위헌 판결

□ 버드 수정법(Byrd Amendment) 개요

○ 주요 내용

- 미국 세관(CBP)이 외국업체로부터 거둔 반덤핑 및 상계 관세 부과금을 자국의 제조업체에 재분배하도록 규정

○ 외국 반응

- 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판정을 받았으며, 이와 관련 EU 및 일본 등은 미국 제품에 대해 보복관세 부과

○ 최근 동향

- 결국 미 의회는 2005년 말에 버드 수정법 폐지를 의결함. 단, 2007년 10월까지 미국에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동법이 적용되도록 유예기간을 둠.
- 미 국제무역법원(CIT: Court of International Trade)은 2006년 4월 및 7월에 있었던 판결을 통해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수입된 제품에 버드 수정법을 적용하는 것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이행을 위한 미국내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한 바 있음.

□ CIT 판결 내용

○ 판결 시점 : 2006년 9월

○ 판결 내용

- 부과금 재분배 대상(즉, 'affected domestic producer'으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최초 반덤핑제조를 지지(support)"해야 한다는 버드 수정법의 조항은 헌법의 제5 수정조항에서 보장된 기회균등의 원칙 위반
- 부과금 재분배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굳이 최초 반덤핑

제조를 지지하지 않아도 되며, 단지 제소에 'petitioner' 또는 'interested party'의 자격으로 참여하기만 하면 됨.

○ 판결 배경

- 1998년 일본의 베어링 수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 후 미국제무역위원회(ITC)가 피해국내기업목록을 작성함.

당시 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던 롤링베어링 제조기업인 SKF USA가 2005년 이후부터 부과금 재분배 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

- 1998년 당시 이 기업은 유럽에서 베어링 제품을 수입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입제품의 반덤핑 관세 부과를 지지하지 않았음.

그러나 이후 이 사업관계가 정리됐으며, 이에 따라 과거 ITC의 해당 최초 반덤핑 조사에 이 기업이 참여했다는 명분을 제시하며 2005년부터 부과금 재분배 대상에 포함시켜줄 것을 요구했던 것임.

[KOTRA, 경제무역 2006-09-28]

내년 미국-중국 함께 성장 둔화

차세대 경제대국으로 꼽혀 온 소위 '브릭스(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의 운명이 내년에 엇갈릴 것 같다.

세계적 투자은행 모건스탠리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스티븐 로치는 26일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27%, 인구의 47%를 차지하는 브릭스 국가들의 명암이 1, 2년 사이에 엇갈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로치는 미국과 함께 '세계 2대 경제엔진'으로 떠오른 중국이 성장 둔화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경고해 주목



된다.

연평균 10% 가까운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승승장구 해 온 중국의 경제가 갑자기 냉각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것은 비단 로치만이 아니다.

중국, 러시아, 브라질 모두 내년 수출 타격

27일 <아시아타임스>는 커버스토리로 “미국의 성장 둔화가 중국의 경제과열에 냉각제로 작용할 것”이라는 취지의 심층분석 기사를 싣고, 역시 중국의 경제가 내년부터 큰 변화를 겪을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했다.

2007년 미국의 경제가 둔화되면서 중국의 수출이 타격을 받고 외국인투자도 급감하는 등 가시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로치는 이처럼 미국과 중국의 경제성장이 동반 둔화되면서 브릭스 국가 중 특히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브라질과 러시아도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은행의 조사에 따르면 비농업 상품 부문이 러시아의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4%에 달한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해 GDP에서 차지하는 수출 의존도는 31.9%에 달해 중국(33.7%) 다음으로 높다.

브라질의 경우 다른 브릭스 국가와 비교할 때 수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기는 하지만, 최근 GDP에서 차지하는 수출 비중이 1996년 6.2%에서 지난해 14.9%로 확대됐다.

특히 브라질은 미국뿐 아니라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아 두 국가의 성장 둔화가 가뜰이나 부진한 브라질 경제 성장에 부담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다.

반면 인도는 브릭스 국가 가운데 가장 유리한 입장에 있다는 것이 로치의 지적이다. 인도는 지난해 GDP에서 기계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61%에 달할 정도로 내수 기반이 튼튼한 반면 제품 수출 비중은 12.9%에 그치고 있어 ‘전 세계적

경제순환’에 따른 영향을 덜 받는다는 것이다.

미국 주택가격 위축 따라 민간소비 지출 급감 우려

<아시아타임스>는 이처럼 ‘전세계적 경제순환’에 큰 변수로 작용하는 미국과 중국의 경제변화를 집중조명했다.

<아시아타임스>에 따르면 내년 미국 경제를 둔화시키는 가장 큰 변수는 최근 2년간 1%에서 5.2%로 급격히 높아진 미국의 금리보다는, 미국의 주택가격 위축에 따른 민간소비 지출 둔화다. 미국의 경제는 민간소비가 경제성장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주택가격의 위축은 이미 과잉 공급된 주택에 대한 신규 수요가 줄어들면서 내년에 더욱 가속화되고, 민간소비 지출이 둔화되면서 중국의 경제성장률도 5% 정도로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흔히 민간소비 둔화의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미국의 금리 인상은 여전히 역사적으로는 낮은 수준이며, 실질금리로 따지면 마이너스라는 점에서 아직 큰 변수가 못된다는 지적이다.

오히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8월과 9월 잇따라 금리를 동결함으로써 인플레이션 압력보다 내수 위축에 대한 우려가 더 크다는 것을 드러냈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의 민간소비 지출 증가율은 올해 1/4분기 4.8%에서 2분기 2.8%로 급감했다. 2003년 4분기 2.7% 이후 최저치로 푹 떨어진 것이다.

이 기간 동안 주택가격 상승률은 미국이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75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주택 재고 물량은 지난 7월 11년래 최고치에 도달했다.

<아시아타임스>는 “지난 2001년 이후 주택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미국의 민간소비 지출이 크게 늘었다”면서 “올해 상반기 주택담보대출 중 무려 87%가 현금 대출이었다”고 지적했다.

〈아시아타임스〉는 “주택가격이 내년엔 위축되면 가계소득도 위축될 것이며, 결국 민간소비 지출 증가율은 매우 둔화되거나 심지어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대미 수출 둔화에 중국 경제 큰 타격 받을 것”

〈아시아타임스〉에 따르면 2002~2005년 연평균 10%에 이르는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미국의 민간소비 지출이 크게 늘어났던 시기와 일치한다. 그러나 지난해 세계 4위의 경제대국으로 떠오른 중국이지만, 전체 경제규모에서 중국의 민간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90년대 중반 수준에서 정체된 끝에 지난해는 오히려 사상 최저치인 40%로 떨어졌다.

저임금과 고실업률에 중국의 민간소비가 발목이 잡혀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도시근로자들은 지난 2001~2005년 사이에 연평균 11%에 달하는 실질임금 상승률의 혜택을 보았으나, 정작 인구 60% 이상이 거주하는 농촌의 실질임금 성장률은 제자리를 걸어 도시와 농촌의 소득 격차는 15년래 최대치로 벌어졌다.

중국의 공식실업률은 2001년 이래 4%대에 멈춰 있다. 그러나 여기에 또다른 함정이 숨어 있다. 도시 노동자 중 60% 이상이 농촌에서 올라온 비등록 노동자이며, 이들은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직장을 잃어도 실업통계에 잡히지 않는다.

실업 상태가 된 이들 이주노동자들도 실업통계에 포함시키면 실질실업률은 최고 10%에 달하고, 농촌지역의 실업률까지 포함하면 중국 전체 실업률은 최고 15%에 달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실업률이 높다보니 내수가 부진한데도 중국 경제가 활황을 보인 것은 절반이 수출 때문이다. 지난해 중국의 수출 증가율은 28%에 달했으며, 경제성장률 중 4%가 수출에 힘입은 것이다. 특히 수출의 50%는 미국시장으로 가는 것이다.

〈아시아타임스〉는 “이 때문에 중국의 수출 증가는 미국의 수요 증가에 따라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면서 “중국의 수출 품은 거의 대부분이 소비재이기 때문에 미국의 민간소비 수요가 중국의 수출 성장을 이끌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의 경제성장을 견인한 또다른 축은 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투자다. 중국 내에서 이뤄지는 투자의 65% 정도가 외국 투자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특히 2001~2005년 중국의 투자증가율은 무려 연평균 21%에 달했으며, 주로 미국으로부터의 투자에 힘입었다.

〈아시아타임스〉는 “이 기간 동안 중국 경제성장의 거의 절반이 미국의 민간소비 지출에 기반한 것”이라면서 “내년 미국의 경제성장이 둔화되면 중국의 경제에 강력한 타격을 줄 것은 틀림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아시아타임스〉는 “다만 중국은 1조달러에 달하는 외환보유고와 막대한 재정지출 여력을 동원해 그 충격을 완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프레스리안 2006-09-27]

中-美·EU 관세전쟁 물문나

- WTO 제소에 중국 반발 -

미국 등 서방국가들이 중국의 높은 자동차 수입관세 문제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자 중국이 이에 반발, 관세전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18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과 유럽연합(EU), 캐나다가 지난 15일 중국의 고율 관세에 대해 WTO에 제소하고 공식 조사를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WTO에 정식 제소한 것은 2001년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래 5년 만에 처음이다.

이들은 중국 당국의 외국산 자동차 부품에 대한 높은 관세 부과가 공정경쟁을 저해한다고 비난했다. WTO는 이르면 다음 달 중 관련 패널을 만들어 중국의 자동차 부품 고율 관



세에 대해 공식적인 조사를 벌이게 된다.

중국인 서방국들의 행동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고율의 관세 부과를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외국 기업들의 세금 회피를 막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라며 강하게 항변하고 있다.

중국은 “외국 자동차가 편법으로 수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WTO 규정 위반이 아니다”면서 고율 관세는 정당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중국은 현재 자동차 부품에 한해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현지에 공장을 가진 기업들이 부품의 40% 이상을 현지 조달할 경우에만 수입산에 대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미국 EU 캐나다 등 지난 3월 말 “중국이 높은 수입관세를 적용해 190억달러(약 19조원) 규모에 이르는 중국 자동차부품시장에서 외국 기업들을 차별하고 있다”며 WTO 제소 절차에 착수했고 이후 60일간의 협상기간을 가졌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헤럴드경제 2006-09-18]

中 진출 기업 세금부담 늘듯

- 中, 외자기업 소득세 올리고 자국기업은 내려 -

중국 정부가 외자기업에 대한 세금을 늘리고 중국 기업의 세금을 줄여 내·외자기업 간 세금 격차를 축소한다. 이에 따라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세금 부담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11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국가세무총국(SAT)은 지난 8일 홈페이지를 통해 “내·외자기업들의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국내 기업들의 임금 비용에 대한 면세기준을 7월 1일부터 현행 800위안(약 9만 6,336원)에서 1,600위안으로 높여 시행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중국 세무당국은 중국 기업들에 대한 면세소득 상향 조정

으로 올해 법인세에서 120억위안(약 1조 4,400억원)의 결손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내·외자기업 간 소득세 격차를 줄이기 위한 고강도 조치로 향후 단일세율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창배 주중 한국대사관 경제자문역은 “중국은 세계개혁에서 안정적인 세원 확보를 가장 중시한다”며 “단일세율이 20~21%로 결정돼 한국 기업들의 소득세 부담이 지금보다 최소한 25% 가량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현재 국내 기업들과 외국인 투자기업 간 소득세 단일화 법안을 오는 2008년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8월 중국 국내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 간 단일 소득세 법안을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었지만 외국인 투자 감소 등의 우려로 입법이 지연돼 왔다.

현재 중국에는 두 개의 소득세 법안에 따라 국내 기업은 33%의 세금을 내고 있지만 외국인 투자기업은 15%의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서울경제 2006-09-11]

中 부동산 규제정책 후폭풍

중국 정부가 과일경기를 진정시키기 위해 내놓은 토지공급 억제정책이 ‘땅값 파동’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경제참고보 등 중국 언론들은 지난 5일 국무원이 발표한 ‘토지조절통제 강화에 관한 통지’와 관련해 “땅값이 30~50% 상승할 것”이라며 “부동산파동을 야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인민일보는 12일 국토자원부 간쑤춘(甘肅春) 정책법규국장을 인용해 “토지용도별 정책 차별성을 이해하지 못해 발생한 오보”라며 즉각 해명에 나서는 등 파문 진화에 부심하고 있다.

부동산가격 폭등으로 인해 그리잖아도 아파트 안 사기 운동 등이 벌어지고 있는 중국에서 토지공급 축소에 따른 땅값 파동 가능성이 불거지자 중국인들이 그만큼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간 국장은 “이번 토지공급 억제정책으로 공업용지 가격이 40~60% 가량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는 그동안 공업용지가 너무 헐값으로 공급됐기 때문”이라고 강조하고 “아파트·주택 건축에 사용되는 용지 가격은 현 수준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초강력 토지공급 억제정책

중국 정부는 지난 5일 토지 조절·통제강화에 관한 통지를 통해 토지 최저가격제와 사실상의 토지개발 총량제를 도입하는 등 강력한 토지공급 억제에 나섰다.

그동안 지방정부가 개별 사업별로 승인을 신청하던 방식을 바꿔 연간 개발사업 총량을 승인받도록 함으로써 개발사업 총량을 통제하겠다는 내용이다.

또 토지공급 최저가격을 도입하고 각종 토지사용료와 세금을 인상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무분별한 개발 욕구를 차단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자원부는 지난 8일 △베이징, 상하이, 충칭, 톈진 등 도시지역 토지거래세를 현행 m^2 당 1.2위안(약 142원)에서 3배 △현행 m^2 당 5~70위안으로 차별화된 토지 사용 수수료를 2배 △농민에 대한 토지수용보상금을 2배 인상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계획도 발표했다.

◆ 공업용지 40~60% 상승 가능

중국 정부의 이러한 토지공급 억제정책은 일부 중국 언론들이 ‘땅값 50% 상승 가능성’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부동산가격 파동 가능성으로 비화됐다. “중국에서 공장 짓기 어려워졌다”는 산업계의 불만에 그치지 않고 “가뜩이나 치솟은 집값이 또다시 들쭉이는 것 아니냐”는 주민들의 불안을 야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간 국장은 “중국의 토지가격은 △농민이주비·토지보상비 △개발비용 △정부수익 등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된다”며 “토지보상비가 늘어나는 대신 지방정부 수익은 줄어들게 되므로 토지보상비 인상이 곧 땅값 상승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 아파트·주택에는 어떤 영향?

간 국장은 “아파트·주택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설용지는 기존에도 경쟁입찰 방식으로 토지를 매각해 왔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인한 영향은 별로 없다”고 강조했다.

즉 “건설용지 매각가격은 토지조성원가보다 크게 높은 수준에서 결정돼 왔기 때문에 토지보상비를 인상한다고 해도 건설용지 매각가격을 끌어올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매일경제 2006-09-13]



재정 정책

美, 2006 회계연도 재정적자 크게 줄어

- 미국의 재정적자가 크게 줄었다. -

지난달 30일로 마감된 2006 회계연도 기간중 미국 재정적자가 2,500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의회예산국(CBO)이 6일(현지시간) 밝혔다.

미국의 재정적자가 당초 예상보다 크게 줄어든 것은 세수가 전년보다 12% 늘어나 2,530억달러에 달하는 등 경기호황으로 세금수입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CBO는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CBO가 예상했던 적자 규모보다 100억달러 줄어든 것이며 백악관이 지난 7월 예측했던 2,960억달러를 크게 밑도는 것이다.

CBO의 재정적자 추정치가 사실로 집계될 경우 이는 지난 2002 회계연도에 1,580억달러의 재정적자를 기록한 이후 가장 작은 규모다.

지난 2005 회계연도 미국의 재정적자는 3,180억달러였고 2004 회계연도의 경우 재정적자가 4,130억달러에 달해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다.

[헤럴드 생생뉴스 2006-10-07]

아베 새 내각, 경제각료 포진 : 재정보다 성장 중시

아베 새 내각의 경제 각료 포진은 기술혁신이나 경제성장 중시형이라 하겠음. 경제 각료의 면면을 보면 재정재건보다 성장전략을 중시하는 방향성이 명확함. 한편으로 세출입 일체개혁 등을 주도한 경제재정자문회의의 기능저하가 예상됨.

경제 각료로서는 먼저 경제재정자문회의를 운영하는 경제재정담당장관에 민간의 오타 히로코를 기용하고 재정재건의 요직인 재무장관에는 상공관계 의원이라 일컬어지는 오미 고지를 임명했음.

경제정책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오타 담당장관은 내각부 정책총괄관의 경험이 있으나 자민당 정조회장에서 담당장관으로 취임했던 전임 요사노 장관만큼의 정치력은 기대할 수 없음. 오타의 기용은 관저기능의 강화가 전제에 있다고는 하나 민간위원의 교체도 있고 하여 자문회의의 조정력이 약화될 것임은 부정할 수 없음.

한편 7월에 결정한 세출세입의 일체개혁에 관한 방침을 실행하는 입장인 오미 재무장관은 아베 총리가 소비세 증세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가운데 세출삭감과 동시에 성장전략으로서 IT(정보기술) 투자감세 등 정책감세를 선행시켜 소비세 증세의 논의는 가능한 한 보류하고자 하는 의도가 엿보임.

또 경제산업장관에는 자민당의 정조회장 대리로 성장전략 책정에 관련했던 상공관계 의원인 아마리 아키라가 취임했음. 성장전략의 총괄부서인 경제산업성에서 전략 구체화의 지위를 맡게 됨.

[국회도서관, 일일해외신문 산케이 2006-09-27]

스웨덴 요람서 무덤까지 복지모델 바뀔 듯

중도 우파의 승리로 끝난 스웨덴 총선 결과에 따라 '요람에서 무덤까지' 라는 말로 상징되는 스웨덴 복지모델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스웨덴은 지난 74년 중 65년을 좌파정부가 집권할 만큼 좌파가 강세였지만, 이번 선거에서 스웨덴 유권자들은 우파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변화를 선택했다고 영국 BBC방송이 18일 보도했다.

◆ 감세정책과 복지혜택 축소

이번 스웨덴 총선은 지구상에서 가장 훌륭한 복지정책으로 평가되는 북유럽 복지모델의 존폐가 결정될 수 있다는 이유로 많은 관심을 모았다.

야권 4당이 모인 중도우파연합은 스웨덴 복지정책의 근간을 완전히 바꾸지는 않겠지만 효율과 경쟁을 도입하겠다고 밝혀 복지정책의 축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중도우파연합은 이번 선거에서 재산세 폐지와 소득세 감면 등 과감한 감세정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들은 2007년까지 약 50억달러(약 4조 7,000억원) 규모의 소득세를 감면하고 2008년 추가로 80억달러를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중도우파연합은 세금을 줄이는 만큼 실업수당도 대폭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적극적인 감세정책은 결국 복지혜택의 축소와 맞닿아 있는 것이다.

◆ 변화 선택한 스웨덴 유권자

예란 페르손 총리가 당수로 있는 사민당은 이번 선거에서 사민당 역사상 최저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유권자들은 이번 총선에서 집권 좌파에 등을 돌린 것으로 풀이된다. 뉴욕타임스는 스웨덴 유권자가 집권 좌파 정부의 무능함에 염증을 느낀 게 사민당의 패인이라고 지적했다.

중도우파연합은 이번 선거 유세 기간에 스웨덴의 높은 실업률 등 집권당의 실정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켰다.

스웨덴 정부는 공식 실업률이 5.7%라고 밝혔지만 중도우파연합은 실제로는 20%대라고 주장했다.

중도우파연합 측은 “일하지 않아도 정부에서 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실업률이 낮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스웨덴의 고질적인 실업문제는 노동시장이 경직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중도우파연합은 또 기업부문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기업 민영화를 과감히 추진할 뜻을 밝혔다.

실제로 스웨덴 공공부문의 효율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결국 스웨덴 유권자들은 이번 총선에서 ‘복지’ 대신 ‘효율’을 주창하고 나선 우파연합 편에 선 것으로 분석된다.

[세계일보 2006-09-19]

미, 올 회계연도 재정적자 14% 감소

막대한 규모로 치솟던 미국의 재정적자가 일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미국 재무부는 2006 회계연도중 지난 8월 말까지 11개월간의 누적 재정적자가 총 3,043억달러를 기록했다고 13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는 지난 회계연도 같은 기간의 3,541억달러보다 14.1% 줄어든 것이다.

재무부는 8월 한달간 재정적자가 총 646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513억달러보다 25% 증가했지만 지난해 10월부터 8월 말까지의 재정적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줄었다고 덧붙였다.

미 재무부는 9월 말로 끝나는 2006 회계연도 중 총 재정적자가 2,958억달러로 2005 회계연도의 3,190억달러에 비해 200억달러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2004년 4,130억달러를 정점으로 차츰 줄어들고 있는 미 재정적자는 그러나 세수증대, 무역불균형, 달러 약세 등의 요인으로 지목돼 왔다.

[파이낸셜뉴스 2006-09-14]



| 정책 흐름 |

- 2007년 예산(안) 주요내용
- 2007년 국세 세입예산(안)

2007년 예산(안) 주요내용

이 자료는 2006년 9월 27일 기획예산처 재정총괄과에서 발표한 <2007년 예산(안) 주요내용>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I. 2007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 재정규모 및 수지

1-1. 성장전망

- 내년도 경성성장률은 6.7% 수준 전망(실질 4.6% 수준)
- '06년은 하반기 성장세가 다소 둔화될 전망이다, 상반기 높은 성장세에 힘입어 연간 5%의 실질 성장 가능
- '07년은 세계경제 둔화 가능성, 국제유가 등 대외여건을 감안할 때 당초 전망보다 성장률이 다소 하락할 전망

1-2. 세입전망

- 내년도 총수입은 '06 예산 대비 7.0% 증가한 251.8조원
- 국세수입은 금년 세입이 당초 전망보다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06 예산 대비 9.4%, 전망 대비 7.3% 증가할 전망

(단위: 조원)

	'06 예산	'07 예산안	증감률(%)
◆ 총 수입	235.3	251.8	7.0
○ 예 산 (국 세)	155.8 (135.3)	167.3 (148.1)	7.4 (9.4 ¹⁾)
○ 기 금 (사회보장수입)	79.5 (41.2)	84.4 (44.5)	6.2 (8.2)

1) '06 전망 대비로는 7.3% 증가

1-3. 지출규모

- 내년도 총지출은 '06 추경예산 대비 6.4% 증가한 238.5조원
- 성장잠재력 확충, 양극화 및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소요를 중심으로 예산 7.2%, 기금 4.9% 증가

(단위: 조원)

	'06 예산 ¹⁾	'07 예산안	증감률(%)
◆ 총 지출 ²⁾	224.1	238.5	6.4
○ 예 산 (일반회계 총계)	153.7 (148.9)	164.7 (158.0)	7.2 (6.1)
○ 기 금 (사회보장지출)	70.4 (15.2)	73.8 (17.5)	4.9 (15.8)

1) 예산·기금의 지출에서 정부내부지출 및 채무원금상환(보전지출)을 제외

2) 이하 '06예산은 추경예산 기준

1-4. 재정수지

-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1.5% 흑자,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대상수지는 GDP 대비 △1.5% 적자 전망
- '07년 국가채무비율은 금년과 동일한 33.4% 수준 유지
- 일반회계 국채발행 규모는 금년보다 줄어든 8.7조원

(단위: 조원)

	'06 예산	'07 예산안
• 통합재정수지(GDP 대비,%)	△0.9(△0.1)	13.3(1.5)
• 관리대상수지(GDP 대비,%)	△14.9(△1.7)	△13.7(△1.5)
• 국가채무(GDP 대비,%)	283.5(33.4)	302.9(33.4)
• 일반회계 국채	9.3	8.7

1) 재해추경(2.2조원) 결과 적자가 되었으나, 결산시 흑자 전환 가능성

2. 2007년 자원배분의 중점

- 국가의 역할과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중점 지원
 - 미래 성장동력 확충
 - 차세대 핵심기술 개발 등 R&D 투자 확충 및 효율성 제고
 - IT·BT 등 전문분야의 고급인재 및 산업인력 양성
 - 국민의 기본적 수요 충족
 - 사회안전망 확충, 계층간 이동성 제고 등 양극화 해소
 - 육아부담 완화, 노인요양시설 확충 등 저출산·고령화 대응
 - 복지, 교육, 문화 분야 등의 사회서비스 확충
 - 국가안전 확보
 - 국방개혁 지원, 해경 전력증강, 재해예방 투자 강화 등

〈주요 분야별 자원배분(안)〉

(단위: 조원)

	'06	'07 (안)	증가율
• R&D	8.9	9.8	10.5
• 사회복지·보건	56.0	61.8	10.4
• 교육	28.8	30.9	7.4
• 국방(일반회계)	22.5	24.7	9.7

- 민간역할이 강화되어야 할 분야는 투자 내실화에 중점
 - SOC 분야는 민간자본 및 공기업 자체자금 활용 등 투자재원 다변화를 통해 재정투자를 보완
 - 농어촌 분야는 132조원 투융자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
 -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기술개발·에너지 분야 중점 지원
-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강도 높은 세출구조조정 추진
 - 재정사업 자율평가(PART) 결과 미흡사업은 10% 이상 삭감
 - * 미흡사업(42개) 예산 반영 현황 : ('06) 0.9 → ('07) 0.4조원
 - 업무추진비·여비 등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행정 경비 최소화
 - 복지분야도 규모 증가에 상응하는 제도개선 노력 병행
 - * 의료급여 제도개선, 건강보험공단 지원방식 개선 등
 - BTL 본격 추진 등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적극 활용
 - 평가결과, 세출구조조정 실적이 우수한 부처(건교부 등 10개)는 예산상 인센티브 부여(기본경비 3~4%, 총93억원)

〈'07 예산안 세출구조조정 실적〉

(단위: 조원)

	'06 예산	'07 예산안
• 구조조정 대상지출	44.8	47.4
• 구조조정 실적	△4.2	△4.6
• 구조조정률(%)	9.3	9.7

〈참고 자료〉

세출구조조정 우수사례

- ① 의료급여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 과다 이용자(500일 이상 이용자 28만명) 심사강화 등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연간 1,000억원 수준의 급여비 절감(과잉진료 억제)
 - 차상위층은 건강보험 가입자이므로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는 진료비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토록 제도 개선 추진('08년)

- ② 건강보험 지원방식 개선 (보건복지부)
 - 저소득층 지역·직장가입자에 대한 국고지원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국고지원 방식 개선
 - (현행) 지역가입자 급여지출의 50% 및 관리운영비 지원 → (개선) 보험료수입의 20%(국고 14%, 기금 6%)
- ③ 청년 무역인력 양성 사업 폐지 (산업자원부)
 - '05년 재정사업 심층평가 결과 지원효과가 낮은 것으로 지적된 청년 무역인력 양성 사업을 폐지(19억원 → 0억원)
 - 절감재원은 기존 TI(Trade Incubator)사업을 Global Business 전문가 양성과정으로 확대하는 데 사용(10억원 → 26억원)
- ④ 공기업 자체 투자 확대 등 재원 다변화 (건설교통부)
 - 인천공항공사 경영개선을 전제로 자체 투자 확대 (50% → 75%)
 - * 인천국제공항 2단계 : ('06) 3,011억원 → ('07) 2,000억원
 - 물값 100% 현실화 등을 감안, 수자원공사 투자비율 조정(50% → 70%)
 - * 광역상수도 : ('06) 1,408억원 → ('07) 669억원
- ⑤ 농림 R&D 중복성 해소
 - 농림분야 R&D사업의 관련 부처간 역할분담으로 중복성 해소
 - 연구개발 단계와 분야를 감안하여 부처별 역할 차별화
 - * (농림부) 산업화·실용화, (농진청) 기초·원천, (산림청) 임업분야 연구
 - 역할분담 원칙에 따라 농림부 사업(농림기술개발)의 일부를 농진청(82억원) 및 산림청(14억원)으로 이관
- ⑥ OECD 서울센터 통합 (국무조정실)
 - 4개 부처(재경부·공정위·행자부·복지부)에서 별도 운용중인 OECD 센터를 통합하여 KDI 국제정책대학원 내에 설치·운영
 - 관련 인력 감축(14명 → 10명) 및 예산 절감(22억원 → 20억원)
- ⑦ 감시정 건조 사업의 투자방식 개선 (관세청)
 - 노후된 50톤급 감시정 일부를 기동성,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하여 점차적으로 15톤급으로 교체 추진

* 감시정 건조비 : 50톤급 25억원 → 15톤급 18억원(척당 7억원 절감)

3. 주요 분야별 재원배분안

(단위 조원)

구 분	'06	'07안	증감액	증감률(%)
1. R&D	8.9	9.8	0.9	10.5
2. 교 육	28.8	30.9	2.1	7.4
3. 사회복지·보건	56.0	61.8	5.8	10.4
4. 수송·교통·지역개발	18.4	18.2	△0.2	△1.1
('06 재해추경 제외시)	(17.8)		(0.4)	(2.6)
(공공부문 건설투자)	(48.7)	(52.3)	(3.6)	(7.4)
5. 농림·해양수산	15.5	15.9	0.4	2.7
6. 산업·중소기업	12.4	12.5	0.1	0.9
(금융지원 제외시)	(8.4)	(9.1)	(0.7)	(7.4)
7. 환 경	3.8	4.0	0.2	6.4
8. 국 방(일반회계)	22.5	24.7	2.2	9.7
9. 문화·관광	2.8	2.9	0.1	2.6
10. 공공질서·안전	11.0	10.9	△0.1	△1.3
('06 재해추경 제외시)	(10.2)		(0.7)	(7.0)
11. 통일·외교	2.5	2.4	△0.1	△4.0
(경수로사업 제외시)	(2.3)		(0.1)	(4.3)
12. 균형발전(균특)	6.3	6.7	0.4	6.3
13. 정보화 및 통신	7.6	7.8	0.2	2.6

* 분야별 재원배분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순계 기준

** 공공부문 건설투자에는 BTL, BTO, 공기업 투자 등 포함

4. 분야별 재원배분 방향

① R&D

-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R&D 투자규모 대폭 확대
 - : ('06년) 8.9조원 → ('07년) 9.8조원, 10.5% 증
- 성과평가와 재원배분간의 연계강화, 부처간 중복사업 조정 등 투자효율성 제고에도 역점
- 기초연구 및 과학기술인력 양성에 대한 투자 확충
 - 기초과학학술연구조성(1,705억원 → 1,805억원), 특정기초연구(821억원 → 960억원) 등 신기술 창출의 기반이 되는 기초분야 연구 확대

* 기초연구 비중 : ('03) 19% → ('06) 24% → ('07안) 25%

- 2단계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2,900억원) 등 과학기술혁신을 선도할 창조적 인재를 지속적으로 양성
-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직결되는 핵심기술 분야 지원 확대
 - 지능형 로봇 등 미래 유망기술 분야 중점 지원
 - 핵심부품·소재개발(2,520억원 → 2,691억원) 등 고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분야를 집중 육성
- 국민의 안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강화
 - 정부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국방, 방재, 보건, 환경 등 공공·복지기술 분야 투자 확충
 - * 국방 R&D : ('06) 10,618억원 → ('07) 12,902억원 (21.5% 증)
 - * 방재 R&D : ('06) 407억원 → ('07) 572억원 (40.5% 증)
-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지방 R&D 투자비중 확대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1,596억원 → 1,995억원), 산·학·연공동기술개발(461억원 → 803억원) 등 기술혁신을 선도할 중소기업 육성
 - 지방기술혁신(335억원 → 510억원), 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 조성(393억원 → 542억원) 등 지방대학·중소기업·연구소간의 협력연구 활성화
 - * 지방R&D 비중 : ('03) 27% → ('06) 36% → ('07안) 40%

(단위: 억원)

구 분	'06	'07안	비 고
•국책연구개발	50,218	56,817	•부품소재개발(산자부, 2,520 → 2,691) 등
•연구기관지원	20,122	21,756	•출연연 지원(과기부, 10,111 → 11,252) 등
•대학연구지원	12,328	12,958	•기초과학기술연구조성(교육부, 1,705 → 1,805) 등
•연구기반조성 등	6,428	6,912	•대덕R&D특구육성(과기부, 250 → 500) 등
R&D 분야 계	89,096	98,443	10.5% 증
(예 산)	72,283	81,274	12.4% 증
(기 타)	16,813	17,169	2.1% 증

② 교육

-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고등교육의 역량강화 지원
 -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및 학문후속세대 육성을 위해 제2단계 BK21 사업을 추진('06~'12년, 매년 2,900억원)
 - 의·치의학 전문대학원을 도입하고, 국립한의대 설치
 -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하여 대학특성화사업(NURI, '07년 2,594억원)을 추진하고, 산학연 협력사업 지원
-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복지 확충을 통해 교육격차 해소
 - 정부보증 학자금 용자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원을 확충(1,490억원 → 2,189억원)하고, 전문대 근로장학금(Work-Study) 지원(100억원)
 - 사교육 수요의 학교내 흡수 및 소득계층간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해 방과후 학교 지원(신규 1,017억원)
 - 만5세아 무상교육(142천명 → 152천명) 등 유아교육 기회를 확대
 - 특수교육보조원(2,521명 → 4,000명), 장애학생도우미(768명 → 2,000명) 등 장애학생 교육여건 개선
- 초중등 교육여건 개선 및 평생·직업교육 강화
 - '07년은 현행 교부율 수준을 유지하되, 국고에서 방과후 학교사업 신규 지원(1,017억원)
 - '08년부터 방과후 학교·유아교육 사업의 지방이양과 함께 지방교육재정교부율 단계적 인상
 - * ('07) 19.4% → ('08) 19.8% → ('09) 19.9% → ('10 이후) 20.0%
 - 시·도세 전입금 비율은 현행 유지하되, 광역·기초단체장이 교육지원사업을 직접 시행 또는 보조 가능토록 개정
 - 성인문해(文解)교육(175개소 → 240개소), 주말교육과정 등 소외계층·재직자 평생교육 지원 확대
 - 전문기술인력 양성 및 전문대학을 중추적 직업교육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문대 특성화 지원(1,680억원)
- 동북아 지역 역사 및 독도 관련 연구 및 홍보·교육 등을 위하여 동북아 역사재단 설립·운영 지원(128억원 → 200억원)

(단위: 억원)

구 분	'06	'07안	비 고
• 유아·초중등교육	249,424	268,783	• 교육재정교부금(245,966 → 263,730), 방과후 학교(신규 1,017)
• 고등교육	33,666	35,308	• 학자금용자(1,490 → 2,189), BK21(2,900) 등
• 평생·직업교육	3,052	3,071	• 평생교육인프라(60), 전문대특성화(1,680)
• 교육일반·기타 등	1,507	1,728	
교육 분야 계	287,650	308,890	7.4% 증
(예 산)	286,523	307,657	7.4% 증
(기 금)	1,127	1,233	9.4% 증

③ 사회복지·보건

-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및 내실화
 - 기초생보 대상자 확대 및 차상위계층 노인·장애인 지원 강화
 - * 노인들보미 바우처, 중증 장애인 활동보조인 제도 도입 등
 - 의료급여 지원은 확대하되 과다이용자(500일 이상 28만명) 심사강화를 통한 적정이용 유도
 - 장애인 LPG 지원제도를 개선, 장애수당 지급대상(30만명 → 51만명) 및 지원수준 인상(7만원 → 13만원)
-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본격 추진
 -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전체 아동의 50% → 70%) 등 보육·육아 예산 확충
 - 민간보육시설의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기본보조금 시범 실시('06. 9월 시범사업 시작, '08년 본격 추진)
 - 노인치매병원 건립(6개소 → 10개소), 요양시설 확충(신축 137개소) 등 고령사회에 대비
- 사회서비스 공급 확대 및 고용안정 지원 강화
 - 가사·간병, 보육시설 종사자 지원 등 사회서비스 확대
 - * 지역이동센터 지원(902개소 → 1800개소), 방문보건사업 활성화 등
 - 민간의 사회서비스업 참여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기업지원법 제정 추진 및 기업연계형 사업 지원 강화
 - 고용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고용정보 제공, 대학 및 실업계교교 취업지원 강화 등 고용안정 인프라 지속 확대

- 무주택 빈곤층을 위한 주거안정 지원
 - 빈곤층 주거안정효과가 큰 다가구 매입·전세임대 확대
 - * 매입임대: 연간 4,500호 → 6,500호(12년까지 총 5만호) 공급
 - * 전세임대: 연간 1,000호 → 5,800호(12년까지 총 4만호) 공급
 - 저소득층 주거비 경감을 위해 전세자금 지원 확대
 - * 영세민·근로자서민 전세자금(1.6조원 → 2.7조원)
- 보건 의료 예방투자 및 저소득 의료지원 확대
 - '07년 하반기부터 민간병원 무료예방접종 실시 및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지원 확대
 - 5대암 조기검진(300만명 → 375만명) 및 저소득 암환자 지원 확대
- 건강보험 국고지원방식 개선 및 의료비 절감방안 추진
 - 직장 및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형평성 제고를 위해 국고 지원방식을 개선
 - * (현행) 지역가입자 급여비 50% → (개선) 전체 보험료 수입 20%
 - 의약품 선별 등재시스템의 단계적 도입 추진
- 국가유공자 예우와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확대
 - 노령화에 따른 의료비지원 확대, 수당 인상 등
 - * 무공영예 수당 1만원 인상(월 11만원 → 12만원)

(단위: 억원)

구 분	'06	'07안	비 고
• 기초생활보장	53,438	65,907	• 생계(20,077 → 23,086), 의료(26,623 → 35,778) 등
• 공적연금	172,025	189,805	• 국민연금 급여지출(42,835 → 51,916) 등
• 보육·가족 및 여성	9,426	12,150	• 영유아 보육료 지원(4,386 → 5,936) 등
• 노동	93,185	105,122	• 산재급여(34,177 → 38,077), 실업급여(21,912 → 22,862) 등
• 보훈	26,985	29,876	• 보훈연금보상금(13,846 → 15,235) 등
• 주택	135,459	139,863	• 근로자·서민주택 전세자금(10,000 → 19,070) 등
• 취약계층 및 노인·청소년 등	14,634	20,204	• 장애수당(1,119 → 3,130) 등
• 보건	55,108	55,488	• 국가예방접종 실시(212 → 681) 등
사회복지·보건 분야 계	560,262	618,415	10.4% 증
(예 산)	145,027	169,396	16.8% 증
(기 금)	415,235	449,019	8.1% 증

④ 수송·교통 및 지역개발

- 전체 공공부문 건설투자 증가율은 경상성장률을 상회하는 7%대 증가 전망
 - 재정투자는 낙후지역 및 기존공사 완공 지원에 주력
 - 민자유치 활성화 및 공기업 자체 투자확대 등 투자재원의 다변화를 통해 수송교통 기반시설 지속 확충

〈공공부문 건설 사업 규모 전망〉

(단위: 조원)

	'06	'07(안)	비 고
〈합계〉	48.7	52.3	7%대 증가(추경 제외시 8%대)
• 재정투자	44.4	45.8	공기업 및 국고보조 지방비 매칭분 포함
• 민자	4.3	6.5	BTO ¹⁾ , BTL ²⁾ 등

- 1) BTO규모(집행기준, 조원) : ('05) 2.6 → ('06) 2.8 → ('07안) 3.0
 2) BTL규모(집행기준, 조원) : ('05) 0.1 → ('06) 1.5 → ('07안) 3.5

- 도로부문을 교통수요가 많은 수도권은 민간자본을 적극 활용, 이를 통해 절감되는 재원으로 기 추진중인 사업에 대한 지원 강화
 - 공사중인 일반국도 사업의 적기 완공 지원
 - 동계올림픽, 여수엑스포 등 국제행사 유치와 관련된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확대
 - 고속도로는 도로공사 ABS발행(1조원)을 통해 적정투자 규모를 유지하고 민자사업지원(1.1 → 1.3조원) 지속 확대
- * 김천-현풍 고속도로, 익산-장수 고속도로 등 4건의 고속도로 완공

- 철도부문을 국토균형발전, 수송효율성을 감안 지속 투자
 - 경부고속철도 부산-대구 구간은 '10년 완공, 호남고속철도는 본격적 기본설계 소요 지원
 - 철도공사의 경영개선 노력을 전제로 재정지원 확대
- 동북아 경제중심 및 국가균형발전을 차질없이 뒷받침
 - 부산신항·광양항 활성화를 위한 배후부지·도로 등 기반시설 중점 지원 및 인천공항 2단계 '08년 완공 추진
 - 행정중심복합도시,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지원

- '08년 완공예정이었던 김해·무안공항을 '07년에 조기 완공
- 교통시설 투자재원 확보 위해 교통세 과세시한을 3년 연장
 - 교통세의 활용범위를 에너지·환경분야로 확대

(단위: 억원)

구 분	'06	'07안	비 고
• 도로	73,567	73,345	• 일반국도 건설(6,759 → 7,485)
• 철도	32,941	34,342	• 광역철도 건설(4,401 → 5,093)
• 도시철도	12,953	12,570	• 지하철 경영개선지원(5,370 → 6,329)
• 해운·항만	19,402	20,471	• 부산신항·광양항 개발(7,323 → 7,995)
• 항공·공항	3,918	3,335	• 김해·무안공항(242 → 939)
• 물류 등	10,081	11,376	• 경제자유구역기반시설(2,307 → 2,359)
• 지역개발	31,374	26,792	• 수자원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 수송 교통·지역개발 분야('06 재해추정 제외시)	184,235 (177,535)	182,231	△1.1% (2.6% 증)

⑤ 농림·해양·수산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활력 증진 지원
 - 132조원 농어촌 종합대책의 '07년 소요를 차질 없이 반영
- * 132조원 투융자 계획 : 농업·농촌 119조원, 수산업·어촌 13조원
- 한미 FTA 협상 등 개방 대응 농정체계 강화
 - 농가 소득안정을 위한 직불제 확충, 농어업인 복지지원 강화 등 농어촌 사회안정에 최우선 중점

- * 쌀소득직불금(1,6조원 → 2.0조원), 영유아자녀양육비(157억원 → 201억원) 등
- 부채농가 농지매입을 통해 경영회생 지원 확대(422억원 → 566억원)
- 농업신용보증기금 정상화를 위해 출연 확대(5,780억원 → 6,869억원)
 - * 금융기관 출연 확대, 보증수수료율 인상 등 자구노력 병행
- 쌀·과수·원예작물 고품질·브랜드화 지원(신규 177억원)
- 도농상생 복합생활공간 조성으로 농어촌 활력화 지원
 - 일부 중복·분산된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체계를 정비, 사업 효율화를 기하고 종합적인 지역개발 추진
 - * 신활력사업(1,882억원), 오지개발사업(1,134억원) 등을 농림부로 통합
 - 1사 1촌운동 등 농촌교류 활성화 및 은퇴 도시민의 농촌 유치프로그램(신규 45억원) 지원

- 수산업 경쟁력 강화 및 어업인 소득증대 중점 지원
 -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확대(734억원 → 1,294억원)
 - 어업의 소득증대를 위해 어촌관광개발(221억원 → 445억원) 적극 지원

- 산림의 공익기능 강화 및 농업 연구개발 지원
 - 숲가꾸기(1,584억원 → 2,069억원) 등 산림 자원화를 촉진하고, 도시숲 조성 등 산림의 휴양기능을 제고
 - 농업생명공학 등 기술연구 개발 및 현장화 적극 지원

- 농림어업 재해예방을 위한 투자 확대
 - 재해 예방효과가 큰 사방댐 확대(575억원 → 987억원, 203개 → 400개), 수리시설 개보수(3,500억원) 지원 강화

(단위: 억원)

구 분	'06	'07안	비 고
• 농업·농촌부문	127,192	128,684	• 직불금(1.7조 → 2.1조), 개발·복지(9,436 → 9,942)
• 임업·산촌부문	10,157	12,322	• 산림자원육성(2,309 → 3,355)
• 해양수산·어촌부문	17,772	18,248	• 연근해어업 구조조정(734 → 1,294)
농림해양수산 분야 계	155,121	159,254	2.6% 증
(예 산)	100,340	103,369	3.0% 증
(기 금)	54,781	55,885	2.0% 증

⑥ 산업·중소기업

-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부문에 집중 투자하되, 민간부분의 역할을 강화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구조고도화, 창업지원 등을 중심으로 확대
 - 금융지원은 시장친화적 제도개선과 함께 창업·기술개발기업 지원 등 민간금융 활용이 어려운 분야에 중점
 - * 창업·기술개발·사업구조조전자금 : ('06) 4,880억원 → ('07안) 8,400억원
- 혁신주도형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선진경제 조기 구축
 -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 R&D투자 대폭 확대 (2,679억원 → 3,600억원)
 - 산업경쟁력의 근간인 부품소재 기술개발 및 기반구축 (2,520억원 → 2,691억원) 지원 확대
 - * 부품소재수출 비중(%) : ('06) 45 → ('10) 50
- 지역별 산업·경제여건에 적합한 전략산업을 선정, 집중 지원함으로써 지방의 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국가 균형발전 추진
 - 부산·전남·대전 등 비수도권 13개 시도를 대상으로 추진
-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구조의 정착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기반 확충에 역점

-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및 자발적 협약(VA)기업 등에 대한 지원(4,438억원 → 4,674억원)을 확대
- 고유가 시대에 대비하여 해외 유전개발 투자(1,645억원 → 3,547억원)와 석유비축(3,115억원 → 3,657억원) 지원을 확대
- 태양광·풍력·수소연료전지 등 미래에너지원인 신재생에너지부문의 기술개발 중점 지원

(단위: 억원)

구 분	'06	'07안	비 고
• 산업진흥·고도화	35,181	35,331	•부품소재(2,520 → 2,691), 지역전략산업(4,265 → 4,036)
• 무역 및 투자유치	4,413	3,890	•외국인 투자유치(845 → 845), 수출보험(500 → 250)
• 에너지 및 자원관리	37,672	43,118	•신재생에너지(4,096 → 4,320), 해외유전개발(3,830 → 7,123)
• 금융지원	39,650	34,518	•신용보증기관 출연(9,000 → 3,300), 지역신보(145 → 134)
• 기술지원 등	7,039	8,228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1,596 → 1,995)
• 산업·중소기업 분야 계(금융지원 제외)	123,955 (84,305)	125,085 (90,567)	0.9% 증 (7.4% 증)
(예 산)	70,132	71,537	2.0% 증
(기 금)	53,823	53,548	△0.5

⑦ 환 경

- 하수처리 시설 확충 및 상수원 수질개선 지속 지원
 - 하수관거 보급을 확대하고, 폐기물의 해양투기 금지에 대비하여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대폭 확충(142억원 → 1,359억원)
 - 주요 상수원인 다목적댐 수질의 근원적 개선을 위해 댐상류 지역 하수처리시설 설치 지원(740억원 → 1,329억원)
-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대기부문 투자 확대
 -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운행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투자 확대(2,081억원 → 2,640억원)
 - 황사·악취·소음 등 생활환경 개선 지속 지원

- 자연보전, 환경보전 및 폐기물 재활용 기반 강화
 - 국립공원 입장료를 폐지하고 공원 탐방 서비스를 강화
 - 어린이 등 민감계층 보호를 위한 기초조사,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체계 마련(신규 29억원) 등 환경보전대책을 강화
 - 폐기물 재활용 강화로 자원순환형 사회 구축 촉진

(단위: 억원)

구 분	'06	'07안	비 고
• 상하수도	25,174	26,457	•하수처리장설치 (5,194 → 5,361) 등
• 대기	3,295	3,698	•수도권 대기개선 추진대책 (2,081 → 2,640) 등
• 폐기물	2,761	2,735	•폐기물전처리시설 설치 (0 → 27) 등
• 자연	1,593	1,940	•생태계 보전지역 및 특정도 서 지정관리(103 → 118) 등
• 해양 등 기타	5,106	5,507	•연안관리(13 → 23) 등
환경보호 분야 계	37,927	40,337	6.4% 증
(예 산)	30,494	32,633	7.0% 증
(기 금)	7,433	7,704	3.6% 증

⑧ 국 방

- 국방비는 국방개혁의 적극 뒷받침을 위해 9.7% 증가 (일반회계 총계)
- 전력투자 확대로 병력위주 군구조를 첨단기술군으로 개편
 - F-15K급 전투기, 3,000톤급 잠수함 등 핵심전력 신규추진
 - K1A1전차, KDX-Ⅲ(이지스함) 및 T-50(고등훈련기) 등 지속 투자
- 장병 사기진작과 병영 기초생활 개선사업을 중점 반영
 - 사병봉급을 지속적으로 현실화 (상병 기준: '06년 65천원 → '07년 80천원)
 - 병영생활관은 침상형(0.7평/인)에서 침대형(2.0평/인)으로 지속적 개선 ('06년 44% → '07년 51%)

- 군 의무분야 지원을 대폭 확대 (장비·물자·시설 확충)

■ 수리부속 등 필수 지출경비를 차질 없이 지원

-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유류비 현실화 ('06년 47\$/배럴 → '07년 65\$/배럴)
- 각군의 필수적인 수리부속 확보 지원 ('06년 7,298억원 → '07년 7,934억원)

(단위: 억원)

구 분	'06	'07안	비 고
• 병력운영	89,188	93,591	• 사병봉급(4,120 → 4,918) 등
• 전력유지	74,504	77,258	• 유류비(5,402 → 6,788), 수리부속(7,298 → 7,934) 등
• 방위력 개선	57,881	68,023	• F-15K급 전투기(신규 226), K1A1(3,091 → 3,237) 등
• 병무행정	1,332	1,434	• 병역의무자 여비 (162 → 175) 등
국방 분야 계(일반회계)	225,046	246,967	9.7% 증

⑨ 문화·관광

- 국민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지원 확대
 - 문화예술 단체지원(278억원 → 295억원) 및 문화시설 확충·운영(189억원 → 254억원)을 통해 국민의 문화수요 충족
- 문화산업 고도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확충
 - 문화콘텐츠 진흥, 기술개발·전문인력 양성 등 문화산업 육성 및 인프라 구축(1,360억원 → 2,254억원)
 - 스크린쿼터 축소에 따른 영화산업 재정지원 확대
 - * 영화발전기금 신설('07안 : 국고 1,000억원, 민간 400억원)
 - 방송영상·출판산업 육성 등 문화미디어산업 육성 (572억원 → 880억원)
- 관광·스포츠 인프라 확대 및 문화재 관리지원 강화
 - 해외관광객 유치(778억원 → 1,052억원) 및 지방체육

시설 확충(515억원 → 790억원)

- 무형문화재 보호관리(87억원 → 104억원) 및 문화재 복원지원(201억원 → 282억원)

(단위: 억원)

구 분	'06	'07안	비 고
• 문화예술	11,589	11,599	•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189 → 254)
• 관광	6,381	6,530	• 해외관광객 유치 (778 → 1,052)
• 체육	4,090	4,366	• 지방체육시설 확충 (515 → 790)
• 문화재	3,865	4,028	• 문화재 복원지원 (201 → 282)
• 기타 문화 및 관광	2,047	2,153	
문화 분야 계	27,972	28,693	2.6% 증 ¹⁾
(예 산)	16,685	17,375	4.1% 증
(기 금)	11,287	11,318	0.3% 증

1) '06년 부지매입이 완료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비(2,079억원→834억원) 감안시 7.6% 증

⑩ 공공질서 및 안전

- 사법서비스 혁신 및 경제적·사회적 약자 보호
 - 국선변호확대, 공판중심주의 도입 등 사법제도 개혁 지원(350억원 → 790억원)
 - 법률구조(232억원 → 254억원), 재소자 수용환경 개선(1,109억원 → 1,190억원) 등
- 효율적인 민생치안 지원
 - 과학수사 장비확충(94억원 → 97억원), 교도소 무인경비시스템 (100억원 → 200억원), 무인교통단속장비운영(783억원 → 818억원) 등
- 독도경비 및 해양주권 강화를 위한 해양경찰 전력증강
 - 대형함정 도입 확대('10까지 30척 → 33척, 562 → 1,003억원)
 - 함정속력·무장 보강, Dry Dock 신축('07~'09, 347억원) 등

- 재해관련 사전예방·항구복구 사업에 대한 투자 확대
 - 상습침수지역 등 재해위험지구 정비(1,165억원 → 1,282억원) 및 수해에 취약한 소하천 정비사업(497억원 → 593억원) 지원 등

(단위: 억원)

구 분	'06	'07안	비 고
• 법원및헌재부문	11,075	11,960	• 사법제도개혁 (350 → 790)
• 법무및검찰부문	18,611	20,212	• 법률구조(232 → 254)
• 경찰부문	62,688	66,104	• 무인교통단속장비운영 (783 → 818)
• 해양부문	6,416	7,446	• 대형함정 건조 (562 → 1,003)
• 소방방재, 민방위부문	11,593 ¹⁾	3,255	• 재해위험지구정비 (1,165 → 1,282)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계('06재해예방투자)	110,383 (101,883)	108,976	△1.3% (7.0% 증)

1) '06년 재해추경 8,500억원 포함

참고 자료

재해예방투자

- 재해에 대한 사전 예방투자를 강화하여 인명·재산 피해 최소화
 - 댐건설·하천정비 등 수계치수사업에 대한 지속 투자
 - 홍수조절 효과가 큰 다목적댐 건설 지원 확대
 - 하천개수율이 낮은 지방하천·지방소하천에 대한 지원 강화
 - 농림어업 재해예방을 위한 투자 확대
 - 산사태 예방 효과가 높은 사방댐 건설 대폭 확대(203개 → 400개)
 - 수리시설 개보수 등 농업 재해예방 강화
 - 재해위험지구 정비, 재난 예·경보기능 강화
 -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120개소 → 208개소) 등 재해관련 사전 예방 효과가 높은 사업에 대한 투자 확대
 - 기상관측 시설 현대화 등을 통한 재난 예·경보기능 강화

(단위: 억원)

구 분	'06	'07안	비 고
• 하천·댐 분야	14,851	17,794	• 다목적댐건설(2,042 → 2,233) • 지방하천 치수(3,280 → 3,452) • 수해상습지 개선(2,500 → 3,385)
• 농업·산림·어업 분야	15,149	15,238	• 사방사업(575 → 987) • 수리시설 개·보수(3,454 → 3,500)
• 방재·기상 분야	3,688	4,119	• 재해위험지구 정비(1,165 → 1,282) • 기상장비현대화(208 → 361)

통일·외교

- 남북경협과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대북사업 지원규모 적정수준 유지
- 일반회계 출연금은 '06년 수준 유지(6,500억원)
 - * 남북협력기금은 경수로사업 종료('06, 2,041억원) 등으로 사업규모 축소
- 쌀·비료 등 지원 사업의 경우 금년 수준 유지(식량 50만톤, 비료 35만톤)
- 개성공단 개발을 위해 기반시설, 종합지원센터 건설 등 지원
- 우리의 경제력 규모에 상응한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강화
 - 국제기구분담금 체납금을 '08년까지 조기 해소(1,567억원 → 2,300억원)
 - 공적개발원조(ODA) 규모 확대
 - * GNI 대비 ODA 규모 : ('06) 0.08% → ('07안) 0.09%
- 국민편익 증진 및 재외국민 보호활동 강화
 - 여권발급 경비 증액(365억원 → 661억원)으로 대국민 서비스 적극 개선
 - 해외 체류 국민의 안전 및 재외동포의 권익 보호 지원

(단위: 억원)

구 분	'06	'07안	비 고
• 통일부문	13,756	10,716	• 경수로사업 종료로 2,041억원 감소
• 외교부문	11,758	13,773	• 국제기구분담금 : 1,567억원 → 2,300억원
통일·외교 분야 계 (경수로사업 제외시)	25,514 (23,473)	24,489	△ 4.0% (4.3% 증)
(예 산)	9,721	11,342	16.7% 증
(기 금)	15,793	13,147	△ 16.8 %

⑫ 국가균형발전

- '07년 균특회계는 지자체 역할 강화 및 효율성 제고에 중점
 - 지자체 자율편성사업을 대폭 확대(2.8조원 → 4.5조원)
 - 재래시장 활성화 등 지역발전사업 위주로 중점 지원
 - 세출구조조정,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원(113억원 → 300억원)
 - 지역전략산업 진흥 등 혁신계정 사업은 내실화에 중점
- 제주계정을 신설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을 적극 지원
 - 제주지역 국고보조사업, 7개 특별행정기관 및 자치경찰 이체 인건비를 지원(3,500억원 수준)
-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을 통해 지역 생활환경 개선 및 삶의 질 개선 추진
 - 각 부처에서 추진중인 사업을 패키지화하여 효과성 제고
 - 지역 주요자원 실태조사 및 DB화, 시범사업 등 추진

(단위: 억원)

구 분	'06	'07안	비 고
• 지역개발계정 사업	45,920	48,570	• 낙후지역개발(10,363 → 10,707), 재해예방(5,100 → 5,551)
• 지역혁신계정 사업	13,890	15,018	• 지역전략산업진흥(4,265 → 4,036), NURI(2,600 → 2,594)
• 제주계정 사업 ('07신설)	3,304	3,484	• 국고보조사업(2,018 → 2,081), 특별행정기관(1,269 → 1,386)
국가균형발전 분야 계	63,114	67,072	6.3% 증

⑬ 정보화 및 통신

- 지능기반사회(u-Korea) 실현을 위한 IT 신성장동력 기술개발 및 기반구축에 대한 지원 강화
 - 송도 u-IT허브, 누리꿈 스퀘어(서울 상암동) 등 동북아 IT허브 기반 조성 지원(1,171억원 → 1,320억원)
 - u-City 및 u-Defense 등 범국가적 프로젝트 추진(신규, 103억원)
- 정보격차 해소, 정보보호 등 정보화 역기능 방지 노력 강화
 - 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제고를 위한 중고PC 및 장애인용 보조기기 보급 사업 지원 확대(62억원 → 72억원)
 - 해킹·바이러스 대응, 인터넷 중독 예방 등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화 역기능 예방 강화(143억원 → 172억원)
- 통신사업 특별회계를 우편사업 및 우체국예금 특별회계로 분리, 책임경영체제 구축

(단위: 억원)

구 분	'06	'07안	비 고
• IT산업경쟁력강화	14,809	13,987	• 송도 u-IT허브(371 → 920), u-City(신규53)
• 전자정부 구현	9,165	9,699	• 전자정부 지원(2,757 → 2,907), 지방행정정보화(236 → 325)
• 국민생활정보화	9,492	9,897	• 주민생활통합정보시스템(신규83)
• 정보화 역기능 완화	949	978	• 정보화미움(62 → 67), 개인정보보호(34 → 56)
• 우정부문	41,715	43,515	• 국제우편(948 → 1,051)
정보화 및 통신분야 계	76,130	78,076	2.6% 증
(예 산)	65,257	65,864	0.9% 증
(기 금)	10,873	12,212	12.3% 증

II. 2007년 BTL 사업 추진계획(안)

1. 2007년 BTL 사업의 중점

- 그간 시행경험과 제도개선을 토대로 BTL 사업 추진을 본격화
- 고시규모는 '06년 8.3조원 → '07년 9.9조원 수준으로 증가

〈'07 BTL 한도(안) 및 집행전망〉

(단위: 조원)

	'05 실적	'06 계획	'06 계획(안)	증가율(%)
• BTL 고시규모 (집행규모)	3.8조원 (0.13조원)	8.3조원 (1.5조원)	9.9조원 수준 (3.5조원)	19.3 (133.3)

- 재정투자를 보완하여 국가적으로 조기확충이 필요한 사회기반시설 중심으로 추진
- 2014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와 연계한 원주~강릉 및 수도권 수송효율 증진을 위한 소사~원시 철도 조기구축(5.2조원)
- 울산국립대 신설과 대학 기숙사 등을 BTL로 추진(0.4조원)
- 군 정보통신망 및 재난발생시 공조체계 구축을 위한 통합지휘통신망 사업 신규반영(0.5조원)
- 군주거시설, 문화·복지시설 등은 사업추진 여건을 감안하여 연내 추진가능한 적정수준으로 조정
- 사병내무반, 독신자숙소 등 군 주거시설 개선 지속투자(0.5조원)
- 노후 하수관거 정비 및 문화·복지시설 등은 계속 지원하되, 시급성과 준비상황 등을 고려하여 선별투자(1.5조원)

2. 2007년도에 실시할 BTL 대상시설별 한도액

- 16개 사업분야에 9.9조원 규모

(단위: 조원)

대상시설	사업규모	(추정)총사업비
□ 국가사업		
① 군인 아파트 및 독신자숙소	3,230세대, 870실	3,469
② 사병내무반	육군 15세대 해·공군 30동	1,924
③ 일반철도	2개노선 134km	51,977
④ 국립대학교 시설	2개교	3,324
⑤ 기능대학 시설	10개교	707
⑥ 군 정보통신망	광케이블 3,412km	2,595
⑦ 재난 통합지휘무선통신망	178개 시군구	2,109
소계		66,105
□ 국고보조 지자체사업		
⑧ 노후 하수관거 정비	1,539km	13,070
⑨ 생활체육시설	1개소	187
⑩ 도서관	2개소	115
⑪ 복합 문화시설 ¹⁾	1개소	620
⑫ 노인의료복지시설	1개소	150
⑬ 공공보건의료시설	1개소	571
⑭ 복합 노인복지시설 ¹⁾	1개소	182
⑮ 과학관	1개소	227
소계		15,122
□ 예비사업 한도액 ²⁾		4,061
□ 지자체 자체사업 ³⁾		14,000
합 계		99,288

- 1) 민투법상 대상시설 중 2개 이상 시설을 함께 건설하는 경우
- 2) 국가사업 및 국고보조 지자체사업에 추가 사용될 수 있는 예비사업한도액(① ~ ⑮ 한도액 합계의 5%)
- 3) 초중등학교 신·개축 사업 등으로 자체 사업추진 과정에서 변동 가능

III.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

1. 중기 재정운용 여건

1-1. 경제성장

- 세계경제는 '06 ~ '10년 기간중 3%대의 실질성장 예상

- 다만, 미국 경상수지 적자 등 글로벌 불균형 심화, 국제금리 인상, 유가의 추가적 상승 등 불안요인은 상존
- 국내경제는 연평균 4% 후반대(경상 7% 초반)의 실질 성장 전망
- '06년은 하반기 성장세가 다소 둔화될 전망이나, 상반기 높은 성장세에 힘입어 연간 5%의 실질 성장 가능
- '07년은 세계경제 둔화, 국제유가 등 대외여건을 감안할 때 당초 전망보다 다소 낮은 4.6% 성장 전망
- '08년 이후는 잠재성장률 수준(4%대 후반)으로 수렴 전망

〈'06~'10년 경제성장률 전망〉

	'05*	'06	'07	'08	'09	'10
• 실질성장률(%)	4.0	5.0	4.6	4.9	4.8	4.8
• 경상성장률(%)	3.5	5.3	6.7	7.4	7.3	7.3

* 2005년 국민계정 잠정치(한은, '06. 3. 22)

1-2. 총수입

- 총수입은 경상성장률보다 다소 낮은 연평균 7.1% 증가 전망
- 예산수입은 국세를 중심으로 7.6% 증가, 기금수입은 사회보장성기금을 중심으로 6.0% 증가 전망

(단위: 조원, %)

	'06	'07	'08	'09	'10	연평균 증가율
◆ 총수입 (증가율)	235.3	251.8	269.8	289.0	309.1	7.1 (7.0)
• 예 산	155.8	167.3	181.0	194.5	208.6	7.6
• 기 금	79.5	84.4	88.8	94.5	100.5	6.0
◦ 사회보장수입	41.2	44.5	47.8	51.8	56.4	8.2

2. 지출규모 및 재정수지

2-1. 총지출

- '06~'10년 기간중 총지출은 연평균 6.4% 증가
- 미래 성장동력 확충, 국민 기본수요 충족 등 국가의

역할과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예산 6.9%, 기금 5.1% 증가

(단위: 조원, %)

	'06	'07	'08	'09	'10	연평균 증가율
◆ 총지출 (증가율)	224.1	238.5	253.8	269.9	287.0	6.4 (6.4)
• 예 산	153.7	164.7	176.2	188.3	201.1	6.9 (6.3)
• 기 금	70.4	73.8	77.6	81.6	85.9	5.1
◦ 사회보장지출	15.2	17.5	19.8	22.5	25.3	13.7

2-2. 재정수지 및 국제 규모

- 통합재정수지는 '06년 공적자금 상환이 종료됨에 따라 '07년 이후 흑자 지속
-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대상수지는 '07년 이후 GDP 대비 $\Delta 1\%$ 내외로 안정화될 전망

(단위: 조원)

	'06	'07	'08	'09	'10
• 통합재정수지 (GDP 대비, %)	$\Delta 0.9$ ($\Delta 0.1$)	13.3 (1.5)	15.9 (1.6)	19.0 (1.8)	22.1 (2.0)
• 관리대상수지 (GDP 대비, %)	$\Delta 14.9$ ($\Delta 1.7$)	$\Delta 13.7$ ($\Delta 1.5$)	$\Delta 12.1$ ($\Delta 1.2$)	$\Delta 10.3$ ($\Delta 1.0$)	$\Delta 9.0$ ($\Delta 0.8$)

-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07년(33.4%) 이후 점차 하락 전망
- 일반회계 국채는 '06년 9.3조원에서 '10년 7조원대로 감소

(단위: 조원)

	'06	'07	'08	'09	'10
• 국가채무 (GDP대비, %)	283.5 (33.4)	302.9 (33.4)	320.4 (32.9)	336.9 (32.3)	350.5 (31.3)
• 일반회계 국채	9.3	8.7	8.5	8.1	7.5

〈참고 자료〉

국가채무 현황

■ 국가채무범위 국제기준

- 국가의 직접적 · 확정적 채무만 대상
* 보증채무, 공적연금 잠재채무, 통안증권 · 공기업 채무 불포함

■ 국가채무 현황

-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07년말 302.9조원 (GDP 대비 33.4%)
- 계획기간 중 국가채무 증가 규모를 점차 축소하여, '10년에는 GDP 대비 31% 수준 전망

(단위: 조원)

	'06	'07	'08	'09	'10
• 국가채무	283.5	302.9	320.4	336.9	350.5
(GDP 대비, %)	33.4	33.4	32.9	32.3	31.3

■ 국가채무 증가원인

- '03~'07 기간중 증가한 국가채무 대부분(78%, 133조원)은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운용과 환율안정 정책 추진 등에 사용
- ①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발생한 공적자금의 국채전환 소요 : 31%(53조원)
- ②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자원조달 소요 : 41%(69조원)
- ③ 서민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국민주택채권 발행 : 6%(11조원)
- 순수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발행은 32.5조원 (19%)에 불과
- 이 중 국채로 전환된 공적자금의 상환을 위한 재정 지원금(7.4조원)을 제외할 경우 25.1조원(14.8%)에 그침

〈국가채무의 기간별 증가 요인〉

(IMF기준, 조원)

	'97	'02	'07안	'03~'07 증가액
• 국가채무 (GDP대비)	60.3 (12.3%)	133.6 (19.5%)	302.9 (33.4%)	169.3 (13.9%p)
• 일반회계	-	26.4	58.9	32.5
• 공적자금	-	-	53.0	53.0
• 외환시장안정용	4.2	20.7	89.7	69.0
• 국민주택기금	16.4	34.0	44.6	10.6
• 기 타	39.7	52.5	56.7	4.2

■ 우리나라 국가채무('07년 GDP 대비 33.4%)는 충분히 감당 가능한 수준

- 국민부담으로 상환해야 할 적자성 채무(129.5조원)는 전체의 42.8%, 나머지(57.2%)는 융자금 회수 등 자체 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
- OECD 국가의 평균 77.7%('05)에 비해서도 크게 낮은 수준
* EU 마스트리히 조약('92년)
• 국가채무 : GDP 대비 60% 이내, 재정적자 : GDP 대비 3% 이내
- 실질적인 재정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보유채권도 함께 고려할 필요('05년말 금전채권 131조원, 총보유자산 395조원)

■ 국가채무 관리 노력 강화

- 국가재정법 제정을 계기로 국가채무관리계획 수립 등 국가채무 관리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 마련
- 향후 공적연금 · 보험지출 · 통일비용 등 잠재적 재정 부담에 대비하여 국가채무 관리노력을 지속할 계획

3. '06~'10년 자원배분 방향

3-1. 기본 방향

- 국민 기본생활보장과 미래사회 대비 분야에 중점 지원
- 인프라 구축이 진전된 분야, 민간 · 시장과의 역할분담이 가능한 분야는 재정지원 내실화에 중점

3-2. 분야별 재원배분 방향

- R&D 분야는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지속 투자 확대
- 사회 분야는 사회통합을 통한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 구조 형성
 - 교육 분야는 교육복지 확충,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에 중점
 - 복지 분야는 사회안전망 확충, 저출산·고령화 대비 투자 확대
 - 문화 분야는 국민의 문화수요 충족, 문화·관광산업 육성에 중점
- 경제 분야는 민간역할을 강화하면서 재정투자를 내실화
 - 수송 및 교통 분야는 투자재원 다변화를 통해 재정투자 보완
 - 농어촌 분야는 농업·농어촌 종합대책을 내실있게 추진
 -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기술개발·에너지 분야 중점 지원
 - 환경 분야는 대기질·수질 등 생활환경 개선투자에 중점
- 국방 분야는 국방개혁과 복무여건 개선 등을 적극 뒷받침하고, 통일·외교 분야는 남북교류협력, 공적개발원조 등에 중점

3-3. 주요 분야별 재원배분 계획

(단위: 조원, %)

구 분	'06	'07	'08	'09	'10	연평균
1. R&D	8.9	9.8	10.7	11.6	12.6	9.1
2. 교 육	28.8	30.9	33.7	36.4	39.3	8.1
3. 사회복지·보건	56.0	61.8	66.9	72.9	79.4	9.1
4. 수송교통·지역개발	18.4	18.2	18.8	19.3	19.6	1.6
5. 농림·해양수산	15.5	15.9	16.2	16.3	16.5	1.6
6. 산업·중소기업	12.4	12.5	12.4	12.5	12.8	0.7
7. 환 경	3.8	4.0	4.3	4.5	4.8	6.2
8. 국 방(일반회계)	22.5	24.7	26.9	29.3	31.8	9.0
9. 문화·관광	2.8	2.9	3.0	3.2	3.4	4.9
10. 공공질서·안전	11.0	10.9	11.3	11.8	12.5	3.1
11. 통일·외교	2.5	2.4	2.7	2.9	3.2	6.0
12. 균형발전(균특)	6.3	6.7	7.2	7.7	8.2	6.8

* 분야별 재원배분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순계 기준

2007년 국세 세입예산(안)

이 자료는 2006년 9월 29일 재정경제부 조세분석과에서 발표한 <2007년 국세 세입예산(안)>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2006년 국세수입은 138조 272억원으로 전망
 - 이는 2005년 실적(127조 4,657억원) 대비 8.3% 증가한 것으로 예년 수준으로 증가한 것임
 - * 총국세 증가율 : '02) 8.5% → '03) 10.3% → '04) 2.7% → '05) 8.2% → '06e) 8.3%
 - * '04년도의 경우 내구재 소비가 줄고(△4.7%), 민간 소비가 위축(△0.3%)되는 등 내수침체에 따라 국세 증가율이 2.7% 증가에 그침
- 2007년 국세수입은 148조 1,211억원으로 전망
 - 2006년 세입전망(138조 272억원) 대비 7.3%(10.1조 원) 증가하여 2006년 국세증가율(8.3%)에 비해 낮은 수준
 - 조세부담률은 2006년에 20.7%(전망)로 지난해(20.3%, 잠정)에 비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07년에는 20.56%(전망)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
 - * OECD평균 조세부담률 : 26.8% ('03년 기준)

1. 2006년 세입 전망

- 2006년 총국세 규모는 138조 272억원으로 전망
 - 2005년 국세실적(127조 4,657억원) 대비 8.3%(10조 5,615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

(단위: 억원, %)

구 분	2005년 실적(A)	2006년		'05년실적 대비(C-A)		'06년예산 대비(C-B)	
		예산(B)	실적(A)	대비(C-A)	%	대비(C-B)	%
총 국 세	1,274,657	1,353,336	1,380,272	105,615	8.3	26,936	2.0
일반회계	1,223,916	1,300,388	1,327,705	103,789	8.5	27,317	2.1
특별회계	50,741	52,948	52,567	1,826	3.6	△381	△0.7

- 회계별로 보면
 - 일반회계는 132조 7,705억원으로 2005년 실적(122조 3,916억원) 대비 8.5%(10조 3,789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
 - 특별회계는 5조 2,567억원으로 2005년 실적(5조 741억원) 대비 3.6%(1,826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주요 세목별로는
 - 실가 과세 확대에 따라 양도소득세 2.6조원(58.4%),

임금상승 및 근로자 수 증가에 따라 근로소득세가 1.8조원(17.4%) 증가하는 등 소득세가 5.3조원(21.7%) 수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 경제 성장 및 민간소비 증가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2.0조원(5.5%) 수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 법인세를 인하(2%p)에 따라 법인세는 △0.7조원(△2.4%) 감소할 것으로 전망

2. 2007년 세입예산(안)

- 2007년 국세세입 예산(안)은 148조 1,211억원으로 전망
- 2006년 전망(138조 272억원) 대비 7.3%(10조 939억원) 증가

(단위: 억원, %)

구 분	2006년		2005년 실적(C)	예산대비(C-A)	%	전망대비(C-B)	%
	실적(A)	예산(B)					
총 국 세	1,353,336	1,380,272	1,481,211	127,875	9.4	100,939	7.3
일반회계	1,300,388	1,327,705	1,424,810	124,422	9.6	97,105	7.3
특별회계	52,948	52,567	56,401	3,453	9.5	3,834	7.3

- 회계별로 보면
- 일반회계는 142조 4,810억원으로 '06년 전망(132조 7,705억원)보다 7.3%(9조 7,105억원) 증가
- 특별회계는 5조 6,401억원으로 '06년 전망(5조 2,567억원)보다 7.3%(3,834억원) 증가

※ 조세부담률

- 2006년 조세부담률은 20.7%(전망)로 2005년(20.3%, 잠정)에 비해 0.4%p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2007년에는 20.56%(전망)로 0.1%p~0.2%p 하락할 것으로 예상

* 조세부담률 추이 : ('03)20.4% → ('04)19.5% → ('05)20.3% → ('06)20.7% → ('07)20.56%

- 조세부담률 국제비교

('03년 기준, %)

구 분	한국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이태리	영국	OECD
조세부담률	20.4	18.8	15.6	27.0	21.1	30.4	29.0	26.8

* 출처: OECD Revenue Statistics ('05년판)

3. '07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 2007년 일반회계 국세세입은 142조 4,810억원으로 '06년 전망 대비 7.3%(9조 7,105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

(단위: 억원, %)

구 분	'06년 전망	'07년 예산(안)	'06년 전망 대비	
			증감액	증감률
일반회계	1,327,705	1,424,810	97,105	7.3
내 국 세	1,102,623	1,182,912	80,289	7.3
교 통 세	110,656	114,240	3,584	3.2
관 세	67,011	170,965	3,954	5.9
교 육 세	35,876	37,602	1,726	4.8
종합부동산세	11,539	19,091	7,552	65.4

- 내국세는 '06년 전망보다 7.3%(8조 289억원) 증가 전망
- 소득세 : 임금상승 및 고용증가, 금리상승, 자영업사업자 과표양성화 등에 따라 10.1%(3조 251억원) 수준 증가
- 부가가치세 : 민간소비(4.2%) 및 수입 증가(10.1%) 등에 따라 8.4%(3조 2,053억원) 수준 증가
- 법인세 : 법인 실적 부진으로 신고분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나 금리 상승에 따른 원천분이 증가하여 5.9%(1조 7,125억원) 수준 증가
- * 회사채 금리 상승률(%) : ('05) 4.7 → ('06) 5.4 → ('07) 5.5
- 교통세는 '06년 전망보다 3.2%(3,584억원) 증가 예상
- 유류소비량은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른 경유세율 인상에 따라 3.2% 수준

증가

- 종합부동산세는 '06년 전망보다 65.4%(7,552억원) 증가 전망
- 부동산 가격 상승, 과표적용률 인상(70%→80%) 등에 기인

4. '07년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 '07년 특별회계 국세세입은 5조 6,401억원으로 '06년 전망 대비 7.3%(3,834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

(단위: 억원, %)

구 분	'06년 전망	'07년 예산(안)	'06년 전망 대비	
			증감액	증감률
특별회계	52,567	56,401	3,834	7.3
주 세	23,979	23,785	△194	△0.8
농어촌특별세	28,588	32,616	4,028	14.1

- 주세는 '06년 전망보다 △0.8%(△194억원) 감소 전망
- 주류소비 감소추세 및 맥주세율 인하에 따라 다소 감소
- * 맥주세율 : 80% → 72%
- * 맥주출고량 : ('05.1~5) 693천kl → ('06.1~5) 671천kl (△3.2%)
- 농어촌특별세는 '06년 전망보다 14.1%(4,028억원) 증가 전망
- 보유세 강화에 따른 토지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증가에 기인
- * 토지분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액의 20%(Sur-Tax)

<참고 자료>

'06년 세입전망 / '07년 세입예산

(단위: 억원, %)

구 분	'05년	'06년		'07년
	실적	예산	전망	예산(안)
총 국 세	1,274,657	1,353,336	1,380,272	1,481,211
소 득 세	246,505	276,777	299,875	330,126
법 인 세	298,055	268,831	290,832	307,957
상 속 증 여 세	18,7282	1,9832	3,1302	5,921
부 가 가 치 세	361,187	413,152	381,201	413,254
특 별 소 비 세	43,995	44,341	49,883	52,041
증 권 거 래 세	23,705	18,025	24,597	23,244
인 지 세	5,000	4,963	5,772	6,041
과 년 도 수 입	21,113	22,914	27,333	24,328
교 통 세	102,878	117,219	110,656	114,240
관 세	63,177	65,026	67,011	70,965
교 육 세	35,266	36,957	35,876	37,602
종 합 부 동 산 세	4,413	10,200	11,539	19,091
주 세	26,011	25,603	23,979	23,785
농 어 촌 특 별 세	24,730	27,345	28,588	32,616

2006년 국세수입의 주요 특징

주요 지표 변화

- 조세부담률 다소 상승 전망(20.3% → 20.7%)
- '06년 경상성장률 전망(5.3%)에 비해 '06년 조세증가율 전망(7.6%)이 높은 데 기인
- * 국세 증가율 : 8.3%, 지방세 증가율 : 5.0%

조세부담률 추이 : ('03)20.4% → ('04)19.5% → ('05) 20.3% → ('06)20.7% → ('07)20.56%

(06)7.5

* 조세증가율(%) : (02)10.6 (03)9.1 (04)2.7 (05)7.3 (06)8.1

* 인구증가율(%) : (02)0.63 (03)0.57 (04)0.48 (05)0.44 (06)0.42

* 1인당 조세부담액(만원) : (02)284 (03)308 (04)316 (05)338 (06)352

③ 현재 근로소득자의 51%, 자영업자의 48%가 소득세의 면세점 이하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

⇒ 실질조세부담은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비율로 산출해야 하며, 이 경우 조세부담률이 적절한 세부담 지표임

2007년 세입예산(안) 추가설명자료

■ 소득세 세부 세목별 증가율 전망

(단위: 억원, %)

구 분	2005년 실적	2006년		'07년 예산	
		전망	비율	금액	비율
종합소득세	46,070	47,608	3.3	53,252	11.9
양도소득세	44,521	70,524	58.4	74,110	5.1
근로소득세	103,862	121,893	17.4	137,764	13.0

○ 종합소득세 : 소득세율 인하 및 개인 영업실적 부진에 따라 '06년 증가율은 다소 둔화되었으나

• 성장에 따른 소득금액 증가와 자영업자 과표양성화에 따라 '07년에는 11.9% 수준 증가 전망

○ 양도소득세 : 실가과세 확대 및 실거래가 신고에 따라 '06년 증가율은 58.4% 증가 전망, 2007년의 경우 2주택자 등에 대한 양도세 증가에 따라 5.1% 증

가 전망

○ 근로소득세 : 임금상승 및 임금근로자 수 증가, 성과상여금 연봉제 등의 확산에 따른 고액연봉자 수 증가에 따라 '06, '07년 각각 17.4%, 13.0% 증가 전망

* 임금상승률 전망 : ('06) 6.4% 수준 ('07) 6.0% 수준

* 연봉제, 성과상여금제 도입비율(%) : ('03)28.2 ('04)30.6 ('05)32.1

■ '07년도 지방세입예산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성하여, 지방의회에서 심의·확정하는 것으로

○ 내년 1월경 행자부에서 집계할 예정임

○ 조세부담률 산정에 반영된 지방세수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해 행정자치부에서 성장률 등을 반영하여 추계한 것임

■ '06~'07 국민부담률 전망은 기금 등에 대한 예산을 관장하는 기획예산처에서 9. 28일 국가재정운용계획('06~'10)에 포함하여 발표할 예정

■ 2006년 예산편성 당시 2005년 실적전망 대비 예산 증가율은 7.9%임

○ ('05전망) 125.9조원 ('06예산) 136.0조원

■ 2005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 결산실적(2006. 4. 4, 증권선물거래소)

○ 순이익 : 48,46조원 → 47,44조원(Δ2.1%)

| 재정통계 |



■ OECD 국가의 1인당 조세부담금

0%

〈OECD 국가의 1인당 조세부담금〉

(단위: 달러)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1973	1974
호주	483.1	508.6	552.9	606.5	680.8	743.4	834.7	947.0	1414.8	1821.1
오스트리아	452.0	499.1	525.3	562.3	619.8	691.5	816.6	1014.1	1355.9	1659.0
벨기에	547.4	623.8	678.3	740.1	822.8	927.9	1071.6	1321.1	1744.5	2092.4
캐나다	720.1	816.1	895.6	997.4	1162.3	1261.5	1387.7	1598.7	1823.3	2332.4
체코	-	-	-	-	-	-	-	-	-	-
덴마크	640.0	757.3	832.9	931.8	1044.8	1295.8	1550.1	1862.8	2411.7	2784.8
핀란드	554.4	614.7	639.2	606.9	662.3	768.9	890.3	1056.5	1421.5	1765.3
프랑스	702.4	749.7	812.3	882.2	974.2	965.1	1050.4	1293.4	1664.3	1791.0
독일	618.8	664.3	671.6	720.9	853.9	1001.7	1171.9	1454.9	2008.9	2234.3
그리스	154.1	183.2	204.9	230.2	260.7	282.2	309.1	353.2	428.0	507.3
헝가리	-	-	-	-	-	-	-	-	-	-
아이슬란드	723.5	-	-	-	-	695.7	-	-	-	-
아일랜드	243.0	275.8	301.4	298.8	351.7	411.4	489.7	572.7	671.4	707.5
이탈리아	328.1	350.1	397.3	440.6	472.4	521.7	585.7	675.7	738.9	874.8
일본	175.0	197.8	235.2	278.8	332.0	397.3	453.1	620.3	888.0	989.3
한국	-	-	-	-	-	-	-	40.2	48.6	73.5
룩셈부르크	644.1	666.3	687.3	722.7	836.9	1000.3	1129.3	1425.5	1961.7	2441.0
멕시코	-	-	-	-	-	-	-	-	-	-
네덜란드	537.7	602.8	672.9	753.1	850.2	965.7	1165.0	1453.4	1956.8	2321.8
뉴질랜드	528.2	558.3	563.3	472.4	521.2	622.8	734.7	860.5	1176.0	1421.8
노르웨이	633.3	704.9	808.2	880.8	987.6	1132.3	1375.3	1703.4	2218.5	2630.3
폴란드	-	-	-	-	-	-	-	-	-	-
포르투갈	75.5	85.4	103.2	114.4	131.0	161.9	183.2	220.8	289.6	339.4
슬로바키아	-	-	-	-	-	-	-	-	-	-
스페인	107.0	113.8	153.9	143.7	166.7	185.5	212.5	282.1	384.2	455.2
스웨덴	999.8	1101.0	1217.8	1359.2	1503.7	1655.2	1845.3	2237.1	2656.2	3027.9
스위스	485.0	535.0	572.2	632.7	709.4	787.6	923.4	1141.6	1675.8	2002.5
터키	40.5	47.4	55.0	58.8	68.8	62.7	67.0	83.7	106.7	135.2
영국	563.9	612.1	669.3	651.0	732.8	823.1	877.5	956.1	1013.5	1201.4
미국	859.6	946.6	1049.6	1089.3	1290.1	1349.3	1342.1	1491.4	1645.7	1821.2
OECD TOTAL	492.4	531.0	578.2	616.3	697.2	780.0	889.8	1027.8	1321.0	1559.6
OECD AMERICA	789.8	881.3	972.6	1043.3	1226.2	1305.4	1364.9	1545.1	1734.5	2076.8
OECD PACIFIC	395.4	421.6	450.4	452.6	511.3	587.8	674.1	617.0	881.9	1076.5
OECD EUROPE	476.3	510.4	555.7	596.1	669.4	755.1	873.0	1061.6	1372.7	1609.5
EUROPEAN UNION (15)	477.9	526.6	571.2	610.5	685.6	777.9	889.9	1078.6	1380.5	1613.5
EUROPEAN UNION (19)	477.9	526.6	571.2	610.5	685.6	777.9	889.9	1078.6	1380.5	1613.5

〈OECD 국가의 1인당 조세부담금〉의 계속

(단위: 달러)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호주	1979.8	2126.3	2071.1	2306.3	2587.9	3066.0	3536.4	3369.6	3241.2	3643.2
오스트리아	1920.6	2055.8	2489.3	3174.6	3731.1	4192.5	3720.8	3615.6	3634.9	3576.1
벨기에	2616.8	2743.9	3471.3	4299.6	5027.0	5256.2	4366.0	3947.6	3801.5	3695.7
캐나다	2448.2	2803.8	2750.2	2804.8	3073.8	3524.0	4101.9	4103.0	4388.3	4505.0
체코	-	-	-	-	-	-	-	-	-	-
덴마크	3075.7	3403.8	3830.8	4803.3	5733.0	5872.4	5062.0	4841.6	5090.0	5080.4
핀란드	2242.4	2675.3	2825.3	2778.6	3277.9	3954.9	4073.5	3982.5	3784.1	4065.6
프랑스	2344.9	2547.4	2776.1	3415.4	4278.8	5030.2	4402.2	4238.7	4085.0	3949.8
독일	2430.8	2661.0	3200.7	3952.1	4664.7	5020.4	4154.5	3997.8	3984.1	3779.3
그리스	580.1	679.2	787.8	949.4	1196.5	1202.4	1105.8	1293.8	1183.9	1171.0
헝가리	-	-	-	-	-	-	-	-	-	-
아이슬란드	1904.3	-	-	-	-	4322.0	4582.7	4187.6	3258.7	3486.2
아일랜드	832.8	905.6	1012.5	1232.9	1498.8	1925.4	1870.8	2006.7	2008.6	1974.8
이탈리아	1003.9	1022.4	1189.2	1458.0	1760.7	2420.6	2267.0	2405.0	2640.7	2545.6
일본	964.3	1116.0	1387.8	2070.7	2167.4	2357.8	2630.9	2459.8	2724.0	2905.9
한국	91.6	134.7	169.9	231.7	299.3	288.8	313.9	335.6	374.8	386.2
룩셈부르크	2825.7	3099.2	3792.6	4800.9	5243.8	5841.5	5022.9	4723.7	4894.9	4616.7
멕시코	-	-	-	-	-	507.2	620.1	428.7	400.7	449.6
네덜란드	2780.8	2999.3	3559.1	4396.8	5052.9	5484.9	4485.6	4384.3	4342.8	3889.5
뉴질랜드	1343.2	1326.7	1544.1	1788.1	2109.5	2352.7	2599.0	2563.7	2331.6	2225.0
노르웨이	3185.8	3591.0	4204.9	4634.7	5257.9	6614.9	6725.8	6478.3	6163.0	6075.1
폴란드	-	-	-	-	-	-	-	-	-	-
포르투갈	397.5	440.8	469.0	491.0	542.1	730.0	744.3	724.2	680.3	615.0
슬로바키아	-	-	-	-	-	-	-	-	-	-
스페인	573.8	585.2	709.8	903.6	1225.4	1349.7	1233.1	1199.8	1124.4	1183.4
스웨덴	3879.9	4577.4	5049.4	5610.9	6441.8	7375.0	6917.4	5965.6	5557.2	5723.2
스위스	2499.4	2790.4	3018.9	4203.9	4637.9	4869.7	4443.2	4599.8	4701.7	4483.0
터키	186.2	213.0	248.6	262.3	331.8	277.7	296.5	254.5	221.4	175.3
영국	1469.2	1405.0	1564.3	1890.3	2395.9	3348.1	3311.8	3358.8	3050.8	2878.9
미국	1923.3	2063.5	2387.6	2642.3	2943.1	3208.6	3621.3	3751.7	3723.9	4118.0
OECD TOTAL	1820.0	2002.8	2271.3	2712.6	3145.0	3476.7	3315.7	3200.7	3130.5	3123.0
OECD AMERICA	2185.7	2433.6	2568.9	2723.6	3008.4	2413.2	2781.1	2761.1	2837.6	3024.2
OECD PACIFIC	1094.7	1175.9	1293.2	1599.2	1791.0	2016.3	2270.1	2182.2	2167.9	2290.0
OECD EUROPE	1934.2	2138.6	2455.5	2958.8	3461.0	3952.0	3620.3	3484.5	3379.4	3313.9
EUROPEAN UNION (15)	1931.6	2126.8	2448.5	2943.8	3471.4	3933.6	3515.8	3379.0	3324.2	3249.7
EUROPEAN UNION (19)	1931.6	2126.8	2448.5	2943.8	3471.4	3933.6	3515.8	3379.0	3324.2	3249.7

〈OECD 국가의 1인당 조세부담금〉의 계속

(단위: 달러)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호주	3172.7	3376.6	3962.0	4869.5	5282.2	5296.5	5047.1	4840.4	4744.4	5540.5
오스트리아	3708.9	5277.6	6550.6	7024.1	6803.2	8518.1	8907.7	10270.7	10038.6	10695.5
벨기에	3831.8	5298.4	6684.2	7022.6	6780.4	8543.8	8774.9	9644.3	9522.4	10414.4
캐나다	4552.6	4772.8	5596.7	6380.5	7167.5	7554.9	7804.3	7406.1	7038.8	6975.2
체코	-	-	-	-	-	-	-	-	1453.0	1642.5
덴마크	5545.9	8161.6	10272.6	10924.5	10361.5	12375.7	12242.1	13526.2	12995.7	14448.9
핀란드	4457.4	6023.7	7199.9	9253.9	9963.1	12179.0	11334.6	9821.1	7659.9	9239.2
프랑스	4108.0	5655.6	6899.6	7337.5	7292.1	8982.7	9020.7	9815.8	9268.3	9866.7
독일	3867.1	5480.5	6886.1	7318.5	7291.3	8703.0	8148.7	9457.8	9129.3	9799.6
그리스	1162.0	1433.5	1692.9	1768.0	1769.5	2385.7	2551.1	2891.4	2738.3	2950.2
헝가리	-	-	-	-	-	-	1498.3	1663.7	1761.3	1797.1
아이슬란드	3430.6	4586.3	6348.7	7532.3	6942.5	7739.5	8260.2	8587.7	7213.7	7241.2
아일랜드	2019.5	2785.3	3305.7	3817.6	3635.0	4516.8	4615.1	5192.4	4840.4	5426.2
이탈리아	2589.6	3836.3	4839.6	5437.2	5811.4	7554.0	8051.3	9036.9	7560.9	7414.2
일본	3110.5	4697.8	5953.5	7263.8	7282.5	7313.9	8117.2	8300.1	9409.0	10009.7
한국	387.3	432.0	548.4	731.1	940.1	1163.6	1318.0	1395.0	1556.0	1835.6
룩셈부르크	4884.7	6734.5	8373.5	9054.5	9336.7	11829.2	12107.9	13565.3	14535.9	15969.9
멕시코	450.8	295.6	333.9	386.4	478.3	559.9	641.1	744.1	811.9	811.9
네덜란드	3902.3	5505.3	7042.3	7470.6	6910.1	8461.1	9088.4	9919.4	9634.7	9814.1
뉴질랜드	2299.4	2925.1	4035.5	4745.0	4909.9	4805.5	4337.1	4169.6	4505.6	5292.9
노르웨이	6594.8	8241.4	9427.8	10031.8	9649.5	11368.7	11543.3	12067.8	10809.7	11711.2
폴란드	-	-	-	-	-	-	744.2	840.7	949.2	1038.8
포르투갈	647.1	975.9	1145.5	1434.8	1587.5	2086.1	2465.1	3181.4	2670.3	2872.2
슬로바키아	-	-	-	-	-	-	-	-	-	-
스페인	1231.8	1818.6	2444.7	2892.1	3365.1	4318.9	4677.4	5262.0	4244.1	4284.8
스웨덴	6033.6	8336.2	10642.6	11812.2	12484.5	14922.4	14911.0	14566.3	10681.0	11481.0
스위스	3928.5	5824.4	7164.1	7774.9	7234.8	9029.7	8953.8	9404.0	9263.4	10380.4
터키	206.4	258.1	312.0	301.1	364.5	536.9	553.2	611.1	687.5	479.7
영국	3033.9	3768.6	4456.1	5409.6	5360.4	6310.4	6350.7	6386.5	5543.1	6076.3
미국	4485.9	4686.5	5136.3	5444.2	5852.3	6286.3	6347.1	6584.3	6885.2	7331.7
OECD TOTAL	3217.0	4276.5	5279.0	5901.5	5956.0	7051.6	6729.0	7112.6	6488.0	6994.5
OECD AMERICA	3163.1	3251.6	3689.0	4070.3	4499.4	4800.4	4930.8	4911.5	4912.0	5039.6
OECD PACIFIC	2242.5	2857.9	3624.9	4402.3	4603.7	4644.9	4704.9	4676.3	5053.7	5669.7
OECD EUROPE	3430.7	4736.9	5878.3	6506.2	6470.7	7913.8	7371.4	7891.1	6963.7	7502.0
EUROPEAN UNION (15)	3401.6	4739.4	5895.7	6531.9	6583.4	8112.5	8216.4	8835.8	8070.9	8716.9
EUROPEAN UNION (19)	3401.6	4739.4	5895.7	6531.9	6583.4	8112.5	7381.7	7943.6	6957.0	7512.9

〈OECD 국가의 1인당 조세부담금〉의 계속

(단위: 달러)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호주	6079.3	6823.4	6725.4	6083.9	6669.9	6448.9	5772.8	6549.0	8342.8	-
오스트리아	12391.1	12588.0	11492.0	11764.9	11612.3	10315.5	10667.8	11209.7	13546.5	15329.0
벨기에	12232.6	11944.9	10923.6	11326.7	11226.0	10177.1	10118.9	10979.8	13319.5	15412.5
캐나다	7208.1	7539.8	7914.7	7592.8	8105.0	8562.2	8037.6	8139.8	9338.8	-
체코	2006.7	2162.0	2014.7	2095.9	2097.9	1950.4	2155.9	2678.8	3343.8	3943.9
덴마크	17071.4	17313.2	15850.2	16210.4	16428.9	14851.4	14560.1	15514.8	18929.2	22157.8
핀란드	11689.8	11779.7	11093.0	11648.5	11584.3	11110.4	10727.8	11614.7	13896.6	15759.3
프랑스	11339.5	11648.0	10560.2	10837.3	10904.9	9708.5	9642.6	10291.0	12556.8	14386.4
독일	11497.4	10874.1	9530.0	9700.3	9690.6	8598.5	8275.1	8667.8	10509.4	11509.4
그리스	3576.8	4663.6	3825.2	4036.2	4256.4	3967.4	3915.4	4506.2	5612.1	-
헝가리	1833.0	1783.4	1734.6	1778.7	1834.4	1783.8	1986.2	2481.3	3122.6	3737.4
아이슬란드	8186.0	8804.9	8826.7	10729.7	11981.7	11766.7	10059.2	11180.4	14290.9	17514.0
아일랜드	6049.5	6624.1	7044.0	7433.5	8115.7	8034.0	8000.8	8799.5	11318.8	13512.7
이탈리아	7884.3	9179.5	8958.2	8823.1	8860.9	8034.4	8075.4	8704.1	10889.0	-
일본	11284.1	9958.8	9135.9	8144.9	9103.3	9947.9	8692.8	8020.7	8577.6	-
한국	2229.1	2455.6	2356.4	1571.2	2053.9	2564.8	2450.2	2802.6	3221.2	3481.8
룩셈부르크	18686.8	18594.4	17294.0	17880.4	18806.2	18133.8	18160.5	19886.3	24785.2	-
멕시코	528.8	603.0	744.9	728.0	857.2	1087.1	1166.5	1155.5	1184.2	-
네덜란드	11254.9	11021.5	10122.2	10028.1	10441.6	9591.9	9511.2	10170.2	12248.0	-
뉴질랜드	6142.4	6298.8	6180.8	4882.6	5087.2	4666.9	4459.9	5304.6	7032.6	8594.9
노르웨이	13966.9	14933.2	14909.4	14463.1	15225.2	16065.7	16343.7	18352.3	20978.7	24434.8
폴란드	1307.1	1466.1	1432.2	1546.6	1405.3	1412.3	1671.2	1737.6	1874.6	-
포르투갈	3590.2	3876.2	3630.3	3876.6	4068.0	3789.4	3794.2	4257.7	5230.6	-
슬로바키아	-	-	-	1575.6	1359.5	1288.7	1271.0	1488.9	1885.6	2352.0
스페인	4849.5	5013.5	4746.5	5019.1	5279.4	5017.4	5127.0	5778.6	7311.2	8572.7
스웨덴	13646.5	15437.4	14446.9	14603.4	14866.6	14564.5	12786.2	13556.3	17024.0	19511.6
스위스	12367.1	12073.1	10288.2	10907.2	10739.4	10401.0	10314.5	11326.8	12823.1	-
터키	619.7	735.7	830.1	877.4	878.3	954.6	745.7	822.1	1110.7	1306.3
영국	6848.7	7103.0	8016.4	8868.7	9154.3	9164.2	9062.0	9403.8	10735.2	-
미국	7671.5	8142.9	8682.8	9210.5	9696.0	10335.2	10183.7	9524.3	9624.1	-
OECD TOTAL	8070.3	8325.6	7907.2	7808.2	8079.7	7809.8	7591.2	8163.5	9822.1	-
OECD AMERICA	5136.1	5428.6	5780.8	5843.8	6219.4	6661.5	6462.6	6273.2	6715.7	-
OECD PACIFIC	6433.7	6384.2	6099.6	5170.7	5728.6	5907.1	5343.9	5669.2	6793.6	-
OECD EUROPE	8768.0	9073.6	8525.9	8523.1	8731.2	8290.5	8129.2	8843.9	10754.0	-
EUROPEAN UNION (15)	10173.9	10510.7	9835.5	10137.1	10353.1	9670.6	9495.0	10222.7	12527.5	-
EUROPEAN UNION (19)	8764.2	9059.6	8484.1	8371.3	8526.0	7973.3	7868.9	8511.9	10428.4	-

이런 의견 저런 생각

본란에서는 조세정책에 대한 여론을 파악하고 정책제언을 수렴하기 위하여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 등에 실린 조세·재정 관련 내용을 발췌, 소개하고 있으며 『재정포럼』 독자께서 보내주시는 의견도 게재하고 있습니다. 선정된 내용은 한국 조세연구원의 견해와는 무관합니다.

- 편집자 주 -

경제 위기관리 능력 절실하다

북한의 핵실험이 일으킨 파장은 하루 하루 피를 말리듯 정치 사회는 물론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 어제는 일본 NHK가 제2차 핵실험 징후가 있다는 오보를 해 주식시장이 큰 폭 하락으로 시작하는 등 금융시장에 소동이 벌어졌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다행이지만 이 같은 예측불허의 상황은 앞으로도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다.

핵실험 강행으로 유엔 안보리의 제재 조치는 시간문제일 뿐이고 미국 일본 등의 강경 기조에 북한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한국 사회는 풍랑 위의 조각배처럼 흔들리지 않을 수 없게 돼 있다. 모든 게 불확실성이 빚어내는 불행한 현상이다.

당초 평온한 상태에서 우리는 내년도에 경제성장률 4.3~4.6% 달성이 가능하고 이에 따라 일자리 창출, 국제수지와 물가관리 등의 목표를 제시했다. 그런데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국내총생산(GDP)의 50%를 점하는 소비가 위축되고 부동산시

장도 얼어붙게 된다. 코리아 리스크(Korea risk)가 고조되면 증시에서 외국자본이 이탈해 주가가 하락하고 역(逆)자산효과가 발생함으로써 내수는 더 위축된다.

뿐만 아니라 금강산관광이나 개성공단사업에 차질이 발생하면 기업들은 잠재적 불안을 회피하려 국내 투자보다 해외 투자를 선호하게 될 것이므로 투자 증가는 바라기 어렵게 될 것이다. 결국 경제성장을 좌지우지하는 소비, 투자, 수출 3대 요소 가운데 양대 축이 무너지면 GDP 성장률이 3%대 혹은 2%대로 추락할 것으로 보는 민간 경제연구소마저 나오는 실정이다.

정부가 경제위기 관리에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기 바라는 것은 바로 이 같은 불상사를 최대한 막아보자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에 각별한 신경을 써주기 바란다.

첫째, 핵(核)위기 시나리오별 대응방안을 마련해 선제적으로 대응조치를 취해 달라는 것이다. 현재의 불확실성은 북한의 추가 핵실험 그리고 유엔 제재조치 수위 등으로 한국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나름의 대응

요령을 치밀하게 세우고 경제장관들로 하여금 챙기도록 해야 한다.

둘째, 유엔의 대북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최대한 배제하도록 외교력을 발휘해 달라는 주문이다.

셋째, 미국·일본과 공조의 틀을 확고하게 짜야 할 것이다. 경제전문가들은 특히 한·미간에 포용정책 등을 둘러싼 마찰음이 높아진다면 경제적 불확실성이 더욱 고조돼 외국자본 이탈을 재촉할 것을 우려한다. 정책 당국자들은 이 점에 특히 유념해주시기 바란다.

넷째, 경기부양이나 내수진작 방안 등이 필요하다면 실기(失期)하지 말고 규제완화로 투자와 소비를 늘릴 수 있다면 그런 방안을 찾아볼 것을 촉구한다. 삼성경제연구소는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이 3.3%로 떨어질 것이라며 소비 활성화 대책과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등을 권고하고 있다. 상황이 비상이니만큼 타성에 젖은 대중(대중)요법이 아닌 한층 기민한 위기관리 능력을 정부는 발휘해주길 당부한다.

〈매일경제 2006년 10월 11일자 '사설'〉

거시경제 궤도 벗어나는 일 없게 해야

우리 경제가 북한 핵실험이란 먹장구름을 만났다. 얼마나 큰 폭풍우를 몰고 올지 예측하기 어렵다. 세계 경제 성장세가 둔화하고, 국내 경기도 하강 조짐을 보이는 시기여서 더 걱정된다. 한국 경제가 탄실하게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다는 믿음을 나라 안팎에 심어줘야 할 때다.

금융시장이 '심리적 공황' 상태에 빠지지 않고 하루만에 안정세를 보인 건 다행스런 일이다. 북핵 문제에 대한 내성이 커진 탓도 있겠지만, 경제가 성숙해졌다는 증표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빠른 안정세가 불안으로 다가오기도 한다. 긴장 고삐를 늦출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핵실험 파장이 경제에 어떻게 투영될지 현재로서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상황 전개에 따라서는 대외 신인도 저하, 외국인 투자 감소와 자금 이탈, 국내 투자 및 소비심리 위축 등 실물경제까지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국면이다.

무엇보다 염려되는 건 외국인 직접투자 감소와 외국인 자금 이탈 가능성이 다. 경제에 가장 큰 적은 불확실성이라고도 한다. 북한 핵실험으로 드리워진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걷힐 때까지 이런 염려가 언제든 가시화할 수 있다. 외교적 노력과 별도로 한국이 돌발변수에도 거시경제를 잘 관리하고 있다는 믿음을 주는 게 중요하다. 정부도 그제 국무총리 주재로 긴급 경제상황 점검회의를 열

고 5개 분야 비상대책팀을 가동하는 등 나라 안팎의 경제심리를 안정시키는 데 힘쓰는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다. 그러나 차분한 대응과 심리를 다독이는 데 너무 무게를 둔 나머지 정책이 실기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 경제 파장이 가시화할 조짐이 보이면 과감한 시장 안정책을 펴서라도 거시경제 흐름이 뒤틀리지 않게 해야 할 터이다.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투자 활성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도 있다. 사태가 간단치 않은 만큼 원칙을 깨는 것이 아니라면 좀 파격적인 조처도 못 쓸 것 없다. 경기가 한번 궤도를 벗어나면 다잡기 어려운 만큼 '정책 타이밍'이 중요하다. 무디스 등 신용평가기관들은 사태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자세를 보였다. 물론 국제사회와 북한이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주요 변수이겠지만, 정부의 돌출변수 관리 능력도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다.

(한겨레신문 2006년 10월 10일자 '사설')

복지와 연구개발에 역점 둔 내년 예산안

내년 예산안 규모가 238조 5,000억 원으로 책정됐다. 올해보다 6.4% 늘어난 액수다. 새해 나라살림에 쓰이는 예산을 부문별로 보면 사회복지·보건분야가 올해보다 10.4% 늘어난 61조 8,000억 원, 교육분야가 7.4% 증가한 30조

9,000억 원, 국방(일반회계기준)분야에 9.7% 늘어난 24조 7,000억 원이다.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연구개발(R&D)예산은 10.5% 늘어난 9조 8,000억 원이 책정됐다.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내년 경제성장률이 6.7%, 실질성장률이 4.6%에 이를 것으로 전망해 이같이 책정했다"고 밝혔다. 또 "내년 예산은 미래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국민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이번 예산안 편성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새해 예산안은 몇 가지 면에서 보완해야 할 점이 없지 않다. 우선 양극화와 노령화에 따라 복지비 지출증대가 불가피한 것은 사실이지만 미래성장동력 확충에 대한 재정적 배려가 미흡하다. 정부는 미래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R&D예산 증가율을 두자릿수로 늘렸다는 설명이지만 절대 증가액에서는 1조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복지와 국방예산의 증가액이 8조원인 것과 대조적이다. 지난 수년 동안 설비와 기술에 대한 투자가 미흡한 탓에 고용여건이 악화되고 국가경쟁력이 갈수록 뒷걸음질치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생산적 부문으로 재정지출이 요망된다.

새해 경제전망을 너무 낙관해 살림규모를 늘려 잡은 측면도 없지 않다. 정부는 내년 우리 경제가 4.6% 실질성장을 이룰 것으로 예상해 예산을 짰다. 그러나 내년 국제경제가 순탄치 않을 것이고 특히 한국 경제전망에 대한 국내외 연구기관의 분석은 결코 밝지 않다. 수년째 적자국채를 발행해 국가부채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도 문제다.

국가부채는 올해 282조원에서 내년에는 300조원을 훌쩍 넘을 전망이다. 정부는 선진국들의 수준에 비해 아직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고 하지만 부채 증가속도가 빠르다는 점이 문제다. 정상적인 수입으로 살림을 꾸리기 어려워 빚을 내는 것을 타할 수는 없다. 그러나 갚을 능력을 감안하지 않고 자꾸 빚을 늘릴 경우 선진국처럼 재정적자 수렁에 빠질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새해 예산안 가운데 좀 더 줄일 수 있는 게 없는지 꼼꼼히 따져 알찬 살림을 꾸려야 한다.

(서울경제 2006년 9월 27일자 '사설')

내년 예산 국민 부담이 너무 크다

정부가 내년도 나라살림을 총 238조 5,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총지출 224조 1,000억원보다 6.4% 늘어난 규모다. 액수로는 14조 4,000억원이나 늘었다. 내년 예산에서 가장 큰 특징은 생산성 증가나 성장동력 확충과 무관한 복지 및 국방예산이 크게 늘어난 점이다. 사회복지·보건분야 예산이 10.4% 늘어난 61조 8,000억원, 국방 예산은 9.7% 늘어난 24조 7,000억원으로 올해보다 각각 5조 8,000억원과 2조 2,000억원이 늘어났다. 반면 경제 인프라를 확충할 수송·지역개발은 1.1% 줄었으며, 연구·개발(R&D) 분야는 비율로는 10.5% 늘었지만 그 액수는 9,000억원밖에 되지 않

았다.

이 같은 내년 정부 예산을 위해 정부는 근로소득세를 올해보다 13.0% 더 걷겠다고 한다. 더욱이 세금 걷는 것만으로도 부족하여 8조 7,000억원의 국채를 발행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내년도 국민 1인당 조세부담액은 올해 363만원에서 383만원으로 20만원 늘고, 특히 1인당 근로소득세 부담은 206만원이 된다. 그리고 국가채무도 302조 9,000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정부의 서비스는 나아지지 않고 국민의 부담만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우리나라 조세 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평균 조세부담률보다는 낮다고 하지만 세금과 연금, 눈에 보이지 않는 강제적인 준조세, 그리고 과다한 정부 규제에 따른 부담을 더 하면 사실상의 실질국민부담은 OECD 평균을 훨씬 웃돌 수도 있다.

지금 우리 경제가 장기 침체에 빠져 있고 국가경쟁력이 추락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은 물론 수년째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에도 못 미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순위가 지난해 19위에서 올해는 24위로 떨어진 사실에서도 이 점이 확인된다.

장기 침체에서 벗어나고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법은 이미 많은 국가의 역사적 경험으로부터 알려져 있다. 정부 지출을 줄이고 감세를 통해 작은 정부를 실현하며 민간부문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과거 영국과 미국은 물론, 10년간

의 장기 침체와 국가경쟁력 하락에서 벗어나 최근 승승장구하고 있는 일본 역시 그랬다. 또한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많이 거둬 복지를 책임지는 '큰 정부'의 전형이었던 스웨덴의 실패는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어딘지를 잘 말해 주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중장기 전략이라며 장밋빛 복지로 가득한 '비전 2030'을 내놓더니 분배 중시 정책에 따라 복지 예산이 늘었다. 또 어설픈 자주(自主) 타령으로 부담하지 않을 수도 있는 국방비가 엄청나게 늘었다. 이번 예산안은 국가의 경쟁력 제고와는 무관하게 이념에 사로잡혀 있는 이 정부의 성향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또한 이번 예산안에서 복지 지출을 지나치게 늘린 것은 내년 대선을 의식한 선심성 예산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국회는 심의 과정에서 이 점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대선을 의식한 선심성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가의 장래를 위해 민간부문에서 할 일을 정부가 대신하려고 하는 것들을 파악하여 그 부분에 대한 예산 역시 과감하게 삭감해야 할 것이다.

정부 예산은 한 번 잡히면 좀처럼 줄지 않는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가 판단하여 1년여밖에 남지 않은 이 정부에서 부득불 할 필요가 없는 사업은 다음 정부로 넘기는 것도 한 방법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국회가 해야 할 일은 국민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에 국회가 국민을 위해 제대

로 일해 주기를 기대한다.

안재욱(경희대 교수 · 경제학)
 〈문화일보 2006년 9월 29일 '포럼'〉

고령화 역풍탄 보고만 있을 건가

오늘은 제10회 노인의 날이다. 정부는 100세를 맞은 노인들에게 장수 지팡이를 선물하고 모범 노인 등에게 훈·포장을 준다. 65세 이상 노인은 10년 전보다 180만 2,000명 늘어나 올해 459만 7,000여 명이 됐다. 이는 전체 인구의 9.5%이며 10년 전에 비해 3.4%포인트나 늘었다.

노인은 늘고 출산율은 급락한 탓에 10년 전에 젊은이 12명이 노인 한 명을 부양했으나 지금은 7.6명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몇 년 내내 경제가 어려운 것도 노인 부양 부담 증가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노인의 날을 맞는 노인들은 사회의 반짝 관심이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우울하기만 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노인들의 삶은 빈궁하기 짝이 없다. 노인 부부의 가구 소득이 전체 평균가구의 3분의 1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소득원이 없다 보니 소득의 대부분은 자식 등에게서 받은 이전소득이고, 근로나 사업으로 번 돈은 극히 미미하다. 국민·공무원·경로연금 등 공적연금을 받는 노인은 31%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대다수가 노인이다.

고령화의 이러한 그림자는 시작 단계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까지가 소총이라면 앞으로는 메가톤급 폭탄이 다가올 것이다. 2009년부터 재직 연령대 인구(25~54세)가 감소하고 2016년에는 생산가능 인구(15~64세)가 줄기 시작한다. 일할 사람이 줄면서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고 투자와 저축이 줄며 연금과 의료비 부담은 급증할 것이다. 우리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빨라 2050년에는 노인 인구 비율이 세계 최고에 이른다.

그런데도 우리는 말로만 고령화 대책 마련을 외치고 있을 뿐이다. 가장 중요한 대책은 소득과 건강 보장, 노인 인력의 활용 등이다. 이 중 핵심 대책은 최대한 오래 근로 현장에 남도록 하는 것이다.

이의 대안이 임금피크제다. 현재 50여 곳의 기업이나 은행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진도가 그리 잘 나가지 않는다. 일본은 노인 인력 활용이라는 차원에서 이 제도를 시행했지만 우리는 외환위기 직후 구조조정의 대안으로 활용하거나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접근하다 보니 그런 것이다.

정년제도를 보완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이다.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들의 평균 정년은 2000년 57.2세에서 재작년 56.8세로 오히려 낮아지는 추세다. 직급별 호봉제를 고과승급제로 개선하거나 기업의 법정 퇴직금 부담을 줄여 정년을 연장하거나 재고용 기회를 넓혀야 한다.

노후 소득의 양대 축 중 하나인 국민연금을 조속히 개혁해야 고령사회에 대비할 수 있지만 정치권과 정부는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느라 고치는 시늉만 하고 있다. 퇴직연금을 도입한 지 1년이 다 돼 가지만 제도 미비로 인해 가입자가 이제 겨우 2%를 넘었을 정도다.

정부는 6월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을 내놨다가 재원(32조원) 조달 방안이 빠졌다는 비판을 받았고, 그 후론 일이 어찌 돼 가는지 감감무소식이다. 이 계획 중 적용 가능한 것을 추러내 실행 계획을 다시 짜야 한다. 65세 이상 노인의 고용보험 신규 가입을 허용하고, 70세까지 고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대책 마련에 전력하고 있는 일 본을 보라.

정부는 임금이 감액된 경우만 지원하는 방식의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제도를 조속히 개선하고 정년 연장, 정년 후 재고용 제도를 시행하는 기업에 장려금을 지원해야 한다. 기업들도 앞으로는 고령 인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일본 기업의 80% 가량이 임금피크제를 포함한 고령화 고용확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점을 눈여겨 봐야 한다.

〈중앙일보 2006년 10월 2일 '사설'〉

국민연금 운용위 개편, 공론화 시급하다

국민연금기금을 누가 어떻게 운용할 것이냐 하는 중요한 의제가 국민연금 개혁 논의 과정에서 사라지고 있다. 이 기

금은 지난 6월말 현재 국내총생산의 20%에 해당하는 170조원이 적립되어 2007년 정부의 일반회계 예산안 158조 원보다 더 큰 규모로 성장했다. 국민연금기금은 우리나라 채권 발행 총액의 18%에 해당되는 약 154조원을 투자하고 있고, 주식시장에서 큰손이 된 지도 오래다. 이 기금을 빼고 경제 운용을 논의하기 힘든 단계인 것이다.

그동안 비상설기구였던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하는 건 이미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 그러나 중요한 많은 부분들이 여전히 미해결로 남아 있다. 기금운용위를 어디에 둘지가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다. 지금까지 정부·여당은 복지부 소속을 선호하고,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독립된 위원회를 선호한다. 공적연금기금의 최대 위협은 '기금의 정치화'에서 오는 만큼 가능한 한 독립된 성격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운용위가 독립되더라도 기금관리기본법 등의 규정에 따라 전체 정부 재정의 틀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금의 투자 방향이 정부 재정운용과 엮박자간 날 가능성은 극히 적다.

위원회의 주요 구성원을 누구로 할 것이냐는 기금의 성격에 대한 인식 차이와 연결되어 있다. 수익률을 중시하면 다수의 투자전문가로 구성하는 게 타당하지만 성장잠재력을 높이려는 투자나 연금지급의 안정성을 중시하면 연금 가입자나 공익위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기금의 규모가 커질수록 국민 경제적 역할과 안정성 문제가 더 중요해지는 만큼, 투자전문가와 가입자,

공익위원들이 균형을 이루는 방식이 최선이다.

정부·여당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에는 기금운용위의 기금운용 의결 권한을 삭제하고 정부위원으로만 구성된 정책 협의회를 신설하는 방안이 들어 있다. 이 조항들은 사회적 합의에 따른 기금운용을 무력화하는 동시에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요인이 될 것이다. 정부는 소모적인 논란만 가져올 게 뻔한 이 조항을 고집하지 말아야 한다.

과거보다 기금 운용의 민주화와 전문성이 상당히 확보된 건 분명하다. 그러나 현재의 틀로 가두어 놓기에는 국민연금기금의 규모가 너무 크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운용위 개편을 두고 좀 더 진지한 토론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한겨레 2006년 10월 8일 '사설'〉

건강보험 적자, 효율성 극대화도 극복해야

건강보험 재정에 비상이 걸렸다. 4년 만에 2,0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가운데 내년에는 적자폭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여 올해 말 쌓아두게 될 1조원 가량의 적립금마저 모두 소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정부는 가장 손쉬운 적자 보전책인 보험료 인상도 당초 6.5%에서 3%로 인상률을 낮출 계획이다. 대통령 선거를 의식한 탓이다. 거기다 담뱃값 인상 가능성마저 불투명해 앞으로 건

강보험 재정이 의지할 곳이라고는 국고 지원금밖에 없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보험급여는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올해 건강보험 지급액이 사상 처음으로 2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특히 노인 가입자의 급여비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에서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우선순위를 철저히 따져보지도 않고 모든 환자에게 적용되는 식대나 1~3인실 병실료 등에 보험혜택을 주어 추가로 재정부담이 높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보장성을 낮추더라도 보험료 인상은 안 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국민들이 식대 등의 보험혜택에 찬성할 리가 없다. 보험급여율이 70%에 이르는 '감기 환자' 등에 대한 과잉진료도 그 폐해가 고스란히 건강보험 재정에 떠넘겨진다.

따라서 정부는 올해 말 건강보험료 인상을 결정하기에 앞서 불필요한 급여지출은 없는지, 공단운영의 낭비는 없는지 철저히 따져보는 관리혁신에 힘써야 할 것이다. 지난 2001년 이후 5년 동안 57.8%의 보험료 누적인상을 감수해야만 했던 국민들은 건강보험 혜택이 늘어나 되 보험재정의 운영 효율성도 동시에 높여주기를 고대하고 있다.

무엇보다 부유한 보험료 체납자는 없는지 쟁겨야 할 것이며 의료공급자의 과잉진료나 과잉청구를 줄이기 위한 진료비 심사도 강화돼야 할 것이다. 특히 철저하고도 사심 없는 조직진단을 통해 인

력낭비 요인은 없는지도 따져봐야 할 것이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4대 보험의 통합관리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서울경제 2006년 10월 15일 '사설')

1인당 조세부담액의 하향

지난달 27일 2007년 예산안이 발표되었다. 2007년 예산안에서 세입 측면의 특징은 세부담이나 세입 구성이 올해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세부담 정도를 측정하는 가장 일반적인 지표는 조세부담률(총조세 수입을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수치)이라 할 수 있는데 한국 조세부담률은 2006년에 20.7%에서 2007년에는 20.6%로 소폭 하락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즉 전반적인 세부담 정도는 올해와 크게 다르지 않거나 소폭 감소하리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내년에 세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생각을 조금만 정리해 보면 2007년 세부담과 세입 구성이 올해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리라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세부담이나 세입 구성이 크게 변화하려면 경제여건이 급격하게 변화하거나 또는 세부담을 크게 변화시키는 주요한 세계개혁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올해는 세부담을 급격하게 변

화시키는 세계개혁은 계획돼 있지 않다. 최근 세계개편은 주로 경제사회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미시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좀 더 합리적인 조세제도를 추구하는 것에 그 중점을 두었다.

내년에 세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것처럼 보는 견해는 주로 1인당 조세부담액이 증가한다는 논거에 기초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1인당 조세부담액이라는 것이 실제 조세부담의 변화를 이해하는데 과연 얼마나 의미있는 지표일까?

간단한 예를 보기로 하자. 1인당 소득이 1만달러고 조세부담이 2,000달러였는데 1인당 소득이 2만달러가 되면서 조세부담이 3,000달러가 된 것을 단순히 조세부담이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인가? 성장하는 경제에서는 조세제도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절대적인 조세부담액은 증가하게 되어 있다. 특히 한국과 같이 성장이 높은 국가에서 내년 1인당 조세부담액을 올해 조세부담액과 비교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

1인당 조세부담액이라는 지표는 실제 조세부담을 이해하는 데 몇 가지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우선 경제성장이나 물가상승으로 국민 소득이 증가하면서 조세부담 능력이 증가하는 측면을 도외시하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지 않고 1인당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강조하다 보면 마치 정부가 세율을 인상하여 국민에게 조세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오해를 유발할 소지가 많다.

둘째, 총조세납부액을 총인구로 나눈 평균개념인 1인당 세부담 지표는 국

민 개인이 납부하는 실제 조세부담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를 주지 못한다. 소득세는 현재 근로소득자 중 51%, 자영업자 중 48%가 세금을 납부하고 있지 않는데 1인당 세부담 지표로는 소득계층별로 실제로 납부하는 조세부담이 매우 크게 차이가 나는 현실을 보여 줄 수 없다.

한국조세연구원에서 최근 추정된 소득계층별 조세부담(법인세, 취득세, 등록세 등 일부 세목 제외)을 보면 최하위 10% 소득가구 조세부담은 연 72만원(총소득 대비 5.9%)에 불과한 반면 최상위 10% 소득가구는 13배가 넘는 959만원(총소득 대비 10.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도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납부하는 상황에서 단순히 전체 조세수입액을 인구로 나누어 계산한 1인당 조세부담액은 일반국민이 실제로 부담하는 세금을 과대평가할 염려가 있다.

이처럼 1인당 조세부담액이라는 지표가 많은 한계를 가지기 때문에 그보다는 조세부담률이라는 지표가 한 국가의 조세부담 정도를 더 잘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조세부담 국제비교에서도 1인당 조세부담이 아니라 조세부담률이라는 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적절한 조세부담 정도는 국민적 선택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증세 또는 감세에 대한 논쟁이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자연스러운 민주주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 사회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와 이해에 기초한 판단이 필요하다. 잘못된 정보가 국민들의 합리적인 판단을 오도하지 않도록 정확한 지표 설정과 해석이 필요하다.

최용선 (한국조세연구원장)

〈매일경제 2006년 10월 8일 '기고'〉

자영업자 세금추적 못한 부분 봉급자에 덤터기 악물

매달 1원 한푼의 세금도 원천징수당하는 셀러리맨이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숫자는 436만명이라는 게 공식 통계다.

이 자영업자의 절반은 매달 벌이가 42만 3,000원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이 돈으로 가정을 꾸리고 먹고 살수 있을까? 말이 안 되는데 이 믿기 어려운 수치는 국세청이 공식적으로 내놓은 통계다.

자영업자가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면세 대상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연 508만원이다. 월 42만 3,000원을 벌지 못하면 세금 고지서를 받지 않는다는 얘기가다.

나는 작년에 근로소득세와 주민세가 160만원이나 됐다. 무슨 세금을 이렇게 많이 떼가나 싶어 재작년과 비교하기 위해 계산기를 두들겨 봤더니 무려 45%나 늘어났다. 집 살 때 빌린 돈을 모두 갚은 뒤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등이 줄어들어 세금이 자동으로 뿔박질했다. 참

고로 작년에 내 연봉은 겨우 3.5% 올랐을 뿐이다.

직장인들 중 나처럼 유리알 봉투로 인해 세금을 원천징수당해 이런 불만을 갖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오죽했으면 한자 고사성어 중에 가렴주구라는 말이 있을까.

자영업자들의 세금추적은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그 부담을 전부 다 만만한 봉급생활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정부가 거두는 근로소득세의 93%는 연봉이 3,000만원을 넘는 봉급 생활자들의 주머니에서 나온다고 한다. 연봉이 4,000만원이면 더 내야 할 세금이 170만원에 이른다고 하는데 이때 세금부과 방식은 소득세율이 연봉에 따라 4구간으로 나뉘 해당 구간을 벗어날 때마다 세율이 9%포인트씩 가산되는 형태라고 한다.

하지만 미국이나 프랑스 같은 선진국들은 세율 구간이 6개라고 한다.

즉, 단박에 고율의 세금이 인상되는 것이 아니라 약간씩 오르는 형태로 세분화돼 있기 때문에 그만큼 봉급생활자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참고로 현행 4구간 방식의 세율 가산제도는 1996년에 만들어진 낮은 제도다. 따라서 세무당국은 봉급생활자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려면 세율가산 구간을 세분화 해줘야 할 것이다.

남민배 (광주 광산구)

〈문화일보 2006년 10월 11일 '여론마당'〉

임초 늘어난 한국 경제

험한 항해 길에 올라 솔한 시련을 잘 견뎌 이겨낸 울리시스지만 암초가 널린 물목이 겁났다. 뱃사람의 낚을 빼앗아 난파시키려는 못된 요정 사이렌의 노래 소리 유희를 이겨내기 어려워 보였기 때문이다. 선원들에게 자기 몸을 배 한 가운데 뜻에 단단히 밧줄로 결박하도록 했다. 사이렌의 노래가 유희적이더라도 암초 쪽으로 배를 몰고 가지 않도록 미리 단속하기 위함이었다.

한국경제호의 항해는 어떠한가? 근년 경제성장실적이 달성 가능한 잠재수준을 밑돌고 있다. 왜 이렇는가? 해외시장 사정이 나쁜 탓으로, 자원부족과 높은 국제원자재 가격 탓으로 핑계될 수 없다. 자원 부족은 지난날 권위주의정부에서도 겪었지만 1차, 2차 세계적 원유파동을 극복하면서도 고도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다. 근래 원유, 구리 등 원자재가 격 폭등은 분명 악재이지만 경쟁국가들도 모두 공통적으로 당면한 문제이지 유독 한국경제만 겪는 게 아니다.

경제의 큰 어려움은 국내에서 조성되고 있다. 바다 물밑에 널려 있는 암초가 움직여와서가 아니라 배가 다가가 난파하기 때문에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는 것이 울리시스 신화의 가르침이다. 요즘 한국은 스스로 암초에 다가가고 있다.

작은 예 하나를 들면 공기업의 민영화 문제이다. 국책금융기관들의 고삐 풀린 예산집행이 세인의 지탄을 받고 있다. 이 틈에 재경부가 슬쩍 우리금융지

주의 민영화 계획을 접을 속셈을 드러냈다. 외환은행 매각과정에 있는 먼지, 없는 먼지 모두 털겠다는 사직당국의 경직된 수사에 시달려 온 관계당국의 고충은 심분 이해된다. 그렇다고 향후 우리은행, 기업은행 민영화와 산업은행 구조조정을 아예 백지화하겠다는 발상은 잘못된 것이다. 그 경우 모든 은행들은 국책기관들과의 불평등 경쟁에 시달리게 될 것이고 결국 민간은행들조차 국책기관 시늉을 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다. 체신금융도 정부에서 떼어내 민영화 조치를 해야 시종 일관된 금융자율화를 이룩할 수 있다. 그래야 금융부실화로 빚어진 97년과 같은 위기를 사전 방지할 수 있다.

정부 스스로 압초를 만들고 있다. 대표사례는 부동산 정책에 있다. 몇 차례에 걸친 정부 부동산대책으로 얻은 것은 인기지역 주택공급을 위축시키는 한편 지역균형발전 등 명분으로 전국 각지에 살포한 수습조원의 자금 가운데 일부가 인기지역으로 환류되도록 물꼬를 터놓은 꼴이다. 이처럼 공급과 수요의 비대칭적 압력이 축적되면 불원 시장이 폭발할 우려가 있다. 종합부동산세 등 관련세의 인상은 요즘 전세가의 급등을 초래해 비주택소유의 서민층은 물론 중산층마저 살림살이가 위협받고 있다. 서민주거생활 안정의 목표를 스스로 역행하는 조치가 서민의 이름으로 시행되고 있다.

경제의 엔진은 어디인가? 예전처럼 정부가 아니다. 기업, 그것도 '참여정부'의 미운털 박힌 대기업의 몫이 크다. 해외에서는 삼성, 현대, LG, 포스코 등이

나라의 얼굴이다. 그러나 기업인들은 조그만 비리혐의가 있어도 출국금지 조치가 예사이다. 그러나 강성노조와 NGO들은 자유롭다. 노조의 불법시위 때 사직당국은 수수방관하고 있고, 최근 해외투자유치설명회가 개최된 현지에 원정시위에 나선 약방에 감초 격인 인물들에게는 출국 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홍콩시위 원정 때는 쇠막대기도 휴대할 수 있도록 보안이 허술했다. 이만저만한 불공평이 아니다.

울리시스는 선상반란은 겪지 않았기에 암초 물목을 무사히 건널 수 있었다. 한·미 FTA협상의 경우 청와대 전직 및 측근인사들이 반기를 들고 있지만 정부는 통제 불능이다. 이래가지고서야 난파를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국민은 정부의 초심을 믿고 싶다. 서민이 마음 편하고 잘 살게 하겠다는 초심이 관철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일자리가 제대로 만들어지고 있는가? 아무리 좋은 뜻으로 착수했던 일도 결과가 나쁘면 그만이다.

김병주 (서강대 명예교수 · 경제학)
〈한국경제 2006년 9월 28일자 '다산칼럼'〉

재정포럼

2006년 10월호 통권 제124호

- 발행처 / 한국조세연구원
- 발행인 / 최용선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 편집위원장 / 최준욱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 편집위원 / 성명재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재진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김종면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정재호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김승래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김현숙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김현아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 편집간사 / 김용대 (한국조세연구원 주임연구위원)
- 편집·제작 / 최병규 (한국조세연구원 연구홍보팀장)
최윤용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원)

■ 월간 재정포럼

2006년 10월 16일 발행 / 제11권 제10호(통권 제124호)
1996년 5월 31일 등록 / 등록번호 라 10107 /
발행처 / 한국조세연구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79-6
TEL : 02)2186-2130 · 3 E-mail: pub@kipf.re.kr
Homepage: <http://www.kipf.re.kr>

■ 값 3,000원

- 월간 『재정포럼』에 실린 기사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 월간 『재정포럼』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 편집디자인 / 선 디자인 02)2269-2234
- 인쇄 / 고려문화사 02)2277-1509

「재정포럼」 정기구독 신청 안내

■ 정기구독회원이 되시면

원하시는 곳에서 매달 책을 받아보시게 되며, 도중에 책값이 오르더라도 별도 부담이 없습니다.
우송료는 본원이 부담하며 1년 구독시 두달치의 책값이 절약됩니다.

■ 정기구독 신청방법

정기구독 신청은 우편·전화·FAX·E-mail을 이용하셔서 받아보실 분의 주소·이름·전화번호 및 구독기간을 정확히 알려 주십시오.

- TEL : (02)2186-2133
- FAX : (02)2186-2139
- E-mail : pub@kipf.re.kr
- 주소 : 138-774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79-6
한국조세연구원 연구홍보팀

■ 정기구독료

1년간 정기구독료는 30,000원입니다.
2~3년간 장기구독도 가능합니다.

■ 구독료 납부방법

- 지로이용 : 본원 소정의 지로용지나 은행 비치 지로용지(지로번호 6923437)를 이용하십시오.
- 온라인 입금 : 우리은행 가락중앙지점
· 계좌번호 : 441-05-000011
· 예금주 : 한국조세연구원